



**10 정부3.0에 기초한  
농식품 분야의 일하는 방식 개선**





## 10 정부3.0에 기초한 농식품 분야의 일하는 방식 개선



# 머 리 말

박근혜정부 출범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십 차례의 전문가 토론을 거쳐 박근혜농정의 5년간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란 농정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 소통, 배려의 농정”을 기반으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농식품정책의 특성, 행정환경의 변화, 농업·농촌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과 국가의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할 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는 농정비전과 농정목표를 달성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감·협업·창의·성과·현장농정을 지향하도록 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요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정책은 농촌공간, 농식품산업, 농업인, 농식품 기업인, 소비자 등 정책대상의 범위와 정책고객의 스펙트럼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특징이 있으며, 정책 분야별로 경제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정책고객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방화·고령화, 농업의 6차산업화, 귀농·귀촌의 증가 등은 농업·농촌의 경제·사회 구조를 점점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농식품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기대치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이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고품질의 농식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오히려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개방농정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20여년간 3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업·농촌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는 등으로 국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관련 공공기관 간 역할과 기능의 중복으로 정부 정책의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농가인구는 감소함에도 농식품 공직자 수는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농식품 공공기관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러한 농식품 분야의 행정환경의 변화, 정부3.0 및 공공부문 개혁 분위기, 세종시 이전 등의 새로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정에 대한 그동안의 해묵은 불신과 비정상을 일소하고 농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3.0에 기초하여 농식품분야의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시 구상했던 농정이 어디쯤 왔는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방향이 벗어나거나 미흡한 부분은 문제점을 짚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는 공유하고자 발간한 박근혜정부 농정 중간보고서인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에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박근혜정부 농정 중간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일하는 방식 개선’ 부분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룬 각론 책자로써 농식품 정책의 특징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할 이유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 과학농정, 민·관 협업, 규제정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일하는 방식 개선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농식품 행정수요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여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 공직자가 해야 할 과제를 재확인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정을 추진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향후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3.0과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팀장과 사무관이 집필하였으며, 정책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직자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식품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과의 공감대 속에서 신뢰받는 농식품 행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2016. 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임정빈**

# 목 차



## I. 농식품 분야, 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가? ..... 6

- 1. 농식품정책의 특징 ..... 8
- 2. 농식품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 10
- 3. 현실진단 ..... 12



## II. 농정분야의 일하는 방식 개선방향 ..... 18



## III. 일하는 방식 개선내용 및 성과 ..... 24

- 1. 농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 강화 ..... 26
- 2.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합리적 농정기반 구축 ..... 32
- 3. 민·관 협업을 통해 일 잘하는 유능한 농정 추진 ..... 44
- 4.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정비 ..... 71
- 5. 정책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101
- 6. 신명나고 보람 있는 일터 만들기 ..... 112



## IV. 향후 과제 ..... 116



## <부록> 박근혜정부 농정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21선 ..... 122



# I

## 농식품 분야, 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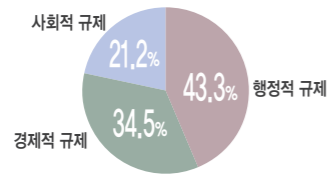
- 1 농식품정책의 특징
- 2 농식품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 3 현실진단



# 1 농식품정책의 특징

농식품정책은 경제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정책 부문 간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

- 효율성 제고, 혁신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과 공동체 유지·발전 및 복지 증진 등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서로 균형감을 가지고 조화롭게 추진될 필요
- 정책고객이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부문 간 또는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
  - ※ 농식품 규제 성격('14) : 행정적 규제 44.3%, 경제적 규제 34.5%, 사회적 규제 21.2%
  - ※ 갈등 사례 : 농지(식량안보 vs 산업부지), 식품(산업육성 vs 식품안전·위생)



〈그림 1〉 농식품 규제 성격별 비율



〈그림 2〉 정책부문 간 갈등사례

정책대상이 농촌공간, 농식품 산업, 농업인과 소비자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므로 농업·농촌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업이 필요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5~'19)'에는 18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①보건·복지, ②교육, ③정주생활기반, ④경제활동·일자리, ⑤문화·여가, ⑥환경·경관, ⑦안전 등 7개 부문에 대한 전략계획을 반영하여 추진 중
- 농식품 분야의 규제는 농업인 지원, 농산물 안전, 식품산업 육성, 농촌지역개발, 식량안보 등 규제적용 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타부처 규제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필요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 적은 인구를 다루고 있으며, 자원부족 등에 따라 농촌 주민들에 대한 정책 서비스 공급 및 접근성이 취약

※ 인구밀도(명/km<sup>2</sup>) : 농어촌(군) 100명, 중소도시 930명, 대도시 10,8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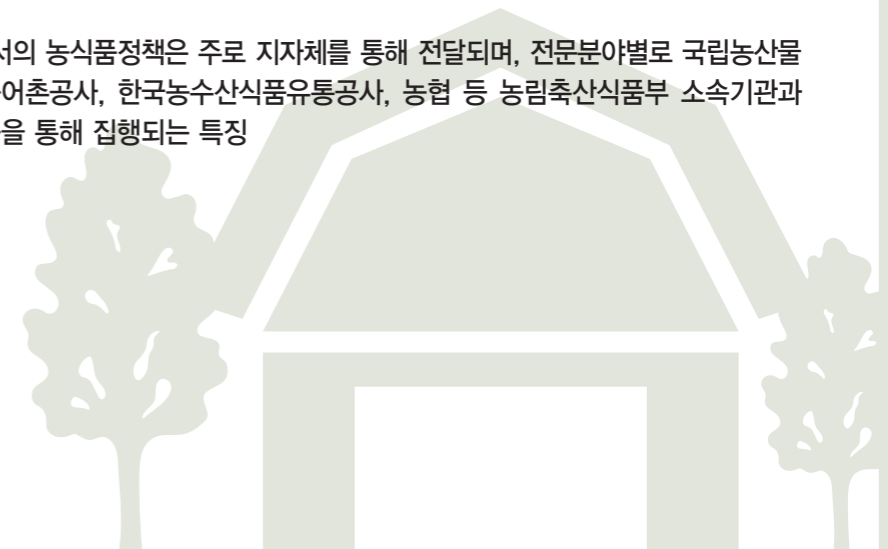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km<sup>2</sup>당 인구밀도 비교

농업·농촌의 비교역적 기능, 농산물 가격의 낮은 탄력성, 농촌의 과소화 등의 특성에 따라 타 분야에 비해 정부가 시장개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보다는 재정지원이 중요한 정책 수단

※ 도시 및 타 산업 부문의 정책은 농업·농촌 부문의 정책과는 달리 난개발 방지, 공정경쟁 등을 위한 규칙과 규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추진

농업·농촌 현장에서의 농식품정책은 주로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며, 전문분야별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과 농식품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집행되는 특징



## 2 농식품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개방화·고령화, 농업의 6차산업화,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농업·농촌의 경제·사회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됨에 따른 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 농업인과 소비자 등 국민의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다양해지는 추세 등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및 추진 필요

- 개방화, 농업인프라 확충 및 농업기술 발전, 국민의 식생활 패턴 변화 등에 따른 품목별 농업생산 및 소비여건의 변화, 국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이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수요 증가
- 농업관련 평균적 데이터에 기초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농정으로는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과 농가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농정으로 전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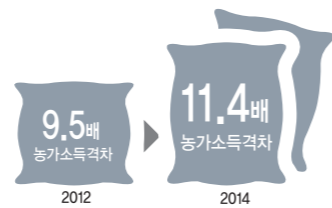
- 농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업계 내부에서의 농-농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며,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해 부처 및 기관 간 협업 강화 필요

※ 소득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격차 : ('12) 9.5배 → ('14)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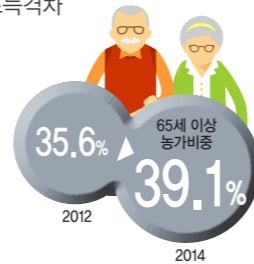
※ 65세 이상 농가비중 : ('12) 35.6% → ('14) 39.1

- 급증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를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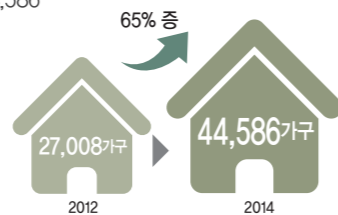
※ 귀농·귀촌 가구수 : ('12) 27,008가구 → ('14) 44,586



〈그림 4〉 소득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격차



〈그림 5〉 65세 이상 농가 비중



〈그림 6〉 귀농·귀촌 가구수

-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소셜미디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부와 국민 간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쌍방향 소통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및 생활패턴의 변화, 농업과 ICT·B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와 식품시장의 빠른 성장세 등을 우리 농업·농촌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해서는 농업분야에서 부족한 기술·자본·전문인력 등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새로운 직업과 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및 수출 네트워크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략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계개발 및 구축, 법적·제도적·행정적 뒷받침 강화 필요
  - ※ (새로운 직업 예) 식물공장업, 정밀농업기술자, 반려동물관리사, 동물장묘업, 동물복제업, 곤충식품업, 농업재해보험사, 농촌지역개발 컨설팅, 산림치유지도사 등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지역발전 전략계획 수립·추진 역량 강화 필요
- 남북 농업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국제사회에서 우리농업의 위상 강화, 국제 곡물 수급 불안에 대비한 안정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국제 농업협력 강화 등 글로벌 농정 확대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이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기관 간 소통·협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세종), 한국농수산대학(전북 전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상 전남 나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종자원·농림축산검역본부(이상 경북 김천) 등

# 3 현실진단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개방농정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20여년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투융자를 추진하였으나 농업·농촌의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 확대

-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42조원('92~'98), 김대중 정부 45조원('99~'03),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119조원('04~'13) 등 3차례에 걸친 대규모 투융자 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규모는 증가 추세

〈표 1〉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예산규모(2012~2016)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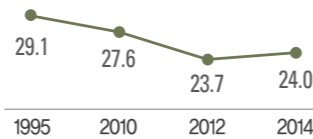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가전체(A) (전년대비 증가율)	3,254,000 (5.3)	3,420,000 (5.1)	3,558,000 (4.0)	3,754,000 (5.5)	3,864,000 (2.9)
농림축산식품부(B) (전년대비 증가율)	136,778 (3.7) *수신분야제외	135,268 (△1.1)	136,371 (0.8)	140,431 (3.0)	143,681 (2.3)
국가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 (B/A)	4.2	4.0	3.8	3.7	3.7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금액에는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은 미 포함

-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규모화 진전 등 농업구조조정에 일정수준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농산물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은 하락한 반면, 투입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되었으며, 젊은 층 위주의 이농현상으로 농가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도 심화

- '90년대 이후 곡물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업 비중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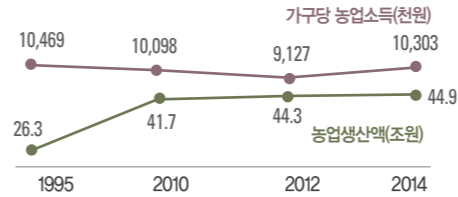
※ 곡물자급률 : ('95) 29.1% → ('10) 27.6 → ('12) 23.7 → ('14) 24.0  
 ※ 국내총생산 대비 농림업 비중 : ('95) 5.6% → ('10) 2.2 → ('12) 2.2 → ('14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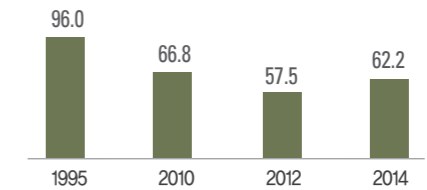
〈그림 8〉 국내총생산 대비 농림업 비중, %

- 농업생산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에 따른 농가 수취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격차도 확대

※ 농업생산액 : ('95) 26.3조원 → ('10) 41.7 → ('12) 44.3 → ('14) 44.9  
 ※ 가구당 농업소득 : ('95) 10,469천원 → ('10) 10,098 → ('12) 9,127 → ('14) 10,303  
 ※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중 : ('95) 96.0% → ('10) 66.8 → ('12) 57.5 → ('14) 62.2



〈그림 9〉 농업생산액 및 가구당 농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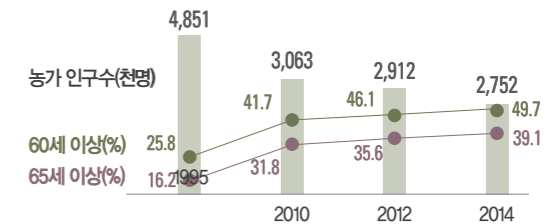
〈그림 10〉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중, %

- 산업고도화, 도시화 과정에서 젊은 층 위주의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가 감소되고,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6.5세('14)로 심각한 고령화가 진전

※ 농가인구수 : ('95) 4,851천명 → ('10) 3,063 → ('12) 2,912 → ('14) 2,752

※ 농가인구 대비 60세/65세 이상 비중 :  
 ('95) 25.8% / 16.2% → ('10) 41.7 / 31.8 → ('12) 46.1 / 35.6 → ('14) 49.7 / 39.1

※ UN의 고령사회 분류 :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65세 인구 7% 이상 (고령사회, aged society) 14% 이상 (초고령사회, post-aged society) 20% 이상



〈그림 11〉 농가인구 수 및 농가인구 대비 60세·65세 이상 비중

- 면세유 부정사용, 농업인과 시공업체 간 결탁에 의한 공사비 부풀리기 및 자부담 대납, 부적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판 직면

※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검·경 합동조사('14.1),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13.8), 부패척결추진단 실태점검('14.9),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점검 및 감사('14.4~5)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다수 적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4년에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지만,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확산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가 많다고 인식하는 도시민이 66.2%로 '09년 58.6%보다 7.6%p 상승하였고, 공익적 기능을 위한 세금 추가부담 찬성의견은 '09년 50.3%보다 0.6%p 소폭 상승한 50.9%
  - 그러나,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도시민은 ('09년) 37.0% → ('12년) 34.1% → ('14년) 29.5%로 지속 감소하는 등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가 낮아지는 실정
  - 농촌복지 관련 예산 확대에 '찬성한다'는 도시민이 54.2%로 '반대한다'는 응답(7.1%)에 비해 7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06년 75.4%, '09년 63.4%가 찬성한 것에 비해 크게 낮아진 모습

**중앙정부 중심의 평균적·획일적 농정 추진으로 정책대상이 불분명하며, 농정방향과 내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가 및 지역의 특성 등에 관한 기초통계를 분석하여 정교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기초통계를 확충하려는 노력은 부족
- 고령화 급진전, 6차산업화, 귀농·귀촌 증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고객과 정책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수요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 정책개발 및 행정서비스 부족
- 현안사항 발생 시마다 부분적이고 임시방편식의 대책 마련·추진으로 정책 간 일관성 부족 및 정책추진의 부작용 발생
  - ※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에 의한 임시방편적 수급조절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에 따라 농업인 및 유통업체 등의 불만제기

**농식품 유관기관 및 타부처,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 미흡**

-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등으로 연계·협력에 의한 시너지 제고에 한계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따라 정책 간 중복성,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비효율성 문제 야기
-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거버넌스 체계도 미흡

**농업과 ICT·B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로 6차산업화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이 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단편적이고 양적 위주의 규제개선으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

-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 지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
  - 기술의 종류와 범위가 광범위하고 빠른 발전 속도 등에 따라 공공기관 주도의 기술개발 및 지원은 한계
-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의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덩어리 규제 개선을 활성화 할 필요

**농업·농촌 분야 정책 및 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 미흡**

- 대부분 단위사업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사업별 성과지표와 상위 정책목표 간 전략적 연계성 부족,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체계 미흡
- 1년단위의 단발성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의 DB구축(만족도 조사 등) 소홀 등으로 장기간에 걸친 농식품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
-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를 위해서는 공급자(정부) 위주로 성과평가 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수요자(농업인 등) 중심의 성과평가를 강화할 필요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농식품 분야의 공직자 수는 일정수준 유지되고 있으며, 청렴도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중복 등으로 정부정책 전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농식품 공공기관의 개혁 필요성 제기

- ※ 농식품 공직자수 : ('12) 3,204명(수산인력 제외) → ('13) 3,209 → ('14) 3,235 → ('15) 3,239  
 - '12년 대비 '15년 공직자수 증가율 : 농림축산식품부(1.0% 증), 국가전체(2.6% 증)
- ※ 종합청렴도(10점 기준) : ('12) 7.90점 → ('13) 7.88 → ('14) 7.89 → ('15) 7.5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직불제의 종류에 따라 역할 분담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농가는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 서로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 초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발농업직불제(동계작물 제외),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 한국농어촌공사 : 쌀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발농업직불제(동계작물) 등
- 쌀 과잉생산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여전히 쌀 중심의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도 공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
- 농협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일정수준 성과가 있었으나 농협경제지주가 경제사업 수행을 위한 법·세무적 제약사항이 있었고, 중앙회 중심의 사업구조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선조합의 개선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정부는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중앙회의 경제·신용사업을 각각 분리(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하여 경제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농협법 개정·공포('11.3)
- 공공기관들이 기관의 고유 핵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원 부서에 과도한 인력 배치, 복리후생비 과다지급 등의 방만경영과 절차를 무시한 직원채용, 승진시험 비리 등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비판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등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기에는 한계

- 국회대응 등을 위해 장·차관, 실·국장 등의 서울출장이 잦음에 따라 과장 및 사무관 등 실무자도 결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서울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등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및 피로도 가중
- 다수의 농식품 유관기관이 분산되어 이전됨에 따라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이 미흡하고, 직원들 간 일과 후 소통 및 새로운 아이디어 교환 등을 위한 기회도 크게 줄어들어 농식품 정책 개발에도 불리

농업·농촌 부분의 행정수요 변화, 정부3.0 및 공공부문 개혁 분위기, 세종시 이전 등의 새로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정에 대한 그동안의 해묵은 불신과 비정상성을 일소하고 농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할 필요

**정부 3.0이란 ?**

- ◆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존의 정부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정부3.0을 추진중
- ◆ 정부3.0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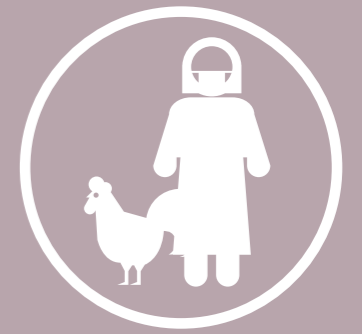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표 2〉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방식	관 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서비스제공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맞춤형 제공
운영수단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 II

농정분야의  
일하는 방식 개선방향



### 농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소통과 공감 체계 구축

국민의 참여속에서 농업·농촌정책 수립 및 농정현안 문제 대처 등을 위해 각 계 각 층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13.4.22~)

- 위원회는 생산자·식품·소비자단체, 언론, 일반국민, 학계, 연구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67명으로 구성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 설치(12개 소위원회)
  - ※ 6개 분과위원회 : 행복농촌분과, 희망농업분과, 스마트농정분과, 신뢰받는 식품·소비자분과, 국민사랑 축산분과, 특별분과(유통포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생산자·소비자·유통인·학계 전문가 등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신뢰와 원칙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수급관리 하는 체계 구축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운영
- 정부주도의 인위적 농산물 수급관리 자제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현장농정 강화

- ‘이동필의 1234’ 등 장관의 현장방문 활성화
  - ※ 이동필의 1234 : 한 달(1)에 두 번(2)이상 현장을 방문, 세 시간(3)이상 사람(4)들을 만나 소통한다는 상징성과 어린아이들이 1234를 처음 배우 듯 기본에 충실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한 단계씩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페이스북 등 SNS, 농정소통시스템(PIMS), 대학생을 활용한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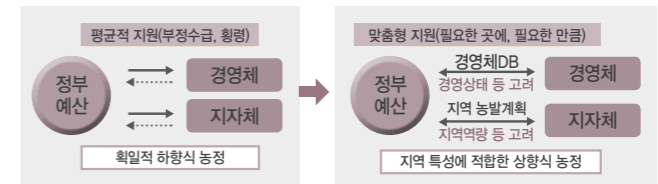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업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촉진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농정, 국민이 사랑하는 농정 추진을 위해 국민들에 대한 농업·농촌 가치 체감 기회 확대

- 도시농업 활성화, 도·농교류 활성화, 영양·식생활 교육실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한 소통 강화, 국민농업현장 제정·선포 등

### 지역과 농가의 유형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지역과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전략계획 마련을 위해 신규통계 개발 및 기초통계를 보완하고, 농업경영체 DB구축 등을 통해 과학적·합리적 농정전략 마련 기반 구축

- 평균적 데이터에 의한 정책개발 및 추진의 한계를 극복
-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건변화 상황을 분석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맞춤형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 제고



〈그림 12〉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농정 추진방향

농업경영체의 체질강화를 위해 농가연령, 농업규모, 농업경영 형태 등을 고려한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전략마련 및 추진

↑ 농가 연령 (65세)	영세 고령농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일반 고령농 · 자구적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등 강화
	중규모농 · 공동체 농업을 통한 규모화 · 전문화 유도 · 6차산업 참여 확대	대규모 전업농 · 규모화·전문화 · ICT 융복합 확산 · 농업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등을 통한 경영안정 강화
영세소농	· 6차산업 참여로 농외소득원 창출	·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확충

〈그림 13〉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주요내용

부문별로 개별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서 벗어나 부문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방식으로 개선

- 종합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의 통계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형성 및 활용 활성화
- 관련부처 및 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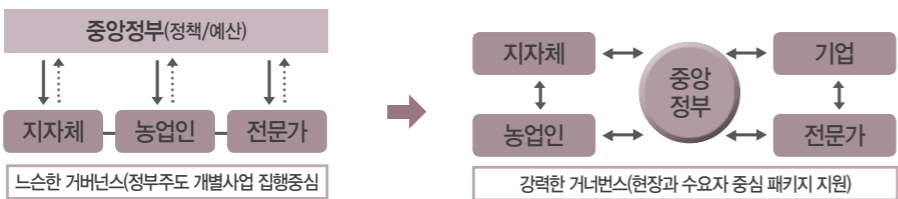


〈그림 14〉 관련부처·기관 등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 추진방향

### 재정집행관리 방식 개선 및 현장 규제개선 강화

전국단위의 평균적·획일적 농정에 의한 자율성·창의성 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부족자원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특화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중심의 예산편성 및 집행 강화

- 예산 및 농정조직을 지방중심의 농정에 맞게 개편
  - 단기적으로는 농림사업 및 예산편성·집행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
  -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및 예산을 지방농정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선
- 정책집행 과정에 농업인,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주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축
  - 지역에서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 상호협력 등을 통해 시너지 제고



〈그림 15〉 농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향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이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 경영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

재정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환류 강화

- 성과평가를 통해 그동안 농정추진 과정에서 쌓여진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농업·농촌 투융자사업 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설정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 지속 개선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의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농업인 등 정책고객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정책고객을 찾아가는 선제적 맞춤형의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로 개선

현장중심의 농정을 강화하고, ICT·SNS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안문제 발생시 적시에 대처하고 농업인 등의 편의성 제고

농식품 공공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민간의 농업·농촌 관련 경영활동에 활용하도록 지원

### 농식품 내부 행정시스템 개선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및 인력구조를 능동적으로 개편

- 농식품 공직자에 대한 변화관리 및 역량 교육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 농식품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미래 지향적으로 재조정하고 비정상적 관행 차단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의 지역별 분산 이전에 따른 협업 및 소통의 제약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에 기반한 행정업무 추진시스템 개발

농식품 공직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간 화합을 활성화하며,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공직문화 형성

# III

## 일하는 방식 개선내용 및 성과

- 1 농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 강화
- 2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합리적 농정기반 구축
- 3 민·관 협업을 통해 일 잘하는 유능한 농정 추진
- 4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정비
- 5 정책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6 신명나고 보람 있는 일터 만들기



# 1 농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 강화

## 주요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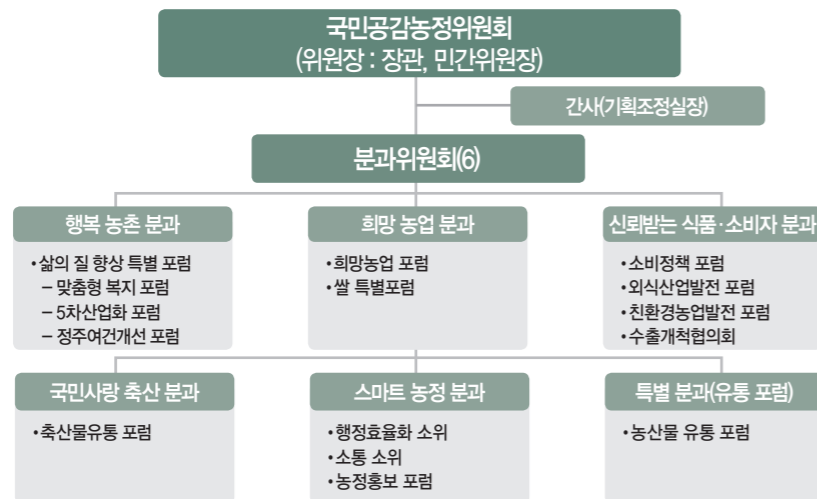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구성·운영

박근혜정부 농정과제 구체화 및 농업·농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구성·운영(‘13.4.22~)

- 생산자·식품·소비자단체, 언론, 일반국민, 학계, 연구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167명)
- 6개 분과위·12개 소위를 설치, 79회의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박근혜 정부 5년간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13.10)



〈그림 16〉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본위원회



〈그림 17〉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조직도

###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농·축산물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농·축산물 수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주도에서 탈피, 생산자·소비자 등의「참여와 합의」에 의한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 (농산물)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품목·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13.4월)·운영
  - TRQ·할당관세 등 임시처방적 수입 조치 자제
  - 가격 변동률이 큰 5개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대’ 설정 및 수급조절매뉴얼 등을 통해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 5개 품목 : (‘13.6) 배추·양파, (‘13.9) 무·건고추·마늘
- (축산물) 생산자, 유통·가공업계, 학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13.6)·운영
  - (‘13.6월) 양돈 수급과잉 시 민간 자율 모든 감축(13만두)
  - (‘14.2월) AI 발생 시 정부수매 대신 업계 자율비축(111만수)
  - (‘14.7월) 양돈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자율 가격인하

### 현장중심의 농정 강화

농업인의 농정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그림 18〉 가축분뇨처리장 현장방문

- ‘이동필의 1234’의 기본취지에 맞게 농정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정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 및 신뢰성 제고

- '14년 72개 시·군 111곳, '15년 66개 시·군 111곳 방문
  - ※ 이동거리 : 총 196,723Km 주행('13.3 취임시~'15.12월말까지)
  - ※ (이동필의 1234) 한 달(1)에 두 번(2)이상 현장을 방문, 세 시간(3) 이상 사람(4)들을 만나 소통한다는 상징성과 어린이들이 1234를 처음 배우 듯 기본에 충실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한 단계씩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채널을 활용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
  - 장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장관이 직접 농정을 설명하는 한편, 농업인 등이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쌍방향 소통 활성화
  - \* 장관 페이스북('13.3 개설) : 친구수 4,544명, 매주 20,000명에게 게시물 도달 (15.11 현재)
- 농정소통시스템(PIMS)을 운영하여 정책홍보 및 설문조사 실시
  - 농정에 관한 온라인 뉴스레터를 일반국민과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답장기능을 신설하여 국민의 농정 참여 활성화 유도
  - 대국민에게 정책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 및 시행에 반영
- 농식품업 현장과 생활속에서 농정에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 등을 활용한 블로그 운영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정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발굴



〈그림 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페이스북



〈그림 20〉 농정소통시스템(PIMS)



〈그림 21〉 대학생 등을 활용한 블로그

### 국민들에 대한 농업·농촌 가치의 체감 기회 제공 확대

농업인 뿐 아니라 도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 국민의 씬터, 삶터, 일터로서의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 회복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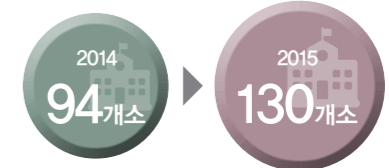
〈그림 22〉 국회 생생텃밭 조성

- 도시농업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15.3월)을 마련하여 국회·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전국적인 붐 조성

※ 식습관교육 시범학교 : ('14) 94개소 → ('15) 130

※ 목표 : '24년까지 도시민의 10% 수준 도시농업 참여 ('14년 : 108만명 → '24년 : 480)

- 식생활 교육 가정·학교·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확산하고, 친환경 농산물 신규 수요 발굴
  - ※ 지자체 조례 반영을 통해 100인 이상 단체 급식에 GAP농산물 우선 사용 유도 등



〈그림 23〉 식습관교육 시범학교

- 농업인의 날 '15년 농업인의 날 20주년을 맞이하여 '마음모아 희망농촌, 행복담아 미래농업'이란 주제 아래 과거 농업인 중심 행사에서 탈피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사로 추진

※ 농업인의 날은 WTO체제 출범에 따라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인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9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농업의 근간인 흙(土)자를 나누면 십(十)과 일(-)이 되는 점에 착안하여 11월11일로 제정

- 농업인의 날 사전행사로 농업인의 날 슬로건, 주제곡 및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열어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 달구지부터 첨단 농기계 퍼레이드를 통해 발전된 농업의 모습을 알리고,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집전 하에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발전을 염원하는 기원제 개최('15.10.28)
- 직거래장터와 특집음악회를 열어 농업인과 도시민이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체류관 및 홍보관을 운영('15.11.5~7) 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와 발전상 홍보



- **국민농업헌장**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의 토론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 및 국민 실천방안을 담은 국민농업헌장을 제정('15.11)하여 교육·문화·경제 등 분야별 국민대표가 헌장 선포('15.11.11, 농업인의 날 행사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국내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전시·체험·교육을 통한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추진(2016~2019)
  - 농업·농촌 발전사, 첨단농산업 및 식품산업의 모습, 어린이 직업체험, 귀농귀촌·도시농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 ※ 규모 : 부지면적 50천㎡, 건축연면적 18천㎡ 및 옥외 42천㎡
  - 총 2개 건물(본관, 어린이박물관) 및 온실로 구성하고, 옥외는 각종 체험시설(작은목장, 텃밭, 화훼체험 등), 정원 등 관람객 휴식·체험공간으로 구성
  - ※ 총사업비 : 1,073억원(부지 제외, 부지는 수원시로부터 무상임차)



〈그림 2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조감도

## 성과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박근혜정부 농정로드맵인 ‘2013~2017 농업·농촌 발전계획’ 마련 및 쌀 관세화 등 농정현안 해결

수매·할당관세 수입 등 일방적 수급대책이 아닌 협의에 기반한 자율·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 대폭 완화

- 5대 채소 가격변동률(%) : ('12) 14.0 → ('13) 12.9 → ('14) 9.8  
('12년 대비 4.8%p 감소)

※ 농산물은 저장성이 낮고, 기상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에 따라, '10년의 경우 배추가격이 하루만에 전일대비 54% 급등, 다음날은 34% 급락하는 사례가 발생된 바 있음



〈그림 25〉 5대 채소 가격변동률

‘이동필의 1234’를 통한 정책추진 및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방문 시 제기 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
  - ※ '14년에 총 129건을 건의 받아 60건 수용(46.5%), 기추진 및 검토 중 52건, 기타 17건
- 농정소통시스템(정책소식지) 개편을 통해 정책고객을 일반국민과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맞춤 제작, 답장 기능을 활용한 정책 제언 메뉴 신설 등 쌍방향 소통 강화
  - ※ 농정소통시스템('13.9개설) 정책고객 : ('13) 6,281명 → ('15.11) 36,600(30,319명 증)

### 소통 노력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평가

- ※ 「2015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마케팅상 수상(한국블로그산업협회 주관)
- ※ 「201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수상(한국사보협회 주관)

# 2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합리적 농정기반 구축

## 주요 추진내용

### 농업경영체 DB 및 스마트 팜 맵 구축을 통한 과학적 행정 기반 구축

####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경영체 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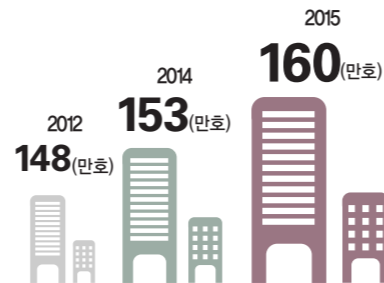
농업경영체의 농지면적, 재배작목, 경영형태, 보조금 지원 등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기초정보를 DB화하여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기반 구축

- 기초정보 DB구축 항목 확대 : ('12) 60개 항목 → ('13)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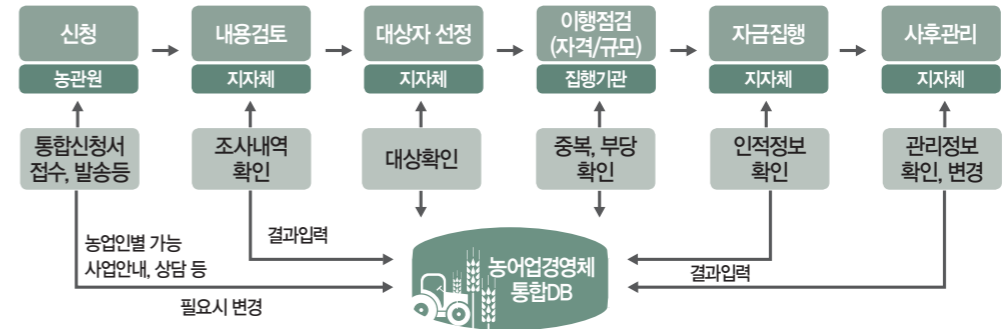
〈표 3〉 농업경영체 DB 구축방향

구 분	2012	2013~2015	2016~
목적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	스마트농정 기반구축	스마트농정 고도화
주요 내용	농가단위 소득중심 조사 (60개 항목)	농지, 소득, 유통 등 농업경영 전반 조사 (93개 항목)	사업연계를 통한 경영체 다층 관리 (102개 사업)
단 계	등록 개시	기반 구축	연계·활용

- '15년까지 160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기초정보 DB구축 완료
  - ('09) 115만호 → ('11) 140 → ('12) 148 → ('14) 153 → ('15) 160
- 직불금 지원과 연계하여 농업경영체 DB를 관리함으로써 DB의 현행화와 편의성 등을 도모하여 정보의 신뢰성 제고



〈그림 26〉 농업경영체에 대한 기초정보 DB구축 완료



〈그림 27〉 직불금 집행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체계

경영체 DB와 관계부처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경영체DB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업인 편의 증진 및 정책서비스 만족도 제고

- 맞벌이 부부 증명, 연금·건강보험 대상자 확인 등 농업인 자격 증명대체
- 외국인 고용쿼터, 면세유, 유기질 비료 등 배정시 영농규모 활용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 (법무부) 국내거주 사실 증명, (국토교통부) 농지조사 정보(지번, 지목, 소유자), (국세청) 소득정보 등 19개 기관 32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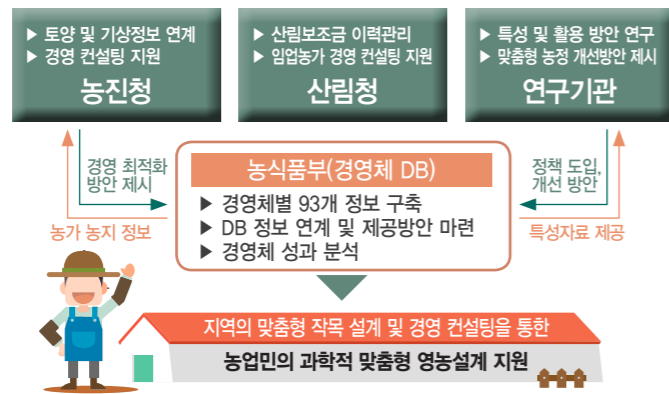
농업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로 농업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연간 70만여명(연금 34만, 건강 36만)의 농업인 편의 증진으로 4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 효과

양청·연구기관과 협업을 강화, 경영체DB를 이용한 맞춤형 농정 확대

- 농촌진흥청 토양·기상정보와 연계하여 기상재해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최적 재배작물 설계로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 지원

- 산림청 경영체 DB를 연계하여 산림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 및 임업인 등록제도를 구축,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 KREI 등 연구기관 농정 설계, 개선 등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통해 경영체·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 연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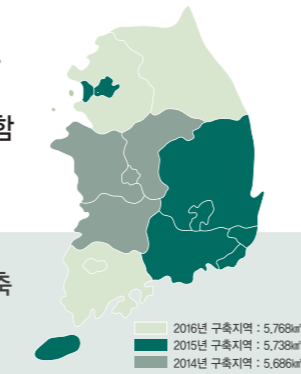


〈그림 28〉 농업경영체 DB와 관련 시스템의 연계 구축 및 활용방안

###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경지 전자지도 '스마트 팜 맵' 구축

전국 농경지를 전자지도(digital map)화 하고,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스마트농정 추진을 지원

- '14년 3개도(충남, 충북, 전북 및 대전) 및 접경지역 등 총 5,686km<sup>2</sup>를 구축
- '15년 3개도(경남, 경북, 제주) 및 3개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등 5,738km<sup>2</sup>를 추가 구축
- '16년 전국 구축 완료 예정



〈그림 29〉 전자지도 구축계획

- 항공영상 자료와 위성영상 자료(아리랑 2호 및 아리랑 3호)를 종합하여 농경지에 대한 '스마트 팜 맵' 제작
- '스마트 팜 맵'의 농경지 지도에 경영체 DB 등 자료를 연계하여 과학적인 농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경영체DB의 재배작목, 직불금 수령정보, 재해보험 가입정보 등 연계
  - ※ 농지와 연계된 각 종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됨에 따라 정책 기획-집행-관리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농정계획 수립 및 추진 가능

### 구축된 '스마트 팜 맵' 정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민간에도 공개

- 유통업체(대형마트 등)는 산지수집정보로 활용하여 유통비용 절감 가능, 종자·비료·농약 회사 등은 제품 판매 전략수립에 활용 가능

〈표 4〉 분야별 '스마트 팜 맵' 활용 예시

분 야	'스마트 팜 맵' 활용 예시
경영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팜 맵에 등록제 자료를 입력·관리하여 현장관리 해소</li> <li>▪ 현장-팜 맵-항공영상 일치로 현장검증 용이</li> </ul>
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상 지목·면적 → 실제 지목·면적 대상 직불제 운영가능</li> <li>▪ 스마트 팜 맵에 입력된 경영체등록정보(필지별 재배면적)를 바탕으로 정확한 직불금 산정·지급</li> </ul>
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필지별 피해면적, 요율, 보험금 산정·입력·관리 가능</li> <li>▪ 스마트 팜 맵을 기반으로 재해보험 통계 구축</li> </ul>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팜 맵과 통계, 행정자료를 종합 연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스마트 농정 지원</li> </ul>
경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농지 자원조사, 영농여건불리농지 파악 용이</li> </ul>
정밀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필지경계 GIS로 GPS기반 정밀농업 실현</li> <li>▪ 토양전자지도 등과 연계 적지적작 가능</li> </ul>
기후변화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변화 파악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통계 산출 지원</li> </ul>

### 농경지 토양정보 시스템인 '휴토람' 정보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초정밀 토양전자지도(1:5,000)에 농경지의 보전과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되는 토양화학성, 농업용수 수질, 토양미생물, 식생, 정밀농업기후도 등 논·밭의 토양특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활용



<그림 30> 휴토람 시스템 구성도

- '휴토람'의 비료사용처방 DB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 활용하여 농업인의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표 5> '휴토람' 비료사용처방 DB 활용 전·후 비교

기존 방식 (AS-IS)	'휴토람' DB 활용 (TO-BE)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위해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토양시비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휴토람'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농업인이 토양비료사용처방전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 토양의 상태와 사용 가능한 시비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농경지 토양수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봄철 시군별 가뭄대책 수립, 가을철 동계작물 논 파종 가능면적 파악 등 정책 의사결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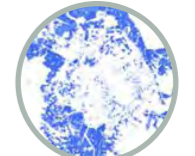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양개량제 공급량 산정·평가시스템(Agrix)과 연계하여 마을단위 규산·석회 공급량 산정 및 공급효과 분석 지원

### 농장별 맞춤형 농업기상·비료사용 처방·작목선택정보 서비스 체계구축

- 경영체DB 정보와 농업기상 및 토양정보 시스템을 연계
- 농가 필지별 작목·시설형태별 날씨 및 재해예보 맞춤형 서비스
  - (강풍)인삼·비닐온실 + 기상, (폭우)토양경사·배수정보 + 작목 + 기상, (가뭄) 토양유형(사질토 등) + 작목 + 기상, (서리) 기상 + 작목
  - ※ ('15) 시범서비스(하동·구례·광양) → ('16) 9개 시·군 → ('20) 전국
- 농장, 주산지 경영체별 맞춤형 비료사용 처방 및 적지적작 서비스
  - 필지별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 처방 정보 제공
  - ※ ('15) 시비처방 시범연동서비스 → ('18) 전국 확대
  - 농업기후시대와 토양정보를 연계한 농장·지역별 적지적작 서비스
  - ※ ('15) 휴토람 시범 연동서비스 → ('17) 전국 확대(토양+기상)



휴토람 토양정보(지하)



스마트팜 맵, 경영체DB



토양정보 등록

<그림 31> 토양개량 정보 서비스 제공 방식

### 농장의 최적화 영농체계 및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

- 경영체DB(재배면적, 노동력, 농기계)와 소득자료 (조수익, 월 노동시간) 연계
- 농가와 지역단위 가용 노동력·재배면적·농기계 및 작부체계 등 제약 조건하에 소득 최적화 영농설계 및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 ※ ('15) 무주군 농업발전계획 수립 지원 → ('17) 9개 시·군 → ('18) 전국

휴토람 시스템과 스마트팜 맵을 경영체DB와 연계, 필지별·작물별 정확한 시비량을 확인할 수 있는 토양개량 정보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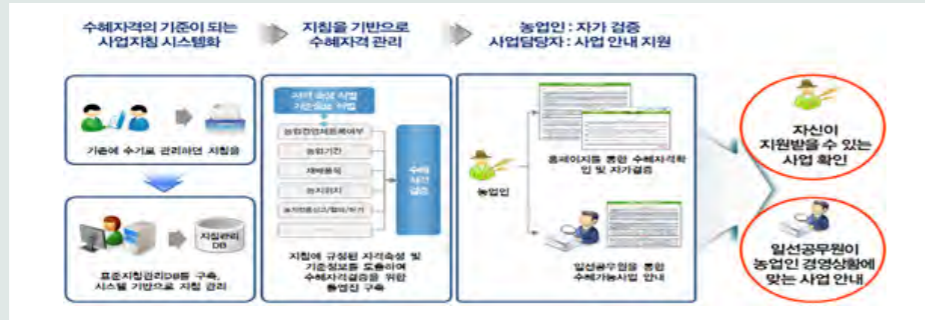
###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제공

농업인이 자신의 경영규모에 적합한 정책사업 지원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 제공

- 경영체 DB에 등록된 경영정보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지원요건을 비교, 지원 가능한 사업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15.7)

###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개 념**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과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주요기능**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개별 농림사업의 성격 및 지원대상자 기준 등에 따라 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

- ① 수혜가능 사업목록 확인(18개) : 농업경영체가 지원을 희망하는 특정사업을 선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비교 검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미지원시 그 사유 등 조회  
⇒ 시스템 자동안내 + 콜센터 전문상담원 안내
- ② 자가진단(55개)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한 농업인이나 예비귀농인 등 일반국민이 영농계획 등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목록 확인 ⇒ 시스템에서 서비스 이용
- ③ 사업 안내(102개) : 농업경영체 대상 농림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의 요약본과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 시스템에서 서비스 이용

〈표 6〉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시행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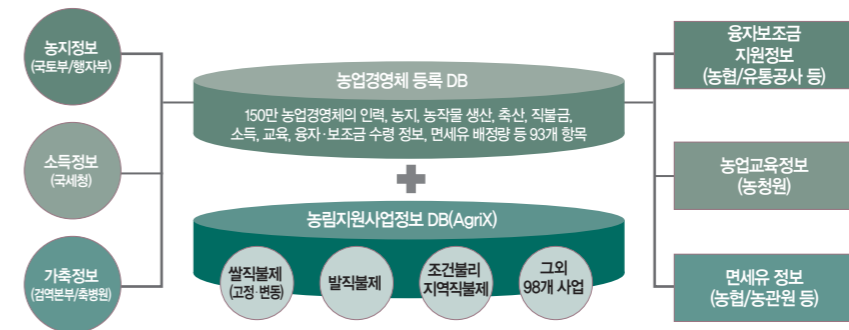
기존 방식 (AS-IS)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 (TO-BE)
농업인 농림사업의 종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또는 지침서 해석	농업인 자신이 직접 조회하여 수혜가능한 모든 농림사업 확인 및 특정 농림사업에 대한 수혜가능 여부 실시간 확인
지자체 공무원 사업시행지침서 해석, 농업인 경영상황 판단 등 검토· 답변	지자체 공무원 농업경영체 정보와 실시간 비교·검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에 대한 맞춤형 안내 제공

### 농업경영체 DB와 연계한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농식품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경영체DB와 농업인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연계시키는 통합DB 구축

※ 실적 및 계획(누적) : ('13) 5개 사업 → ('14) 17(22) → ('15) 40(62) → ('16P) 40(102)



〈그림 32〉 농업경영체 통합DB(통합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식품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

- 보조사업 신청자의 보조금 지원 이력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확인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편중, 부적격자 지원 방지

※ 유사자금 2회 이상 지원시에는 기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최대 3회 지원)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재정집행을 관리함에 따라 '14년 발직불금 40억원 부당지급 방지효과가 있었고, 직불금 부정집행 95억원, 면세유 부정수급 76억원 적발에 기여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효과

- 보조금으로 지원한 주요시설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기등기제도\* 도입 및 재정사업 정보관리시스템 구축('15)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의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과 보조목적 외의 사용, 용도, 담보제공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7))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재정사업의 합리적 성과평가를 위해 i) 주요정책 중심의 사업군을 효과 분석하는 심층평가와 ii)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평가 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개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만 초점을 둔 기존 평가방식의 한계점을 보완

- '14년에는 쌀 관세화, 한·중 FTA, TPP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림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발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군'의 15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15개 세부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원예시설현대화, 첨단온실신축지원, 과원규모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시설원예), 농기계 임대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주요곡물산업육성, 발기반정비사업, 골든시드프로젝트, 종자산업기반구축, 민간육종연구단지건설, 과수우량묘목생산

- '15년에는 각종 직불금 사업군을 종합하여 성과평가 중

정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농식품 정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농식품 정책 및 재정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 농식품 정책 및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지정하여 '농식품정책 성과관리센터' 본격 운영 중('15.7~)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5.1.6공포, 7.7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간 공모를 통해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편취 비리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주요적발 사례
  - 보조사업자(농업경영체)가 시공업체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후 대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보조금 편취(시공업체는 공사비 부풀리기)
  - 업체가 농가에게 자부담 대납을 제안하여 시공업체로 선정 등
    - ※ 검·경 합동조사('14.1월 발표),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13.8월), 부패척결추진단(국조실) 조사('14.8~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현장점검 및 자체감사('14.4~5월), 관계부처 합동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 등
-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취약요인이 제거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개정('15.1.1시행)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주요내용

❶ 보조사업자 선정시 중복·편중, 부적격자 지원 사전 예방

- 지자체 등에서 보조사업자 선정검토 시, 농업경영체의 보조금 지원 이력을 확인토록 하여 중복·편중, 부적격자 지원 등 사전예방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적정성 검토 강화
  - 유사자금은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하고, 2회이상 지원 시에는 기 지원사업의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 3회 이상 보조금 부당사용 적발 또는 형사처벌 시에는 농림사업 지원을 영구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 강화
  - \*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계획('16~)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15년, 기획재정부)

❷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투명성 강화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보조사업의 시공업체는 지자체 등 사업 주관기관이 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조치
  - \* '15년 5억원 이상, '16년 이후는 2억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계획
-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축산, 온실 등의 냉난방 시설 보조금은 기준 가격 범위 내에서 지원
  - \* '15년 적용대상 사업(10개)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말산업육성,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산물브랜드육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종자산업기반구축, 기능성양잠물 종합단지 조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정산 시에는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및 공시 의무화
  - \* '15년 5억원 이상, '16년 이후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계획

❸ 보조지원시설 사후관리 강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기등기\*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담보의 임의제공·양도와 목적외 사용 제한
  - \* 부기등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15.7.7시행)
  -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❹ 농업분야 재정관리 시스템 활용(Agrix)

- 농업경영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력, 부적격자 명단 등 DB구축을 통해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부정수급 예방 업무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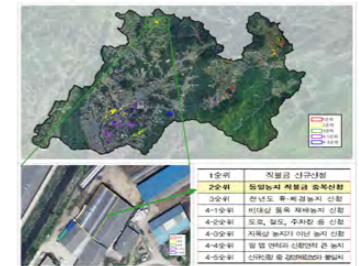
경영체 DB 정보 구축을 확대하고, 주요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과 통합추진으로 농업인의 사업신청 편의성 향상(4회 신청 → 1회 신청, 264억원 절감)

자연재해, 동·식물 질병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기에 신속한 대응 지원

-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제대책 수립을 위해 기존에는 사과·배 등 재배현황 파악에 최소 1개월이 소요되었으나,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행정비용 및 방제비용 절감

스마트팜 맵을 이용한 직불제 이행점검으로 보조금 누수 사전 차단

- 스마트팜 맵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점검대상 농지 선정
  - ※ 동계작물 밭직불제 이행점검 적용 중(부당신청 의심필지 점검강화)



〈그림 33〉 스마트팜 맵 활용 모습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제공으로 정책서비스 만족도 제고

-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전화·농업인의 방문, 사업담당자의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효과 창출
  - 연간 절감액(추정) : 279억원(농업인 126억원, 업무 담당자 153억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보조사업 신청자의 보조금 지원 이력을 확인함으로써 중복·편중, 부적격자 지원 방지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하여 재정집행을 관리함에 따라 '14년 밭직불금 40억원 부당지급 방지 효과가 있었고, 직불금 부정집행 95억원, 면세유 부정수급 76억원 적발에 기여

# 3 민·관 협업을 통해 일 잘하는 유능한 농정 추진

## 주요 추진내용

### 법 정부 협업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 추진

농업·농촌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 강화

제1차('05~'09) 및 제2차('10~'14)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18개 부처·청\* 합동으로 '제3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5~'19)' 수립('14.12)

\* 관계부처·청(18개)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 법 부처 협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안을 마련하고, 일반국민과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확정

###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 개요

**제1차**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4대 부문\* 133개 과제에 22.8조원 투융자(계획 20.3조원 대비 112%)

\*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교육기반 확충,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제2차**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7대 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원 투융자(제1차 22.8조원 대비 151%)

\*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4.6조원, 교육여건 2.4조원, 기초인프라 8.5조원, 경제활동 및 지역역량 2.9조원, 문화·여가 0.6조원, 환경·경관 6.9조원 등

제3차 기본계획은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일자리, 문화, 환경, 안전 등 7대 분야에 46.5조원 투융자 계획 반영(제2차 34.5조원 대비 135%)

### 제3차 기본계획의 7대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

- ① **보건·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 ② **교육** 농어촌특성학교·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교육정책 연계 강화
- ③ **정주생활기반**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확충
- ④ **경제활동·일자리** 농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⑤ **문화·여가** 능동적 문화·여건 조성 및 문화 일상화 지원
- ⑥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 ⑦ **안전**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

- 실효성 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교육·문화·복지·정주생활기반) 및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야별 국책연구원, 시·도발전연구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 협업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 삶의 질 정책네트워크', '현장자문단', '정책모니터링단' 출범('15.7)

- **농어촌 삶의 질 정책네트워크** :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중심으로 7개 국책연구원과 9개 시·도발전연구원이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공동연구 등)
- **현장자문단** : 농어촌학교 교사, 보건지소 간호사, 노인보호기관 근무자,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전문가 60명으로 구성하여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
- **정책 모니터링단** : 농어촌 주민 32백여명이 참여하여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 담당





### 농촌지역개발은 농촌공간의 특성 및 부처별 기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농촌과 도시의 특성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지원체계를 부처간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도농복합시 중 농산어촌의 특성이 강한 읍면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성격이 강한 동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원
  - 다만, 읍 지역에서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하여 추진
  - ※ 협업기관별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공동선정, 예산 반영 / (국토교통부) 사업 공동선정, 관리 주관

〈표 7〉 도농복합시에 대한 지특회계 사업의 부처간 역할 분담 개선

기 존	개 선
인구 50만 미만인 시는농산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50만 이상인 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교통부)으로 구분	농촌인 읍·면은 농산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도시의 성격이 강한 동은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교통부)으로 구분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시너지 제고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환경부, 지자체 등과의 협업 강화

- '13~'14년도에 환경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
  - 빈집정비, 집수리,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담장정비, 마을쉼터 조성 등 지원
  - ※ 충남 서천군 장항면 송림지구 등 4개마을 254동 주택 등을 개보수하여 583명의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슬레이트 주택 164동 정비, 빈집 42동 정비, 기존주택 193동 및 신규주택 23동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생활홀 4동을 건축하여 14세대 입주 공간 마련)



〈그림 34〉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 '15년도에는 지역발전위원회·환경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토대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으로 확대 발전(전국 55개 지구 선정, '15~'17년까지 지원)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원
  - ※ 인천 강화군 서문안 마을 등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4,025동 주택정비 등을 통하여 7,831명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 중
  - ※ 환경부는 동 사업지구내 2,684세대의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부처·기관별 역할 분담

- **지역발전위원회** : 가이드 라인 마련, 지구선정, 정책방향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시행지침 마련, 예산 확보, 지구 선정 협조
- **환경부**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예산 지원(2,684세대)
- **지자체** : 기본(사업시행) 계획 수립, 사업지구 선정, 지방비 확보·지원, 사업 시행, 사후 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등 기술지원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정계획 수립·추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농정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농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제고

- 지자체가 지역농정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4~'18)'을 수립 추진
  - 농촌지역이 있는 15개 시·도 167개 시·군·구의 중장기 농정발전계획 수립·유도
  - '15. 11월말 현재 10개 시·도 150개 시·군·구 계획 수립 완료
  - 시·군 경계를 넘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 확대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누계)** : ('13신규) 33개소 → ('16까지) 140
  - 사업체감도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생활권 단위로 사업지역을 구성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추진

※ HOPE : 행복(Happiness), 기회(Opportunity), 협업(Partnership), 정책 사각지대 해소(Everywhere)

• 지역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방식 도입

※ 예비단계(역량강화) → 진입단계(소규모사업) → 발전단계(종합개발) → 자립단계(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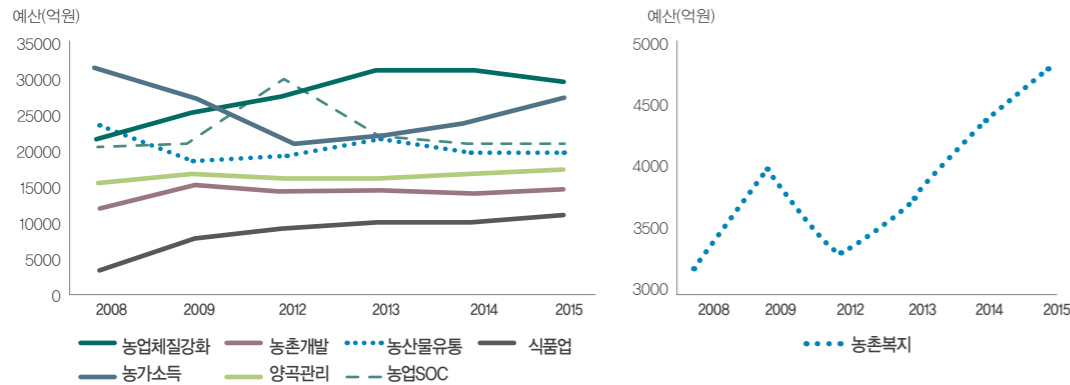
● 효율성을 기초로 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과거 SOC 투자 위주의 획일적 경쟁력강화 투융자에서 농업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으로 전환하여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영세고령농에 대한 소득·복지지원 확대

※ 농업생산기반 조성 : ('12) 29,723억원 → ('15) 21,685(27.1% 감)

※ 농촌복지 증진 : ('12) 3,644억원 → ('15) 4,565(25.2% 증)

• 생명·안보산업, 일터·쉼터·살터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가치 공감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투자 확대



〈그림 35〉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구조 변화

●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농업회의소 설립 확대 운영('15.11월말 현재 7개소 설립, 5개소 설립 추진 중)을 통해 농정 수립·추진에 있어 민·관 협치를 통한 농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

※ 농업회의소 설립 현황 : ('10) 3개 지역 → ('11) 3 → ('12) 1 → ('15.9) 5 선정(지자체 설립 추진 중)

※ 추진경과 : 1차 시범사업('10~'14년), 시범사업 성과평가 용역('14), 2차 시범사업('15)

※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여건을 좀 더 성숙시킨 후 법제화를 통한 본 사업 추진 검토 계획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강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촌관광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 민간과의 협업 강화

농촌진흥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관련기관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6차산업의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국내 6차산업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6차산업 인증제도 운영, 6차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제도적·조직적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 : 농업인들의 6차산업 창업 지원을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여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기술개발 등의 창업보육과 가공식품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6차산업 지원센터** : 전국 9개도에 설치된 6차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6차산업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밀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별로 40~70여명의 전문가를 분야별로 위촉, 6차산업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품질관리, 위생, 경영전략, 홍보·마케팅, 스토리텔링, 제품개발, 자금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할 지역 내 사업간 연계를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 내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추진하는 핵심 특화사업들을 6차산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6차산업 사업자 매출증대 등 지원  
 ※사례 : 충남은 6차산업 사업자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매장을 활용한 입점을 지원하고 소비자 지향적 스토리텔링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증대 기여
- **네이버, 현대백화점, 코레일 등** : 민간에서 보유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내에 6차산업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입점시키고, 6차산업 사업자 제품 전용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인증사업자의 안정적 판로 지원



관련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체험마을에 철도인프라(코레일), 자연휴양림(산림청, 지자체) 등의 자원을 연계하는 농촌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네이버, 관광공사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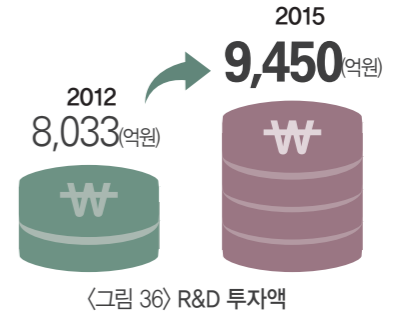
- 철도인프라와 다양한 농촌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내 다양한 농촌관광자원을 코스별로 상품화(총 55종) (코레일, 민간여행사 협업)
  - 기존에 정보·구입·교통 접근성이 낮은 개별자원을 코스화하여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상품성 제고 및 이용객 만족도 증대
    - ※ 농촌관광자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현장, 농가맛집, 자연휴양림, 찾아가는 양조장, 낙농체험목장, 관광농원, 농촌 민박 등
    - ※ 으뜸촌 기차여행 15종, 민간여행사 관광상품 40종 운영('15.5~11월)  
(으뜸촌)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시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전체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우수 체험마을
- 국유·지자체 자연휴양림과 농촌체험마을 간 연계 강화 지원(산림청, 지자체 협업)
  - 농촌체험마을과 주변 휴양림 간 MOU를 체결, 상호 간의 온·오프라인(홈페이지 게시, 특산물 판매장터 개소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 ('14년) 농촌체험마을 12개소-국유휴양림 9개소, ('15년) 농촌체험마을 7개소-지자체휴양림 6개소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홍보 강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해외 여행업계 대상 현지 설명회 및 국내 초청 팸투어 개최(한국관광공사 협업)
    - ※ 싱가포르 현지 설명회('15.10.13, 15개업체), 중국 초청 팸투어('15.10.25~29, 20개업체), 대만 현지 설명회('15.11.16~18, 4개업체)
  -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으뜸촌)에 대한 통합 모바일 홈페이지(nongchonmaeul.modoo.at) 및 으뜸촌 테마지도를 구축, 농촌관광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네이버 협업)
  - 농촌관광 정보 확산 및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발 장려 등을 위해 농촌관광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개발 경진대회 개최(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 협업)
    - ※ 공모('15.4월), 예선 및 본선(5월, 98개팀 심사), 앱개발(5~10월), 심사 및 선정(11월, 5개팀)

농식품 분야 R&D 성과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과 협업하여 기획단계부터 실용화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제고

- 7개의 협업 R&D 과제를 선정하여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농업 7대 과제 사업단 출범('14.8)

※ 7개 협업과제 : ① 농업에너지절감, ② 가축분뇨자원화, ③ 과학 기술기반 채소류 수급 안정화, ④ 주요 곡물·조사료 자급률 제고, ⑤ 대중국 농식품 수출, ⑥ 6차산업화, ⑦ 산림자원 고부가가치화

※ R&D 투자액 : ('12) 8,033억원 → ('15) 9,450



-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패키지 모델을 개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된 모델을 정책사업에 적용하여 확산·보급

- **농림축산식품부** : 창조농업 추진전략 마련 및 개발된 모델 확산
- **농촌진흥청** : '농업 에너지 절감 모델 개발 사업단' 운영, 패키지 모델 개발
- **산림청** : '산림자원 고부가가치화' 관련 사업단 운영, 산림자원 모델 개발
  - ※ 산지활용 특화작물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계획 마련
- **민간** :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실증연구 추진

**협업사례 1** 농업에너지절감모델 개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기관	주요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컨트롤타워 역할(R&D 공동기획) 수행, 개발된 모델('14년 유리온실 패키지 모델)을 '16년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반영하여 현장 적용 추진
농촌진흥청	농업에너지 절감 모델 개발(온실유형 및 작물, 지역 등에 따라 냉난방에너지 수요 및 최적 활용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패키지 모델 개발)
지자체(농업기술원)	지역 및 작물에 맞는 실증연구 수행

**협업사례 2** 산림자원 고부가가치화(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기관	주요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컨트롤타워 역할(R&D 공동기획) 수행,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지원
산림청	품목별 실증연구 기획, 시범실증지역 선정(국유림대부), 산지 재배기술 개발, 우수모델 설정·확산, 기술컨설팅 등
농촌진흥청	선정 작목의 생산기술 산지 적용성 평가 및 현장기술 컨설팅 등

**농업·농촌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 강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공감 확산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유도(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민간 등 협업)**

- 관계부처, 국회 등과 협업, 전방위적인 도시농업 실천 기반 확충
  - ※ 국회 : 텃밭동아리 구성 및 텃밭조성(120평)으로 실천 분위기 확산
  - ※ 행정자치부 : '공동체 정원사업'에 도시텃밭조성 사업접목('15. 텃밭 102개소)
  - ※ 국토교통부 : 그린벨트내 유휴지(33ha, 216필지)를 도시농업에 활용 지원
    -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 '16년도부터 도시텃밭 및 도시농업공원 조성에 활용
  - ※ 농촌진흥청·산림청 : 힐링·원예치료 등 R&D성과를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 ※ 교육부·보건복지부 : 어린이 체험학습용 소규모 텃밭 조성('15. 4천여 개소)



〈그림 37〉 국회 생생텃밭 조성

-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전국적인 붐 조성
  -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도시농업 붐조성 행사 개최('15년 6회)
    - ※ 그린벨트 텃밭 개장식('15.4.4, 대전 유성구), 국회 생생텃밭 조성행사('15.4.8, 국회 헌정기념관), 전국도시농업 네트워크 발대식('15.4.11, 서울 서초구 대원농장), 꿈틀어린이 텃밭학교 입학식('15.5.2, 경기 과천시 로고스센터),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15.9.5~8, 순천만 정원),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졸업식('15.11.7, 경기 과천시 로고스 센터)
  - 도시농업 지역협의체 구성(84개 지자체) 및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36개 지자체)



〈그림 38〉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 '도시농업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농업 협업기반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 등 농업관련 기관과 도시농업단체·농업인 단체·농협 등 민간조직들이 참여하는 전국 네트워크 구축('15.4)
- 미래세대이자 가치관 정립시기인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춰 텃밭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꿈틀 어린이 텃밭 학교' 운영('15.5.2~11.7)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운영 관련 주요 협업기관 및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획·조정, 예산지원 및 홍보, 사업성과 확산
- **농촌진흥청** : 텃밭체험 변화프로그램 작성·결과 분석
- **경기도·과천시** : 현장학습 지원, 학생선발
- **도시농업포럼** : 도심텃밭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요리실습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 일상기록·소통기록 프로그램 지원

**소비자의 건강한 식문화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확대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유도(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협업)**

-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협업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 ※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숙담처럼 영유아 단계의 식습관은 성인단계 미각을 결정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결정할 만큼 중요 → 미래세대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추진 필요
  - 눈높이에 맞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제공, 일상 생활속에서도 실천가능한 영·유아의 바른 식생활 습관 배양
    - ※ "바른 밥상, 밝은 100세" 5가지 실천지침(텃밭가꾸기, 아침밥먹기, 채소·과일 많이 먹기, 축산물 저지방 부위 소비 촉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쌀 소비 활성화 교육과 연계
    - ※ 바른 식생활교육 관련 교재·교구(텃밭상자, 교육교재 등) 및 원장·보육교사 대상 식생활 교육 워크숍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교육 사업 주관 및 세부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 등에 식생활교육 강화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영·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어린이집 대상 식생활교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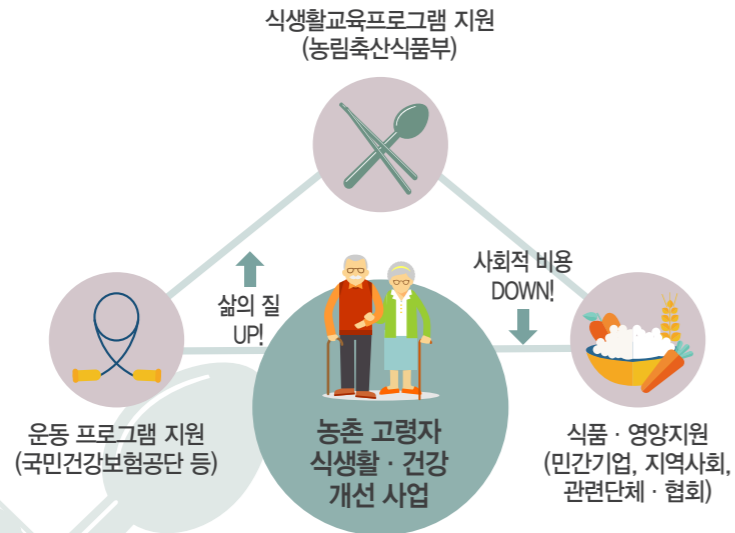
- 농촌 고령자의 건강, 영양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기업, 단체·협회 등과 협업하여 식생활 교육, 운동프로그램, 농식품 제공 및 조리지원 등을 종합한 '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 실시

- 사업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우리 농산물을 기초로 한 식습관 교육 및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

※ '15년에는 공동체성이 우수하고,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 및 교육이 가능한 경기 양평군 관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그림 39〉 식생활·건강 개선사업 현장감담회



〈그림 40〉 농촌고령자 식생활·건강 개선 사업 지원 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 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 총괄 조정, 식생활교육(강사) 및 식생활관리 프로그램 운영
  - ※ 전문 식생활교육 강사 운영, 바른 식생활을 생활에 접목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올바른 식단 구성, 식습관병 예방 등) 운영
  - ※ 노인(고령자)에게 필요한 단백질·과일류 중심의 균형잡힌 식단(전문 영양사 협조) 제공·운영
  - ※ 식생활관리(조리) 지원 : 마을별 1~2명의 조리 인력을 지정, 민간에서 기부한 농식품의 조리 및 상차림, 밑반찬 마련(주 2~3회 방문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역보건소** : 사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및 증진, 건강 관련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주 2~3회)
  - ※ 지역보건소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를 통해 일상 생활속 건강관리 및 심뇌혈관, 영양, 치매예방 등 통합 건강교육
  - ※ 운동강습, 신체기능 측정, 우울증검사, 건강캠페인 등 '건강백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신체기능 저하 방지 및 노인성질환 예방
- **플무원, 농협, 협회 등 민간** : 식단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식재료) 지원
  - ※ 농촌 노인의 섭취가 부족한 단백질류 중심의 농식품 기부(지원)
  - ※ 농협(쌀 등 필요 식재료), (주)플무원(두부 등), 낙농진흥회(우유 및 유제품), 양계협회(닭고기, 계란), 양평군(지역농산물 등)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간 연계, 노인 맞춤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ICT 기술 및 SNS를 활용한 영농현장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농업인이 현장에서 영농 애로사항 발생시 SNS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4.6~,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등 산하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협업)
  - 농촌진흥청, 지자체, 선도농가, 대학, 기업 등의 참여하에 네이버에 '기술공감' 밴드를 개설·운영



〈그림 41〉 SNS 활용 영농현장 애로 해결 모식도

〈표 8〉 SNS를 활용한 농식품 기술 컨설팅 서비스

기존 방식 (AS-IS)	농식품기술 SNS 컨설팅서비스 (TO-BE)
농가 현장 애로사항 발생시 농업 기술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민원 해결 (신속한 해결 어려움)	SNS에 애로사항 글 게재시 선도농가 및 전문가의 실시간 컨설팅으로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가능
농업 현장 기술수요 발굴시 농업기술센터 문의 또는 관련 시스템(FRIS)에 직접 작성	현장기술수요 사안을 실시간으로 연구과제 발굴 채널로 활용

- 농업인이 '기술공감' 밴드에 애로사항을 등록하면 선도농가, 전문가 등이 해결방법 등을 실시간 댓글로 신속히 답변
  - ※ 컨설팅 대상 현장에서 기술컨설팅 수요가 많은 20개 품목(아래표)을 선정하여 추진중이며, '15.11월에 배추, 마늘, 양파 등 3개 밴드 신규 개설하여 총 23개 품목
  - ※ 컨설팅 분야 원예분야는 ① 품질·수확후 관리, ② 재배·생산 관리, ③ 병해충 관리분야, 축산분야의 경우에는 ① 육종·번식, ② 사료·사육, ③ 질병 관리분야
  - ※ 컨설팅 채널 네이버 밴드 "○○(품목명) 기술공감"에서 컨설팅 수행

〈표 9〉 품목별 컨설팅 실적 및 가입자 수(누적, '15.12월말 기준)

구분	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무	참외	사과	블루베리	포도	감귤	단감
컨설팅수	6,691	686	45	56	268	18	50	89	61	54	147	163
회원수	13,878	3,641	196	211	585	70	187	411	275	298	542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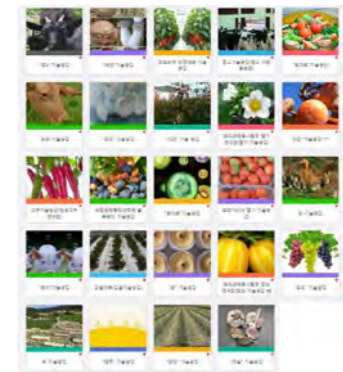
  

구분	배	버섯	참다래	젓소	염소	닭	오리	한우	돼지	배추	양파	마늘
컨설팅수	92	803	545	91	50	160	54	2,467	785	2	4	1
회원수	286	964	739	406	266	716	166	1,982	1,473	8	33	23

- '기술공감' 밴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밴드 운영자(공동 운영자 포함) 28명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운영위원회 발족 및 컨설팅 사업단 본격 출범('15.7.1)
  - ※ 운영위원장: 순천대학교 고영진 교수(참다래 기술공감 공동 운영자)
  - ※ 원예분과와 축산분과로 구분하여 운영
- SNS 컨설팅 사업은 기술 상담을 넘어 농정전반의 정보 교류, 정책 홍보, 수급 관리 등 지식 공유의 장 역할도 활성화 되도록 확대 추진('15.11)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를 품목별로 게시하여 농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홍보), 국립종자원(신품종 등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매, 비축, 유통, 수출 등), 농협(계약재배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관측정보), 농촌진흥청(작황) 등
  - 특히, 채소류 수급 5대 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은 수급 정보 제공



〈그림 42〉 기술공감 밴드 운영위원회  
※ 운영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그림 43〉 네이버 밴드에 개설된 23개 밴드 목록  
※ 누구나 "기술공감"으로 검색 후 가입신청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 주관 및 계획 수립, 품목관련 정부 정책 제공
- **농촌진흥청** : 기술컨설팅, 작황 및 병해충 발생 자료 제공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밴드 운영 관리 및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등
- **민간** : 밴드 관리 및 기술컨설팅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홍보, 언론 동향 자료 등 제공
- **국립중자원** : 신품종 등록 정보 제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품목별 관측 정보 제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매, 비축, 유통, 수출 정보 제공
- **농협** : 계약재배, 수급안정사업 소개 등 제공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무척 과육을 볼 전체 공개식 육산면 방문에서 농가를 방문해 농산물 수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중)은 시·도별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약재배로 농민을 통한 안정생산 실시를 위한 약속했다. (사진: 농정브리핑)

●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방역상황을 관리함으로써 국민불편 및 농가부담 경감

\* 축산농가, 가축이동, 차량출입정보, 가축거래기록, 질병발생상황, 백신접종 실태 등에 관한 정보 DB를 구축하여 방역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KAHIS를 활용하여 질병확산 위험지역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역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가축질병 확산 최소화
-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더라도, 질병확산 위험이 없으면 가축사육 및 출하 등의 영농활동에 지장 없도록 조치
- 방역 시 축산 차량만을 선별 소독함으로써 가축방역에 따른 교통 통제 등 국민 불편 최소화



〈그림 44〉 KAHIS를 활용한 방역대책 회의

- ※ **축산차량 GPS 부착 추이** : ('12 이전) 상시관리 차량 0 → ('14) 47천대
- 질병확산 위험지역 분석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KT 등 민간 ICT 업체와 협업하여 기술개발 지속 추진
  - ※ KT, 농림축산식품부 간 MOU를 통한 기초시범모델 구축('14.12) : 현재 적용도 82.7%
  - ※ '15.9월 AI 발생시 KT와 협조하여 13개 위험시·군을 즉각 발표

〈표 10〉 KAHIS 분석 정보 정확도 개선 방향

현 재	방 식	개 선 후
정확도가 10m 내외 오차발생 	GPS 성능개선	정확도가 1m 내외 오차발생 
원(Circle)으로 구획 방문정보 수집 시 오차발생 	축산시설 존(Zone) 설정방식	다각(Polygon)으로 구획 기능추가실제 시설 면적과 근접하게 구획가능 

● 정밀토양정보시스템인 “흙토람”을 구축(농촌진흥청)하여 농업인에게 토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재배관리 등에 활용

- ※ 1,000만점 이상의 토양비옥도 정보축적, GIS기반 토양주제도 50종, 비료사용처방 115작물, 작물재배적지 63종, 모바일 웹 서비스 등 제공
- ※ **흙토람 정보 이용현황** : ('12) 352천건 → ('13) 439 → ('14) 681('12년 대비 93% 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흙토람에 구축되어 있는 비료사용처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친환경 인증심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 가뭄대책, 동계작물 파종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농경지 토양수분정보 제공
  - ※ (봄) 시군별 가뭄상태정보, (가을) 동계작물 논파종 가능면적 정보 제공

### 농촌 주민에 대한 복지·문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촌 주민에 대한 복지·문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하여 시너지 제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복지용 쌀(나라미)을 신선한 상태로 반값에 연중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15.4)

- ※ 복지용 쌀(나라미)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을 가공하여 보건복지부에 공급하고, 보건복지부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공급
- 20kg 포장 나라미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쌀 보관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하절기(7~8월)에만 공급하던 10kg 단량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는 10kg 포장재 제작 공급 지원, 보건복지부는 배송비 등 추가 소요비용 예산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의 '15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및 보건복지부의 '15년 자활사업 지침 개정('15년 1/4분기)



<그림 45> 10kg 포장 나라미

<표 11>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나라미 공급방식 개선 주요내용

기 존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kg 포장 단량 공급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 발생)</li> <li>● 10kg 포장 나라미는 7~8월에만 한정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10kg 포장 나라미를 연중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포장재 제작·공급</li> <li>- (보건복지부) 배송비 예산 추가지원</li> </ul> </li> </ul>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고령자 등 공동이용시설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복지·문화 등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농촌 고령자 등의 생활특성 등을 고려하여 체감도 높은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조성 추진

- 농촌지역 내 공공 유희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농촌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을 조성
  - ※ '14~'15년 지원 실적 : 공동생활홈 70개소, 공동급식시설 54, 작은목욕탕 28
  - ※ 공동생활홈 : 농촌에 거주하는 둘 이상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 등 주거 생활을 함께 하는 시설 또는 주택
  - ※ 공동급식시설 : 다수의 지역 거주민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리 및 식사 설비 등을 갖춘 시설
  - ※ 작은목욕탕 :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건강 100세 노인 서비스 등 10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 건강 100세 노인운동서비스(보건복지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등

####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관련 기관별 주요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조성 총괄, 예산 지원 및 사업 관리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연계 가능한 복지·문화 등 서비스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지자체**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세부 조성(설계, 리모델링 등) 및 공동시설에 복지·문화 등 공공서비스 집행
- **민간전문가** : 사업기획·실행·사후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조정
  - ※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동체 운영모델 발굴 및 고령자를 위한 건축설계 확산을 위해 도별 1명씩 지정·운영
  - ※ 무장애디자인 설계 등 건축의 기능·미·구조에 대한 질적 향상, 시설운영 주민협의회의 촉진, SW프로그램 연계 등 총괄·조정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하여 고령농 등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의 고령농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달력 제작·배포
  - 관계부처 추천으로 복지서비스 리스트를 선정하고, 주요내용·신청방법 등을 수록('15 : 15개, '16 : 24개)



※ ('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등 농촌복지사업 6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등 타 부처 사업 9개 등 15개 수록

※ ('16년) '15년 복지달력에 수록된 사업 15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금보험료 지원 등 4개,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타 부처 사업 5개를 추가 수록

- 어르신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큰 활자로 인쇄하여 제작하고, 농촌 독거노인을 포함한 농촌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에 배포('15년 달력 : 37천부, '16년 달력 : 39천부)

● 농협 등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 농촌마을에 찾아가 의료검진, 법률자문, 문화공연, 가전제품 수리 등 다양한 의료·복지·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14~'15년 총 102회 운영)

※ 인적(전문인력 :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물적(인프라 : 문화공연, 무상수리 등) 자원 부족, 열악한 접근성 등 농촌 특성을 고려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우선 제공



<그림 46> 복지서비스 달력



<그림 47> 농업인 행복버스 : 의료검진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관련 주요 협업기관 및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총괄(기본계획 수립, 사업확정, 예산지원)
- **농협** : 세부추진계획 수립, 참여기관 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및 수요조사, 장소선정 등
- **농촌사랑운동본부** : 만족도 조사 및 사업운영 지원 등
- **참여기관(민간)** : 의료지원(의료기관),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법률구조공단), 가전제품 수리 지원 등 (소비자보호원), 장수사진 촬영(재능기부 기관)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마을 특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대중교통 수단(버스, 택시 등) 지원(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협업)

※ 농촌형 교통이란? 경제성이 낮거나 진입로가 좁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버스, 택시를 활용하여 기존의 버스노선을 보완하는 준대중교통

- **버스형** : 차량진입로 문제 등으로 버스가 들어가기 어렵지만 일정 수요가 있는 곳에 소형승합차 등으로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방식

- **택시형** :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있는 진입로가 작은 마을에 시간, 인원 등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방식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에 2년간 차량유지·보수, 운행손실보상금, 유류비 등 교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15.1)

※ **지자체** :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관련 조례 제·개정

● 마을주민은 버스·택시를 활용한 준대중교통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도 적극 참여

※ '14년부터 현재까지 21개 사업('14년 13개, '15년 8개)을 선정·지원

※ **유형(3개)** : 환승거점까지 교통서비스 연계, 직거래·농촌관광 등 경제활동 지원, 목욕탕·보건지소 등 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



<그림 48> 농촌형 교통택시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관련 주요 협업기관 및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주관 및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15.1)
- **농어촌희망재단** : 사업 공모, 대상지 선정, 사업평가 모니터링 실무 및 예산 지원·관리
- **지자체** : 시군 조례 제정, 사업 세부 계획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교통서비스 안전관리 등 행정적 지원
- **마을 주민회 등** : 직접 참여하여 운행계획 수립 및 실제 운영

### 운영방식 사례

- ①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소형승합차 등을 구입하고, 차량 배차 등 운영방식을 자체적으로 결정·운영
- ② 마을회 등에서 마을 담당택시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운행시간표를 결정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운영

※ 민간 참여를 통한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사례 :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 마을버스

**운영주체** 조교리작목반영농조합법인

**운영내용** 운송원가가 높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조교마을에서 11인승 소형승합차를 구입하고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운행(1일/3회)

**정부지원** 차량 유지보수 등 운영비용 지원

## 농가의 세금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농업인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담 경감(조세특례제한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협업)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5억원 → 15)하고, 영농상속공제 재산의 범위에 기존의 농지·초지 외에 축사 및 축사용지도 포함
  - ※ 농업인이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영농 상속 공제
- 영농자녀에게 농지, 초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는 특례기간을 3년 연장(~'17.12.31)하고, 대상 농지의 면적도 확대(29,700㎡ → 40,0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과 저축 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특례기간 3년 연장(~'17.12.31)

농업경영체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세금 경감(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기획재정부 협업)

- 농·임·축산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특례범위 확대
  - ※ 비료·농약·사료 등에 영세율(부가가치세율 0%) 적용 연장(~'17.12.31)
  - ※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 받을 수 있는 기자재 범위 확대(47 → 52종에 적용)
- 지역 농축협의 법인세에 대한 저율과세(9%, 12%) 적용 특례기간 3년 연장(~'17.12.31)
- 지역 농축협 구매·판매시설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17.12.31)

농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14.6.30~'24.6.30,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협업)

## 성과

농촌마을의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삶의 질 개선

- 사람에게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빈집철거 등으로 위생여건 개선
-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
-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유지·발전

농업경영체의 사업 유형과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6차산업 인증 사업자의 매출 성장 등 성과 제고

- 관련기관 및 민간 등과의 협업을 통한 유기적 연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농업인의 창업 활성화 및 대형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 ※ 6차산업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 : 전년대비 12% 증가('15년 말 기준)

- | 사례 | 전북 장수드림협동조합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농촌진흥청)를 통해 창업보육 및 제품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 법인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및 6차산업 지원센터의 유통역양강화코칭, 유통품평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 매출증대 - 매출액 : ('13년 설립) 52백만원 → ('14년) 150 → ('15년.p) 500 (233% 증)
- | 사례 | 충남 6차산업 지원센터의 제품디자인 개선 및 한화갤러리아 백화점의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6차산업 사업자의 신규 판로 확보 지원
  - (6차산업 지원센터) 자연사랑영농조합법인, 농가에 등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시제품 제작 및 입점 지원

**농촌관광 상품 다양화('14년 : 9종 → '15년 : 55종) 및 정보 제공, 홍보 강화 등으로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으뜸촌의 평균 방문객 및 매출액 증가**

※ 으뜸촌 방문객 / 매출액 : ('14년) 66만명 / 83억원 → ('15년) 82/93(각 25%, 11%증가)

**부·청간 협업 강화를 통한 농식품 분야 R&D 시너지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협업 '농업 에너지 절감 사업단'의 패키지 모델 개발 사례 : 유리온실 패키지기술(다겹보온+지중저수열+근권난방)은 시행 전보다 난방비를 87.2% 절감(시행 전 11,351천원 → 이후 1,455) , 단동 패키지기술(다겹보온+공기열 히트펌프)은 60.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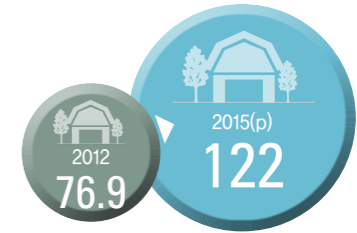
→ '16년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 유리온실 패키지 모델 반영('15년 하반기 지침 개정)

**서울경제, '15.3.5일 기사 “시설원예농가 보온시설 개선...난방비 ↓ 수확량 ↑”**

시설원예 농가의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겨울철 온실 난방비다. 난방비가 전체 생산비의 30~40%를 차지해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에너지 절감 모델 개발 사업단이 출범했다. ... 강원도 속초의 한 딸기 농가는 단동 비닐하우스에 다겹자재로 보온시설을 개선하고 재배 벤치 아랫부분을 난방하는 방식으로 온도제어에 성공해 난방비를 전년 대비 70% 정도 절감했다. 수확량은 2배 많아져 소득도 높아졌다. 이에 더해 겨울철 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딸기 체험행사를 진행해 부가가치까지 높은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

**도시농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과 먹을거리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도농간 파트너십 강화**

※ 도시농업 참가자 수 : ('12) 76.9만명 → ('15p) 122



〈그림 49〉 도시농업 참가자 수, 만명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텃밭활동 참여가족 변화분석 결과(농촌진흥청, '15.11월)**

- 관계개선** 어린이와 부모 관계증진(5점 만점, 3.47 → 3.64), 이웃과 교류증가(53.2% → 63.6)
- 인식개선** 자연에 대한 친근감·호기심 증가, 농업·농촌 가치인식, 채소에 대한 거부감 해소
- 생활변화** 텃밭활동을 통한 신체활동 증가(체험전 11.7보/분 → 체험중 13.5)
- 의사소통** 텃밭활동을 하는 시기에 긍정적으로 변화(5점 만점, 3.83 → 3.97)
-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텃밭활동 시기에 감소(5회 → 3)

**어린이집 대상 바른 식생활 조기 교육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

**농촌 고령자의 건강·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sbs 생활경제, '15.10.27일 방송 발취 “농촌마을 고령자 식생활교육”**

양평군의 한마을, 농촌에서는 가을걷이를 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추수철 날씨 좋을 때 빨리 마쳐야 하니 밥먹을 시간도 없다. 농사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어렵고 대강 반찬을 차려 물에 말아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농식품부)에서 노인 식생활 건강개선 사업을 실시하면서 마을 회관에서는 구수한 밥짓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식생활관리사(조리)가 동네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마을에 사는 30여명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 점심식사를 한다. 이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식생활네트워크 관계자는 “몸이 아픈데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가 건강이 더욱 안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끼를 든든히 챙겨 먹으니가 정말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무척 만족해 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식사가 끝나고 체조강사에 움직임과 말에 따라 함께 노인들이 열심히 체조를 한다. 체조강사는 “평생 농사일을 하신 분들이지만 노동과 운동은 다르거든요. 건강을 위해 운동강습 등 다양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관계기관, 기업체, 단체·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형 식생활교육이다.

ICT 기술 및 SNS를 활용하여 영농현장 애로사항 신속 해결

- ‘기술공감’ 밴드(네이버)를 통한 선도농가 및 전문가의 실시간 컨설팅을 통해 영농현장의 기술적 애로 사항 신속 해결
  - 13,878명의 농업인 및 기술전문가가 품목별 밴드에 가입하여 6,691건의 컨설팅 추진('14.6.~'15.12)

**한우밴드 이용자 이○○씨 ('15.9.17.)**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정보가 SNS로 떠오. 오늘 아침에도 소 분만 후 자궁세척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한 시간도 안돼서 20개가 좌르륵 떴어요. 전국의 고수들이 어떻게 치료하면 좋다, 무슨 약을 쓰면 좋다, 이런 식으로요. 수의사와 수의사 못지않게 현장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로 조언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15년 SNS 기술컨설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15년 11월)**  
 \* 컨설팅 신속성 만족도 : 신속하다 51.8% > 신속하지 않다 6%  
 \* 컨설팅 충실성 만족도 : 전문성 51.8%, 유익성 74.2%  
 \* 자발적 참여비중 및 방문 빈도수 : 자발적 참여 73.6%, 매일방문 79.3%

- ICT 접목 등을 통한 가축질병 상시예찰체계 구축으로 질병을 신속히 파악하여 초동 대응함으로써 확산 최소화
  - ※ KAHIS, GPS 활용 등을 통해 과학적 역학 추적 등 초동 대응시간 20시간 → 4시간으로 감축
  - ※ '14. 3. 6 안성 산란계 모 농가 AI 발생 시, GPS 차량기록 실시간 조회를 통해 누락된 가축이동 사항을 식별하고 2시간만에 예방조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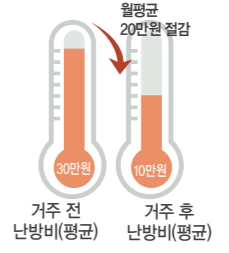
〈표 12〉 ICT 접목 등을 통한 가축질병 상시예찰체계

실사, 농가설문	KAHIS, GPS
1~2일	4시간
신고누락 위험	신고누락 발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 복지용쌀 ‘나라미’ 10kg 단량을 연중 상시 공급하여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및 실수요자 만족도 제고

농식품 분야 조세 제도 개선 등으로 농업인 세금 부담 경감 및 농식품 분야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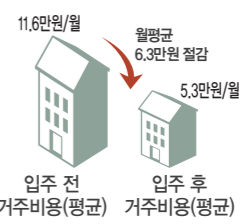
- 농업인 상속세·증여세를 경감하여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농·임·축산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특례로 농가경영비 절감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으로 농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그림 50〉 평균 난방비 변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주거·영양·위생 여건은 개선되고, 주거비, 식비 등 일상생활 비용은 감소하는 등 농촌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 **공동생활홈** 거주(91.4%) 및 정서적(92.9%) 부문에 높은 만족감 표시, 식사·목욕·청소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개선
  - ※ 식사횟수 일평균 0.5회(이용 전 : 2.4 → 이용 후 : 2.9), 목욕횟수 월평균 4.3회(이용 전 : 13.4 → 이용 후 : 17.7) 증가
  - ※ 난방비 월평균 20만원(이용 전 : 30 → 이용 후 : 10), 거주비용 월평균 6.3만원(이용 전 : 11.6 → 이용 후 : 5.3) 감소



〈그림 51〉 평균 거주 소요 제반비용 변화

- **공동급식시설** 이용자간 친밀감 형성(93% 이상 만족) 및 식사 비용 감소
  - ※ 식사횟수 일평균 0.4회(이용 전 : 2.4 → 이용 후 : 2.8), 식사인원 매회 평균 15.7명(이용 전 : 6.3 → 이용 후 : 22) 증가, 식사비용 월평균 4.4만원(이용 전 : 14.1 → 이용 후 : 9.7) 감소

- **작은목욕탕** 월 평균 목욕횟수 증가(3.2회, 4.7 → 7.9) 등 위생 관련 삶의 질 제고

복지달력을 제작·배포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 ※ '14년도에 '15년 달력 초판 1만부 발행후, 경로당 등 농촌취약계층 수요가 많아 27천부를 추가 제작·배포, '15년도에는 '16년 달력 39천부 제작 배포



〈그림 52〉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 홈

# 4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정비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의료복지문화 등)를 제공,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 MBC, '15.6.15일 방송, '고향이 좋다' - "행복버스로 행복 꽃이 활짝, 운봉마을"

- 평소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서비스, 무료 법률상담, 장수사진촬영을 해준다는데...
- 우리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병원에 가려면 멀어요. 행복버스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인터뷰)

대중교통 미비 등 교통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체감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14~'15년 현재까지 21개 사업('14년 13개, '15년 8개)을 선정·지원하여 416개 마을 56,424명이 수혜

### '14~'15년 지원 21개 사업 대상 모니터링 결과('15.12월)

- 대중교통 만족도 2배 이상 향상 (시행 전 40.7 → 이후 89.1, 48.4 ↑)
- 외출 회수 2배 이상 증가 (시행 전 월평균 4.3회 → 이후 8.7회, 4.4 ↑)
-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 74.7% 단축 (시행 전 평균 22.1분 → 이후 5.6분, 16.5 ↓)
- 버스 대기시간 70.1%로 단축 (시행 전 평균 17.1분 → 이후 5.1분, 12 ↓)

### 조선일보, '15.4.29일 기사 "교통 오지에 '행복 택시'...국민의 필요를 채우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은 경남 함양군 매암마을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돈 아끼려 면소재지로 걸어가 물리치료를 받고 걸어 돌아오다가 병이 다시 도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도 걸어가려면 숨이 턱턱 차오르는 산간 지역이다. 이곳에 사는 아흔 살 강○○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서너번 물리치료를 받으러 면소재지 병원으로 향하는데, 걸어서 가려면 1시간이 훌쩍 넘는다. 다리가 아파 택시를 타려 해도 왕복 1만원가량의 택시 요금이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강 할아버지는 지난해부터 요금 걱정 없이 택시를 타고 면소재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온다. 마을 주민 40여 명 중 절반가량인 20명의 다른 노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행복택시' 사업 덕분이다. 함양군 행복택시는 마을버스타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장이나 병원·목욕탕 등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주민들을 태우고 면소재지나 읍내로 나간다. 요금은 1200원에 불과했다. (이하 생략)

## 주요 추진내용

###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체계 개선

농식품 규제 전문가, 농업인 및 업계,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식품 규제 개혁 현장포럼' 운영('15년 발족, 4회\* 운영)

\* 제1차(7.9일, 차관보) : 용인 농도원 목장, 제2차(8.26일, 장관) : 예산 사과와인, 제3차(10.12일, 장관) : 경기 화성 또따따 목장, 제4차(12.16일, 장관) : 충북 진천 대림농장

- 규제현장(예 : 식품공장, 농지, 축산농가 등)에서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제발표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방안 마련
- '15년에 3차례에 걸쳐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진행하여 25건의 규제개혁 건의, 그 중 8건을 수용하여 '16년까지 제도개선 추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인·농식품 기업인 등과 소통 및 공감대 속에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

\* 시·도 농정협의회('15.1.30), 식품·외식분야 규제개혁 간담회(3.25), 외식업체 간담회(6월), 외식품 현장 방문(7월, 차관), 민관협력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회 운영(총5회, 차관), 무허가 축사 관련 협의회(6.30, 10.6, 10.15) 등

-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업계 및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통해 규제 개혁 과제 발굴 및 규제개혁 추진방안 확정
- 장관이 주말마다 직접 현장을 방문('15년 66개 시·군, 111곳)하여 애로사항 청취

규제개혁 신문고 등 온라인을 통해 농업인 등이 규제개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 손톱 밑 규제개선 추진



〈그림 53〉 규제개혁 현장포럼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덩어리 규제개선

전통주 및 식품가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전통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주 생산·유통·판매 규제완화

### ① 전통주 인터넷 판매범위 확대

- 기존 전통주의 통신판매 창구가 제조자, 우체국, aT, 지자체로 한정

#### ▶ 과제 이행노력

도·소매협회는 유통업자 매출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탁·약주 제조중앙회와 막걸리협회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이유로 찬성

→ 장관이 직접 현장방문(김포 문배주 양조원 등 5회)하여 애로사항 청취

→ 국조실 주관 규제기요틴 과제 회의('14.12)를 통해 부처간 협의진행, 전문가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개선책 도출

※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방문 및 협의(8회, '14.4.23일, 5.21, 5.26, 7.2, 8.8, 8.27, 8.28, '15.4월)

- 개선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범위를 기존의 제조자, 우체국, aT, 지자체에서 전통주 제조자 설립 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로 확대

※ (기존) 제조자, 우체국, aT, 지자체 → (개선) 전통주 제조자 설립 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 추가



〈그림 54〉 전통주 농협 쇼핑몰



〈그림 55〉 소규모 탁약주 제조

### ② 소규모 탁·약주 생산판매 허용

- 기존 탁·약주는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가능한 제조시설 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저해

※ 소규모 탁·약주 :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 제조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다른 영업장에 판매가 가능한 탁·약주

#### ▶ 과제 이행노력

기재부·국세청(난립시 세원관리 곤란), 식품의약품안전처(주류 위생)와 관련 과제

→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대상 주류 바이어 간담회('13.4), 막걸리·전통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13.4.5.8), 전통주 규제완화 등 전통주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14.2) 개최

→ 식품외식산업분야 규제발굴 현장간담회('14.5), 전통주 산업활성화(규제완화) 장관 현장간담회('14.6, 충남 서천) 실시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책 도출

※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방문 및 협의(8회, '14.4.23일, 5.21, 5.26, 7.2, 8.8, 8.27, 8.28, '15.4월)

- 개선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여 직접 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탁·약주를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음식점에서 탁·약주 제조·판매가 어려움 → (개선) 탁·약주 제조·판매 허용



〈그림 56〉 하우스 막걸리 보도내용

식품원료 사용 및 가공방법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표준조례 마련

①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 확대

- **기존** 곤충, 한약재 등 민간에서 식·약용으로 이용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먹고 있는 재료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

※ 국내 약용 곤충은 동의보감에 95종 기록, 벨기에는 곤충 10종을 식용 곤충으로 인정('13)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메뚜기, 누에 번데기, 백강잠, 갈색거저리 유충('14.7월)을 식용곤충으로 인정

- 식품위생법령은 새로운 식품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축산물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도록 규정

※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된 부작용이 없는 원료의 경우 독성시험 면제 등 인정절차 및 검사항목 간소화('14.8월)

- **개선**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식용원료로 보다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대상 확대 추진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곤충의 범위를 기존의 메뚜기 등 3종에서 고소애, 귀뚜라미 등 7종으로 확대

※ (기존) 메뚜기 등 3종 → (개선) 고소애, 꽃병이, 귀뚜라미 등 7종

② 홍삼 가공방법 규제 개선

- **기존** 홍삼 제품류 소비가 증가 추세이나, 1~3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등외 등급\* 홍삼은 습점·압착\*\* 금지로 기업의 창의적 부가가치 창출 저해

\* 등외 등급은 홍삼 뿌리삼 생산량(416톤, '13년)의 28%(800억원 규모)를 차지

\*\* '습점·압착'은 홍삼에 습기를 가해 네모진 벽돌형태로 만드는 공정



<그림 57> 곤충요리



<그림 58> 가공 홍삼 (압착홍삼 및 고려태극삼)

- **개선** 홍삼의 가공방법은 소비자 기호에 따라 기업이 선택하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등외 등급 홍삼도 습점·압착 허용

※ (기존) 등외 등급 홍삼은 습점·압착 금지 → (개선) 등외 등급 홍삼도 습점·압착 허용

③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표준 조례(안) 마련

- **기존** 농가의 소자본으로는 식품위생법 상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

-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문성 부족 및 규제완화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로 조례 제정에 소극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는 시장·군수가 농업인 등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가공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보급(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

※ (기존) 식품위생법 상 까다로운 시설기준 적용 → (개선) 완화된 시설기준 적용

전북 무주군의 조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한 사례

**작업장** ① 식품제조·가공 시설과 그 외 용도의 시설은 벽·층 등으로 분리 → 위해발생 우려 없으면 분리 불요, ② 바닥과 내벽은 내수처리 → 작업특성에 따라 예외 인정, ③ 공정별 작업실 분리·구획 → 분리·구획 불요

**급수시설** 수도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공급시설 → 인근 급수시설 또는 필요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로 갈음

**화장실** 수세식, 바닥과 내벽 방수처리 →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 농식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 쌀 관세화에 따라 수출 추천제 폐지

- **기존**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해 추천제를 통해 수출 물량, 가격 등을 제한
- **개선** 쌀을 수출 추천품목 대상에서 제외



〈그림 59〉 쌀 수출 추천제 폐지

〈그림 60〉 원산지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 할랄인증 식품의 인증표시 허용

- **기존** 식품위생법 상 할랄인증 표시 관련 규정 미비로 식품업체 혼선, 할랄식품 부정유통 유발 등 할랄식품 산업 활성화 저해
- ※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민간 인증(할랄인증 포함)의 표시와 광고를 모두 금지

#### 과제 이행노력

대통령 중동 순방 계기('15.3월)로 조성된 민간 수출개척협의회 산하에 할랄분과위원회 T/F를 구성하고, 할랄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6회)하여 과제 도출  
→ BH 고용복지수석 주재회의에 우리부, 식약처가 참석하여 할랄 표시·광고 허용 및 관리방안 논의('15.5.17일)

- **개선** 표시 관련 법령 정비로 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

※ (기존) 할랄인증 표시 관련 규정 미비 → (개선) 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



〈그림 61〉 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개선 전·후 비교

#### 무슬림 도축인력의 국내 취업 허용

- **기존** 할랄식품 생산에 필요한 무슬림 전문가(도축, 도계사) 부족
- **개선** 법무부에서 허용하는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특정업종(E7, 숙련기능) 체류자격 사증 발급 직종에 무슬림 도축인 등 포함 추진
- ※ (기존) 할랄도축장 건립시 무슬림 도축인 확보 애로 → (개선) 무슬림 도축인력 확보 용이

####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 농산물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 **기존** 도매시장의 출하자 보호 등을 위해 경매중심\* 운영 및 중도매인 간 거래금지 등으로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조절 기능이 미흡하고 물류비용 증대 등에 따른 유통 효율성 저하 문제점 노출

\* 도매시장 유통과정 : 출하자 → 도매법인 → 중도매인 → 소매상(소비자)

- 경매는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당일 도매시장에 유입되는 농산물 양의 증감에 따라 가격의 진폭이 좌우되고, 경매 후 물량분산 과정에서 상·하차비 등 유통비용 발생
- ※ 주요 농산물의 50%가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유통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매가격이 농산물 거래의 기준 가격으로 통용

- 경매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12년에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전면 허용하였으나, 경매중심의 거래관행과 인식부족 등으로 확산 부진

\* 정가·수의매매 : 사전에 가격(정가)이나 상대방(수의)을 미리 정하여 거래하는 방식

※ 우리나라 정가·수의매매 비율 : ('12) 8.9% → ('13) 9.9 → ('14.상반기) 12.4

※ 일본(중양도매시장)의 경매비중 : ('90) 64.8% → ('10) 17.1

- 소수(小數)의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함에 따라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등 소매점은 다양 한 품목 군(群) 확보를 위해 다수의 중도매인을 접촉해야 하는 등 유통환경 변화 부응 미흡



- **개선** 정가·수익매매 활성화를 위한 시장사용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및 도매시장내 중도매인 간 거래 허용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
  - 정가수익매매시 시장사용료를 0.5% → 0.3%로 인하하고, 저온저장고 사용료는 5% → 0%(전액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
  - 중도매인 간 거래를 연간 거래액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용

### 농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 농업투자 확대에 필요한 규제 정비

####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기존** 들녘경영체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규모화·고도화 제약요인 존재

\* 연도별 개수 : ('10) 30개소 → ('12) 118 → ('13) 132 → ('14) 158

#### | 사례 | 경남 산청 영실영농조합법인('09년 들녘경영체 구성)

- 기존에는 182ha의 농지를 131농가가 개별경작하였으나, 법인이 공동육묘·방제, 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경영을 통해 비용 절감
- 경종+축산(한우 700마리)+직판장 운영+학교 체험학습 등 6차산업 추진중

-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이 50ha로서 규모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들녘 경영체 선정 및 지원요건 제한 등으로 신규 진입 규제
  - (선정요건) RPC 연계 및 50ha이상의 집단화된 경작지 확보
  - (지원기준) 지원장비의 종류를 3종으로 제한
- **개선** 들녘경영체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 진입요건·지원기준 완화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들녘 경영체를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 ①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직불제 지원 상한을 50ha → 400로 확대
    - ※ (기존) 직불제 지원 상한 50ha → (개선) 400ha로 확대
    - 들녘경영체 평균 경지면적(202ha), 광역방제기 등의 방제능력(400ha) 등을 종합 고려

#### ② 들녘 경영체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 시설(장비) 확대

-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
  - ※ (기존) 50ha 이상의 집단화된 경작지 확보 필요 → (개선) 2~3개의 분리된 농지를 50ha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인정
- 지원시설 및 장비를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등 3종에서 작업기 등 다른 종류의 공동 영농장비도 지원토록 개선
  - ※ (기존)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3종 → (개선) 작업기 등 다른 장비도 지원

#### 산지이용 규제 완화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산림청 협업)

- **기존** 친환경축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지생태 축산 수요가 늘고 있으나, 산지이용 제한으로 활성화에 한계
  - 가축방목 가능 산지 : 준보전산지 및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산지 전체의 74%)
    - ※ **우리나라의 산지 면적** : 641만ha(보전산지 494, 준보전산지 147)
      - 준보전산지 147만ha(23%)
      - 보전산지 494만ha(77%)
        - 임업용 329만ha(51%) : 보존 국유림, 채종림, 임업진흥권역 등
        - 공익용 165만ha(26%) : 그린벨트 공원,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
  - 가축방목을 위한 산지이용 절차
    - ※ 준보전산지(산지의 23%)에서는 신고를 통해 가축방목 가능
    - ※ 임업용산지(산지의 51%)에서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 이행 필요
  - 가축방목 허용 면적이 3ha로 제한되어 규모화에 한계
- **개선** 가축방목 절차 간소화 및 방목허용 면적 확대
  -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에서도 신고제로 전환하여 축산농가의 행정절차 이행 불편 경감
  -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3ha에서 5ha로 확대

〈표 13〉 산지생태 축산을 위한 산지이용규제 완화 주요내용

산지구분	현행	개선
준보전산지	· 신고 · 3ha	· 신고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	· 까다로운 허가 · 3ha	· 5ha로 확대

농식품 부산물이 사료·비료 등으로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환경부 협업)

- **기존** 왕겨, 쌀겨, 볏짚(버섯폐배지 등) 등 농식품 부산물\*은 환경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농가에서 통상적으로 사료, 비료 등으로 이용

\* (농식품 부산물) 곡류의 도정과정이나 농식품 가공품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쌀겨, 왕겨, 전분박, 과일박, 두부박, 버섯배지, 과자박, 제빵박 등

-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은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로 간주하여, 재활용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농가 등 관련 주체의 비용부담 및 부산물 활용도 저하 초래

- 농가는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시설·재활용시설·차량 구비 및 폐기물처리신고 의무화

※ (준수사항) 폐기물처리 신고시 위탁재활용계약서 작성, 3년간 보관의무, 폐기물수탁 거부금지, 초과수탁 금지,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금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준수사항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업체 1천만원 이하, 농가 300만원 이하)

- 기존의 사료·비료제조업체는 원료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이중 규제로 인식

※ 업체는 폐기물처리 관련 기술관리인 및 보관시설, 재활용 시설, 수집 운반차량, 밀폐보관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구비 필요(폐기물관리법)

- **개선**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비료 등으로 재활용 시에는 폐기물처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적용 대상에서 제외

농업법인 등의 투자유치 제약규제 개선

- **기존** 농업인 및 비농업인 출자를 통한 대규모 경영체 육성을 위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로 인해 대다수 조합법인경영체가 영세

※ 영농조합법인 : ('07) 4,624개 → ('12) 10,023 / 조합공동사업법인 : 96개('14.7)

※ 농업법인 영업이익률은 0.7%로 전체 산업의 영업이익률(4.1%)에 비해 저조

- 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외부 자본 등이 투자를 기피
- ② 법적근거 미비로 영농조합법인간 합병 및 대규모 외부 자금의 유치가 쉬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에 애로

※ 합병·분할 또는 법인전환을 위해 청산후 재설립 하는 경우 금융기관 거래, 기존 유통망 상실 등의 문제 발생

※ 청산 후 재설립시 최소 2개월 소요되며 신규설립에 따른 법인세·취득세 등 부담

사례 | 전남 해남 참다래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

-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은 조합원의 무한책임에 따른 투자자 기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대출 거부
- 농업회사법인(주식)으로의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해산후 신규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 및 기회비용(업력 중단, 부채상환, 세금비용 등) 과중으로 포기

- **개선** 농업법인 등의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출자액 한도내로 개선하여 조합원 투자 확대 및 신규 조합원 확보 원활화

※ 영농조합법인 관련 규제개선과 함께 설립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영농조합법인의 건실한 성장기반 마련

- ② 영농조합법인이 기존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영농조합법인간 합병·분할 및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6차산업 사업장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비용절감 및 산업 활성화

- **기존**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 6차 산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 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의무화로 6차산업 경영자의 비용부담 증가
- **개선** 부지면적 2천㎡이하의 농업·어업·입업 관련 가공·유통·판매시설 등은 도로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그림 62〉 6차산업 사업장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제개선 전·후 비교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진입규제를 해소하고, 시설기준 및 입지규제 완화

####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

- **기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가공·유통과 특정 부대사업\*은 허용하고 있으나, 관광·휴양사업은 미포함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부대사업) :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개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

#### 농촌관광·휴양사업 시설 기준 완화

- **기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면적 및 시설 시설기준이 과도하여 농업인의 농촌관광휴양사업을 제약
  - 농촌관련 휴양단지 최소면적 기준(3ha)이 어촌분야(1.5ha)에 비해 과도
  - 농어촌휴양단지에서 전시와 학습을 같은 공간에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전시관과 학습관을 별개로 설치토록 규제

#### ● **개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농촌휴양단지 시설기준은 어촌휴양단지 수준으로 완화(3ha → 1.5ha)
- 농어업전시관에서 전시와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농촌민박에서 음식물 제공 허용으로 민박 활성화

- **기존** 농촌민박에서 식사 제공을 원하는 이용객이 많으나, 식사제공이 허용되지 않아 이용객 불편 초래 및 농촌관광 활성화 저해
  - ※ 농촌민박 : 전국 24,122개소('13년 말)
  - 현행 제도상 식사제공을 위해서는 음식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농촌민박이 주로 소재하고 있는 농림지역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업 신고가 불가
- **개선** 농촌민박의 정의에 '투숙객에 대한 조식제공'을 포함하여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도 조식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

#### 승마산업 규제 개선으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기존**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승마인구가 크게 증가(회원수 '10 : 25천명 → '13 : 45천명)하고 있으나, 초치내 승마시설 설치 제한 등의 승마장 입지규제로 수요 부응에 한계
  - ※ 승마시설을 현행 366개소에서 500개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체 초지면적 37천ha('13년 기준)의 0.1% 수준인 41ha 소요 추정
  - 말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해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특구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갖춘 지자체가 없는 실정
    - ※ (특구지정요건) 말생산·사육농가 50가구 이상,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 가능한 시설 구비
    - ※ (말산업특구 지원내용) 승마시설, 거점조련시설, 인공수정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문 승용마 생산 농장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과 컨설팅 등 집중 지원

- **개선** 초지에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특구지정 요건 완화 규제를 완화
  - (시설기준)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 또는 승마시설이 20개소 이상
  - (생산규모)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 가능한 시설 구비 → 생산·사육 시설 이외에 이용 가능한 시설을 구비해도 인정

#### 산림 내에서의 캠핑·레포츠 등 규제개선(산림청 협업)

- **기존** 산림관광·휴양관련 시설기준 미흡으로 캠핑 및 레포츠 수요를 관련 산업 발전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실정
  - ※ 국내 야영인구 약 120만명, 산업매출 연 4천억원의 시장 형성
  - 산림 내에서는 독립적인 야영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
    - ※ 현행 산림 내에서의 야영장은 자연휴양림 부속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개인 산주의 경우 약 20ha의 산림과 약 5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
- **개선** 야영장의 독립적 설치, 산림 레포츠 활성화 등을 위해 입지 및 시설 기준 마련

####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기존** 귀농·귀촌자는 영농기술 부족, 자본부족 및 담보설정 어려움 등으로 초기단계 정착에 애로
  - 영농기술 및 자금의 부족 등으로 소규모 영농이 불가피한 귀농초기 귀농인에 대한 비닐하우스 자금지원 요건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음
    - ※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요건 : 설치면적 2,000㎡ 이상, 농지 임차기간 10년 이상
  - 담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예비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신보 이용이 제한되어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

- **개선** 농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예비 귀농인도 '농림수산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귀농인에 대한 비닐하우스 자금 지원 요건 완화
    - 면적 : 2,000㎡ → 660㎡
    - 농지 임차기간 요건 : 10년 이상 → 5년 이상
  - ② 예비귀농인이 귀농 즉시 농업창업할 수 있도록 예비귀농인에게도 농신보 이용 허용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단지조성 참여제한 완화

- **기존** 농촌에 신규 주택단지 조성(마을정비사업) 시, 조합구성 요건이 엄격하여 소규모 단지조성이나 법인 참여가 제한
  - ※ 현행 법령상 20인 이상의 세대주(토지등 소유자)들로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여야 신규 주택단지 조성 가능
- **개선**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 완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단지를 조성, 귀농·귀촌인의 손쉬운 주택 마련 지원
  - ①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 완화 : 2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던 것을 5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개선
  - ② 마을정비조합에 민간법인 참여 허용 : 자연인인 세대주에 한정된 조합원 요건을 완화, 토지를 소유한 법인도 조합 참여 허용

##### 맞벌이 농업인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절차 개선

- **기존**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나, 농업인 부부는 맞벌이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과제 이행노력**

부부농업인 맞벌이 인정 여부는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보건복지부(보육사업)의 2개 부처와 관련  
 → 국회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침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 등을 통해 본 규제를 적극 발굴  
 → 여가부, 복지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여가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14.11월) 및 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15.3월) 개정

- **개선**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농업인 맞벌이 증명이 가능하도록 개선



〈그림 63〉 어린이집 입소 절차 개선(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가입 제한 완화**

- **기존** 3ha 이상 농지 소유시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가입 제한

**과제 이행노력**

'14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  
 ※ 가입자 설문조사(4월), 업무담당자 워크숍(6~7월), 전문가 토론회 및 포럼(9월), 농어촌공사 현장간담회(10월), 전국민 대상 온라인 정책포럼(10월) 등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14년말 4회)  
 → 시행령 개정(안) 장관방침('15.4.24), 입법예고('15.6.3~7.13), 법제처 심사('15.9.3~'15.9.21), 공포(10.6)

- **개선** 농지연금 가입을 위한 농지소유면적 요건 폐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서비스 제공**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참여에 불편을 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절차 개선**

- **기존** GAP 인증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하여 안전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 달성이 미흡  
 ※ GAP 재배면적은 전체 농경지 1,711천ha의 3.5%(59천ha)에 불과('14.6월)  
 •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복잡한 서류(12종)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에도 장기간 소요(최대 126일)
- **개선**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하도록 단순화  
 ※ (기존) 구비서류 12종, 인증기간 최대 126일 → (개선) 구비서류 3종, 인증기간 42일로 단축

**농업인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서류 제출의무 완화**

- **기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년마다 1회 이상 토양 중금속 및 수질 분석 실시 및 분석서 보관 의무화  
 • 오염 요인이 없는 지역이나 적합한 농업용수(저수지 등)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지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비용 소요



〈그림 64〉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서류 제출의무 완화

- **개선** 토양 및 용수에 대한 검사결과가 있는 필지\*의 경우 GAP 인증 필수 서류인 토양·용수 성분 분석서 생략  
 \*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관원이 보유한 토양·용수 분석 활용

###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관세청 협업)

- **기존** 농업인이 FTA를 활용하여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수출 제약

\* 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서류 구비 필요

#### ▶ 과제 이행노력

관세청 원산지 증명서 담당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14.5월부터 '농산물인증서'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관세청-농관원 간 원산지증명 간소화 MOU 체결('14.11.28)

\*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농관원-관세청 업무협약, '14.11.28.

- **개선** 국가가 인증하는 '농산물인증(등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지정하여 원산지 증명 간소화에 따른 FTA 활용 확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 4종의 서류에 대해 인정 조치

### 6차산업 발전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국토부, 문화부, 중기청 등 협업)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가공·유통 등 일련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 **기존**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임대차), 가공(공장건축 입지), 유통(광고·표시) 등에 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대폭 단순화 필요

####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지정의 효과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 **개선**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제도를 도입, 입지 등 행정절차는 One-stop으로 처리하고,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일련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

**개선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6.4)에 차질이없도록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제정

농촌융복합산업지구내에서는 행정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일련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



〈그림 65〉 6차산업 발전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관련 규제 완화

### 농한기 등에 농지를 농촌관광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절차 간소화

- **기존**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농한기에 단기간 사용, 농지훼손이 미미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 등의 경우에는 '간소한 신고절차'를 통해 타용도 일시사용

\* 예시) 농한기 등에 마을축제 행사장, 썰매장 등



## 수요자에 대한 규제개선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 정책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내용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정책고객을 농업인 및 기업인, 일반국민(청년층, 중·장년층)으로 분류하여 대상별 관심분야, 활동공간 등을 고려한 매체 활용으로 효과적 정보제공

〈표 14〉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제공 전략

홍보대상	농업인 및 기업인	일반국민(청년층)	일반국민(중·장년층)
홍보전략	현장 밀착형	뉴미디어 활용	기존미디어 활용
홍보수단	간담회, 설명회 및 교육 실시 리플릿 배포, 농협 ATM 홍보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SNS(페이스북 등) 홍보	방송, 신문 활용 홍보

### 농업인 및 기업인 : 현장 밀착형 홍보

(전략) 활동범위 및 공간을 고려하여, 현장 밀착형 정보제공

(수단) 규제개혁 현장포럼 등 간담회, 설명회 및 교육 실시, 각종 행사에 사례집 및 리플릿 배포, 농협 ATM기 활용 홍보

- 간담회 등 : 출입기자 간담회 1회, 현장포럼 3회, 협의회 1회로 총 5회
  - 장관 취임 2주년 일간지 출입기자 만찬 간담회('15.3.11)에서 규제개혁 홍보
  - 장관이 현장에서 직접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주재
    - \* 제1차(7.9, 차관보) : 용인 농도원 목장, 제2차(8.26, 장관) : 예산 사과와인, 제3차(10.12, 장관) : 경기 화성 또너따 목장
  -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5.21, 장관)에서 규제개혁 방안 토론
- 설명회, 교육 : 규제개혁 관련 설명회 6회, 교육 1회로 총 7회

\* 설명회 : 참여형구매제도토론회('15.10.27), 농경연 현장토론회(11.3), 충북 농산사업소(10.29), 소독연구회 학술발표회(6.4일), 특송업체 등 28개소 방문 홍보(9.9~10.7), '농사랑 알리미' 대상 설명회(4.16)

\*\* 교육 : 방제업체 교육시 개선 내용 설명(5.19~20, 7.21~23, 7.24, 7.28)

- 사례집 및 리플릿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규제개혁으로 연대!" 사례집, 규제개혁 주요사례·추석계기 리플릿·직불제 리플릿 6종
  - 농식품 규제개혁 주요사례 리플릿 제작 및 배포(4종, 6000부)
    - ※ 괴산 세계유기농 엑스포('15.9.18~10.11), 농업인의 날(11.11) 등 농업관련 행사에 배포
  - 추석계기 리플릿 제작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2만부 배포(9.26)
  - 직불금 Q&A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3.2~6.15)
- 농협 ATM : 농협 ATM 기기를 활용한 규제사례 홍보
  - ※ 농협 사무소 4,500여개를 활용하여 "농어촌 민박 조식제공 허용" 등 문구 홍보



〈그림 66〉 찾아가는 검역 홍보



〈그림 67〉 농식품 규제개혁 사례집

### 일반국민(청년층) : 뉴미디어 활용 정보제공

(전략) SNS(페이스북·트위터·밴드·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카페 등 뉴미디어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뉴미디어 활용 정보제공

(수단) 인포그래픽, 정책만화 등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SNS, 블로그, 카페 등에 게시

- 인포그래픽 : 규제개선 성공사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규제개혁 BEFORE & AFTER' 인포그래픽 제작·활용  
농업경영체의 농지면적, 재배작목, 경영형태, 보조금 지원 등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기초정보를 DB화하여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기반 구축



〈그림 68〉 '규제개혁 BEFORE & AFTER' 인포그래픽 제작·활용

- SNS : 페이스북(농식품부, 장관님), 카페, 블로그에 규제개혁 사례 홍보 30회



〈그림 69〉 페이스북(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카페, 블로그를 통한 규제개혁 사례 홍보

**일반국민(중·장년층) : 기존미디어 활용 정보제공**

(전략) 방송, 신문 등 중·장년층에 익숙한 기존 미디어 활용

(수단) SBS, MBC 등 TV 보도 다수 진행, 농식품 규제개혁 관련 중앙일보, 아시아경제 등 기획기사 및 전문가 기고 등

- (TV 보도) 하우스 막걸리 허용(8.6일, KBS, SBS),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승계요건 완화 및 대상 농가 지급기준 완화(2.1일, SBS, MBC, KBS, YTN), 수박신선도를 수박꼭지로 판단(4.14일, KBS, MBS, SBS) 등 12건
- (기획기사) 아시아경제 3건, 중앙일보 3건으로 총 6건
  - 농식품 규제개혁 관련 아시아 경제(8.27일, 8.28일, 8.31일/ 3회)
  - 민박 소식제공 등 규제개혁 관련 중앙일보(10.12일, 11.3일, 11.4일/ 4회)
- (기고) 농지 관련, 하우스막걸리 관련, 곤충 식품원료 범위 확대 등 총 4건



〈그림 70〉 규제개혁 관련 기획기사

**대표적 홍보사례**

**꼭지절단 수박 유통 활성화**

(주요 내용) 수박꼭지와 신선도 관계\*, 수박 품질 판단기준, 농가 비용절감\*\* 효과(연간 344~627억원) 등을 매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홍보

\* 연구용역을 통해 수박 꼭지부착 여부가 수박의 당도, 과육의 색, 신선도 차이 등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14.7월, 충남대 산학협력단)

\*\* 생산농가 노동력 및 유통업체 비용 연간 344~627억원 절감(경제적 이익)

- '농사랑 알리미' 대상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설명(230명, 충북 청주,4.16), 꼭지절단 수박 소비 촉진 캠페인(양재동 하나로마트, 4.22) 및 현장인터뷰(SBS 생활경제 등)
- 주요 소비계층인 주부·중장년층을 겨냥하여 꼭지절단 수박판매 홍보용 배너 게시 및 전단지광고(농협유통, 5월), 여성잡지 특별기사(여성동아, 우먼센스 5월호), 아침 종합뉴스 인터뷰(KBS 아침뉴스타임, 6.3일) 등 진행



(규제개선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수박 꼭지절단을 통한 유통 합리화로 인한 생산비 절감(연간 344~627억원) 및 품질정보 왜곡 방지

(국민인식 제고) 꼭지절단 수박 유통 시범사업 및 온오프라인 홍보(보도 자료 배포, 설명회 및 캠페인 진행, 여성잡지 특별기사 게재 등)를 통한 꼭지절단 수박에 대한 개선인식 공감대 형성



〈그림 7〉 꼭지절단 수박 유통활성화 관련기사



### 식품원료 사용가능 식용곤충 확대(기존 3종 → 고소애 등 7종)

(주요 내용) 고소애('14.7), 꽃병이('14.9), 장수풍뎅이 애벌레('15.6), 귀뚜라미('15.9)를 한시적 식품 원료로 인정하여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

\* 곤충산업 규모 : ('09) 1,570억원 → ('11) 1,680 → ('15p) 2,980

- 곤충 디저트 카페(이더블버그, '15.2월), 곤충요리전문점(빠빠용키친, '15.7월, 월 매출액 1,000만원) 등 창업 사례, 곤충한과 등 140종 요리 개발 등 성공사례 위주의 홍보 진행으로 신산업으로 곤충산업 강조
- 2015 곤충요리경연대회 진행(7.17일, SBS 생활경제), 애칭공모(갈색거저리 → 고소애) 등을 통해 식용 곤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 유도

(국민인식 제고) 곤충요리경연대회 진행(7.17일, SBS 생활경제), 애칭공모(갈색거저리 → 고소애) 등을 통해 식용곤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 감소

(규제개선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제4차 규장회의(11.6일)에 곤충요리전문점 대표(김용욱, 빠빠용 키친) 건의 및 후속 홍보(KBS1 인터뷰, 리플릿 배포) 진행으로 추가 규제완화(일반 식품원료로 인정)의 시발점

## 성과

### 식품, 수출 등 규제완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전통주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 (전통주) 전통주의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로 업체 부담 경감, 제품 다양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판매 증대

#### 현장의 목소리

막걸리를 주종으로 하여 판매하고 있는 B씨는 최근 소규모 막걸리를 직접 제조하고 싶어서 시설기준을 알아보았으나, 대규모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규모 탁·약주 제조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마련하여 직접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어 판매가 증대되고, 다양한 막걸리가 출시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통주 인터넷 판매범위 확대 실시에 따른 전통주 판매량 증가로 220백만원의 효과, 소규모 제조 면허 도입에 따른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국내 농산물 소비 증가 및 막걸리 판매 증가로 5,265백만원 경제적 효과 기대

※ 전통주 출고액 : ('11) 415억원 → ('13) 486 → ('16p) 617

#### 현장의 목소리

농협 쇼핑몰에 전통주 판매를 9월 개시하여 1,360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는 등 전통주 판로 다양화 및 판매액 증대로 업체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협 쇼핑몰 MD



### 규제완화로 식품산업 육성

- **곤충산업**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식용곤충 확대로 140여종의 요리가 개발되고 청년들의 창업 사례가 나타나 곤충산업의 신시장 창출
  - 청년들이 곤충 디저트 카페\*, 곤충요리전문점\*\* 등 창업
    - \* 이더블버그('15.2월) : 중앙대 인근에서 고소애 에너지바·누에 쿠키 등을 판매
    - \*\* 뽀뽀옹키친('15.7월) : 고소애 파스타·스프 등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월 매출액 1,000만원 수준
  - 지역 주도로 곤충한과\* 개발, 연세의료원과·농진청 공동으로 곤충 함유 고단백 환자식 개발 등 140종의 요리 개발
    - \* 양미순 닛재한과-예천곤충연구소-지역영농조합 공동개발로 추석기간에 1,500만원 매출
- **식품제조·가공업** 소규모 농가에 완화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적용한 표준조례안 배포로 자치법규 제정이 확산되어 창업비용 절감
  - 완화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자치법규 제정 확산
    - ※ ('14.8월) 10개 시·군 → ('15.10월) 102개 시·군 제정(입법예고 32개 시·군)
  - 작업장 내 공간구분 허용, 식수용 탱크의 급수시설 인정 등으로 평균면적(132㎡) 기준 시 농가당 평균 약 2,000만원의 창업비용 절감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 **쌀 수출 추천제 폐지로 쌀 수출 절차 간소화 및 행정편의 제고**
  - 수출 절차가 간편해 짐으로써 미국 수출업체의 행정편의 제고
    - ※ 연간 80백만원의 규제비용 부담 완화

#### 현장의 목소리

쌀 수출 추천제 폐지에 따라 3,300천불('14년9월)보다 7.5% 상승한 3,543천불('15.9월)이 수출되는 등 추천제 폐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쌀 값 하락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H차장



- **원산지 증명 부담 경감에 따른 수출업체·농업인의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FTA를 통한 농업의 수출 산업화에 기여**
  - 증빙서류 감축(5종 이상 → 1종) 및 사후검증 생략으로 수출 건당 40시간·50만원의 비용절감, 37억원의 경제적 효과 효과
    - ※ 친환경·GAP·이력추적제 및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은 약 32만 농가가 수혜

#### 현장의 목소리

(주)머쉬텍은 친환경 인증 동충하초를 생산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기존에는 동충하초를 수출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원부 등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제출 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사후검증이 생략되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친환경 인증 동충하초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투자 확대 및 농지 이용 효율화

### 들녘경영체의 확대 및 활성화

- **들녘경영체** 들녘경영체의 양적 확산 및 생산비 절감 효과 가시화
  - 총개수/면적 : ('12) 118개/24천ha → ('13) 132/27 → ('14) 158/32 → ('15) 224/51
  - ※ 공동 농작업을 통해 10a당 전국평균 대비 생산비 7.1% 절감 효과('14년)
  - 규모화·조직화의 진전에 따른 경영구조개선으로 논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다각적 경영 형태로 발전
  - ※ 자급률이 낮은 보리·밀 등 동계작물 이모작 추진, 쌀 생산을 줄이고 논콩·조사료 등 생산, 1차 산물만 생산 하던 경영체가 가공·체험 등으로 경영범위 확대

### 농업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 책임 범위 완화

- 조합원 투자 확대 및 신규 조합원 확보로 농업분야 투자 활성화

### 농지이용 효율화

-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첨단 농업투자 및 가공·판매 활성화
- ※ 경제적 효과 55~551백만원

### 현장의 목소리

농업회사법인 N사는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설립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공장조성 총 면적이 27,173㎡, 이중 농업진흥지역에 7,254㎡가 포함되어 전체 공장조성 면적이 허용기준(15,000㎡)을 넘는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되면서, 농업진흥지역 허용면적을 넘지 않아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부지의 총면적 : 27,173㎡
- 계획관리지역 : 19,919㎡
- 농업진흥지역 : 7,254㎡
- 농업진흥지역 허용면적 : 15,000㎡
  - 설치 제한
  - 제도개선시 설치 가능

##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 6차산업 인력에 대한 맞춤형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6차산업 창업자 수 및 인증사업자 매출액 증가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9개소)으로 지구내 업체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714억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 예상

### 현장의 목소리

전라북도 순창군은 소규모 전통장류업체(42개)가 집적화되어 있지만 지역농업과 연계가 미미하고 식당 등 편의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구 내 숙박, 식당 시설 설치가 허용되면서 외식·체험·관광 등 6차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북 순창 장류 지구



- 창업자수(개소) : ('13) 360 → ('14) 392 → ('15) 435
  - ※ 창업코칭, 시제품생산, 컨설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
- 인증창업자 매출액(백만원) : ('13) 747 → ('14) 831 → ('15) 931
  - ※ 인증사업자 선정(342개소)·관리 및 현장규제해소 추진

-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등의 경영체(16만개) 중 건축물 신·증축 계획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8천개 경영체에 수혜가 기대되어 1조 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 현장의 목소리

경기도 용인시의 농도원 목장은 원유 생산 및 치즈만들기 체험을 실시하는 업체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중국·동남아 등 국내외 방문객이 증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유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4m 진입도로 확보의무로 가공공장 설립이 불가하였습니다. 금번 규제개혁으로 유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완공 시 아이스크림, 치즈 등 제품 생산을 통하여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용인 농도원 목장 대표 황○○



# 5 정책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규제완화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정주여건 개선

### 농촌 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자가 크게 증가되고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인원이 증가되어 고령농의 노후 생활 안정 기여
  - ※ 농지연금가입자(누계) : ('12) 2,202명 → ('15) 5,206
  - ※ 연금보험료 지원인원 : ('12) 265천명 → ('15p) 345

#### 현장의 목소리

충청남도 예산시에 거주하는 조00씨(77세)는 총 3.52ha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업소득만으로 병원비 등 노후생활 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농지연금 가입을 원했음, 하지만 3ha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의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하여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5년 3ha이상 소유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소유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고, 매월 2,880,280원 연금을 수령하며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귀농·귀촌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및 농촌 활력 제고

- **귀농·귀촌** 각종 규제완화와 편의 제고로 귀농·귀촌 가구수 증가
  - ※ 귀농·귀촌가구수 : ('12) 27,008 → ('14) 44,586
  - ※ 청장년층(40대 이하) 가구수 : ('12) 10,729 → ('14) 17,611
- **예비 귀농인** 예비 귀농인의 농신보 이용 허용으로 예비 귀농인 신규보증건수 33건, 보증금액 4,773백만원('15.7.21~현재)로 귀농 부담 완화

#### 현장의 목소리

금산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려던 40대 L씨는 우선 입소대상자가 39세 미만으로 제한되고, 체류기간이 1년으로 길어 입소기회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16년에 6개월 과정으로 입소를 할 수 있게 되어 귀농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 금산군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입소대상자 L씨

## 주요 추진내용

### 농식품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농식품 기업의 창업·기업 경영활동 활성화 유도를 위해 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이용 편의성 제고 및 데이터의 질적 수준 향상

-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공하는 농식품 공공 데이터 포털 (<http://data.mafra.go.kr>) 구축



〈그림 72〉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표 15〉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구분	데이터	서비스 제공 형식					
		합계	grid	오픈API	원문파일	원시파일	링크
농림축산식품부	125	334	102	102	83	46	1
소속기관	59	164	40	40	41	31	12
산하기관	137	435	129	129	66	64	47
외청, 농경연	86	116	12	12	19	7	66
합계	407	1,049	283	283	209	148	126

※ 15개 기관, 407종('15.11)의 데이터를 수집·융합하여 민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

※ grid : 표 형태의 데이터, 오픈API : 데이터 호출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하여 공개

- 민간의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업 강화 및 창업지원 등 추진
  - ※ (기관간 협업) 농식품부 본부, 소속·산하기관, 외청(농촌진흥청, 산림청), 유관기관 등 데이터 연계, 제공데이터 품질 제고 등 추진
  - ※ (민관협업)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기업 설명회, 수요조사, 이용활성화 포럼 운영 등을 통해 활용사례 발굴 및 전파

\* 활용사례 : (피그플랜 서비스) 돼지 등급판정 데이터와 사양관리 데이터 융합, (한우수정관리업) 쇠고기 이력정보 (수급관리) 농수산물 가격정보, (경제사업평가) 도매시장 경락정보 등



〈그림 73〉 관계기관 협의회 및 기업간담회 개최

※ (경진대회 및 창업지원)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및 사업화 사례를 발굴하고 창업 공간 및 컨설팅 제공\*,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

\* 창조혁신센터와 협업, 특허관련 지원 등 맞춤형 지원

•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원시데이터 제공



〈그림 74〉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표 16〉 농수산물 가격정보 개방 현황

개방DB	주요 항목	건 수	개방시기
도매시장 경락DB	경락일자, 경매시간, 경매구분코드, 경매구분코드명, 시장코드, 시장명 등 46개 항목	894백만건	2015.11.30
농수축산물 조사가격DB	조사일자, 조사구분코드, 조사구분명, 품목코드, 품목명, 조사가격품목코드 등 21개 항목	15백만건	2015.11.30
농협 산지공판장DB	경락일자, 경매시간, 시장(공판장)코드, 시장(공판장)명, 구법인코드, 구법인명, 경매구분코드 등 42개 항목	129백만건	2015.11.30
수협 산지위판장DB	경락일자, 경매시간, 시장(위판장)코드, 시장(위판장)명, 구법인코드, 구법인명, 경매구분코드 등 18개 항목	9백만건	2015.11.30

## 귀농·귀촌, 식품안전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on-off line을 병행하여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체계 개선

- 귀농·귀촌 희망자의 상당수가 수도권 거주함을 고려하여 귀농·귀촌 정보제공,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서울로 이전('14.7)하여 정보제공 및 상담
  - 귀농·귀촌 준비에 필요한 사항 상담, 귀농 자가진단서비스 등 제공
  - 시·군 등 지자체별 귀농정보(소식, 지원내용), 시·군별 상담자 연락처 안내, 빈집정보, 귀농·귀촌 교육정보 등 제공
- 온라인을 통해 농식품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귀농·귀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 유관기관 홈페이지 정보연결을 통한 다양한 귀농·귀촌관련 정보 제공
    - ※ 귀농·귀촌관련 활용정보 연계 : 귀농자료실(농촌진흥청), 농지정보, 농촌주택표준설계(농어촌공사), 지하수정보(지하수정보센터), 재능뱅크(농어촌자원개발원), 농업인력포털, 6차산업(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통계(통계청)
- SNS 등을 활용하여 귀농지원정책, 귀농교육, 귀농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농지·주택, 임업 등 실시간 상담지원



〈그림 75〉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실적('15.12)

- ※ 홈페이지 이용자 : 전년대비 일평균 이용자 98% 증가('14.7~12 : 1,100명 → '15.12 : 2,182), 누계 이용자('14.7~12 : 157,335명 → '15.12 : 778,652)
- ※ 상담 건수 : 전년대비 일평균 상담자 62% 증가('14.7~12 : 45명 → '15.12 : 73), 누계 상담자('14 : 10,530명 → '15 : 18,094)
- ※ 온라인상담 개설 운영('15) : 39명 온라인상담 지원
- ※ 귀농귀촌 온라인 강의 연계(71개 과정) : 수강자 151.4% 증가('14 : 33,164명 → '15 : 83,376)



〈그림 76〉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모습

###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 모습

- ※ 귀농귀촌 콘텐츠 확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 귀농귀촌 Q&A, 세제지원, 귀농닥터, 온라인상담, 귀농인의 집, 현장 실습교육, 지하수정보, 귀농귀촌강좌신청,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소그룹강의 신청, 귀농귀촌 통계

### 농산업 일자리와 도시 유휴인력의 연계를 위한 구인·구직 정보시스템(<http://www.agriwork.kr>) 개발('15.1~4)·운영('15.5~)

- 워크넷(고용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서울시), 사람인, 100세누리 등 공공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사전 탐색 기회를 제공
- ※ 농번기 일손부족 899농가와 도시 구직자 6,835명을 연계(누적 28,967건, 15.5~10월)

### 소비자에 대한 농식품 안전 및 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 농식품 안전·소비·식생활 등 다양한 농식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 정보누리([www.foodnuri.go.kr](http://www.foodnuri.go.kr))' 운영('14.1~ , 16개 기관 협업) 및 모바일 앱 개발·운영



〈그림 77〉 농식품 정보누리 홈페이지

〈표 17〉 농식품 안전 및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방식 개선

기존 방식 (AS-IS)	개선 후 (TO-BE)
<b>분 산</b> 농식품 관련 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 소비자 불편 초래 <b>공급자</b> 공급자 중심의 농식품 정보 제공 <b>협 업</b> 정부기관	<b>원스톱</b>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식품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원스톱 제공, 국민편의 제고 <b>수요자</b>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보 및 서비스 제공 <b>협업·확산</b> 정부기관 및 민간 대표 포털 네이버가 인정하는 농식품 전문 정보

\* 연계현황(누계) : ('13) 7개기관 / 8사이트 → ('14) 12 / 16 → ('15) 16 / 21

〈표 18〉 주요 기관별 농식품 안전 및 식생활 관련 주요 정보제공 내용

협업기관	주요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소비식생활 정책 및 농식품정보누리 운영 총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기관간정보연계(식품안전정보원) 모듈개발, 콘텐츠 및 서비스 제휴 추진 ▪ 농식품정보누리 개발 및 운영 ▪ 대국민 서비스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부적합화수/폐기, 식품위해정보, 모범음식점, 식품원재료 서비스 제공
대한영양사협회	▪ 영양클리닉, 바른 식문화 콘텐츠 제공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위생교육, 좋은식품 콘텐츠 제공
한국식품연구원	▪ 식품분석 및 검사 신청 서비스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소비자활동, 보도자료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알뜰장보기, 가격정보 제공
농촌진흥청	▪ 향토음식, 식단관리정보, 소비자 패널조사정보 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식품 소비생활연구 동향 및 정책자료, 소비자행동패턴 정보 제공
농협중앙회	▪ 푸드코디네이터, 녹색밥상 정보 제공
한국소비자원	▪ 생필품 가격 콘텐츠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비교정보, 안전·위해정보 제공
식생활교육네트워크	▪ 식생활지침, 식생활교육 콘텐츠 제공

### 농식품 공공기관 및 농협 개혁

농식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고, 기관 간 기능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관별 핵심 고유기능에 대한 성과 극대화

(1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9개 공공기관 대상 방만경영 중심으로 8대 항목 110개 개선과제를 선정 ('14.2)하여 추진 완료('14.11.27)

※ 방만경영 8대항목 :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복무태도, 유가족특별채용, 경영/인사, 기타

〈표 19〉 기관별 주요 개선내용

구 분	기관명	개선과제수	주요내용
중점 관리 기관	한국마사회	30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제외, 고용안정위원회 폐지 및 노사대표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처리 변경 등 30개과제 개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4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제외, 명예퇴직금 기준급어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등 34개과제 개선
자율 관리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10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제외, 구조조정위 합의를 협의로 조정 등 10개과제 개선
	농림수산물 기술기획평가원	4	공상·순직시 퇴직위로급 지급 폐지 등 4개과제 개선
	축산물 품질평가원	5	업무상 부상 및 순직시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등 5개과제 개선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	7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및 특별휴가(5일) 부여 폐지 등 7개과제 개선
	가족위생방역 지원본부	2	업무상 재해로 퇴직시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등 2개과제 개선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14	심신단련휴가(5일) 및 장기근속자 안식휴가(5~17일) 폐지, 병가일수(60일) 축소 등 14개과제 개선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4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6개월→1개월) 개정 등 4개과제 개선
합 계	110		

(2단계) 기관별 기능조정 중심으로 개혁 추진 중('15.7~)

- 기관별 유사·중복 업무는 일원화하고, 기관의 핵심고유 기능과 거리가 있는 사업은 축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역할분담하여 추진 중인 직불제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경영이양직불제 제외)하고 농업경영체 DB와 연계하여 이행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보조금 누수 방지

〈표 20〉 직불제 기관간 역할분담

기존 방식 (AS-IS)	개선 후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발농업직불제(동계작물 제외), 친환경농업직불제</li> <li>○ 한국농어촌공사 : 쌀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발농업직불제(동계작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이양직불제를 제외한 전체 직불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li> <li>* 경영이양직불제 : 업무성격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주체로 제외</li> </ul>

- 홍보 및 교육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미디어 홍보분야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으로 일원화 하고, 교육은 기관별 핵심기능을 고려하여 전문화
  - ※ 기관별 교육 전문화 분야 : 농수산물유통공사(유통·마케팅교육),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가·농대생교육), 농어촌공사(농지은행교육), 한식재단(한식세계화교육)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가 운영하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한국벤처투자가 운영중인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통합하되, 통합의 방법, 수준 및 시기 등은 2개 기관 운영역량을 평가한 후 최종 확정
  - ※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역량평가 연구용역 추진 중('15.12~'16.4)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곡물조달시스템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원마을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신규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사업의 분양률 제고에 중점
-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양함으로써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개선 및 경제활성화 도모
  - 한국마사회의 테마파크 및 승마교실은 민간에 위탁하고, 유희자산은 매각 추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시장(AT컨벤션) 운영사업은 민간위탁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의 SOC분야에 대한 설계·안전진단·감리 등은 민간에 위탁하고, 공사 채권발행을 통해 추진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및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전환
    - ※ (설계·안전진단)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30억원 이하 공사는 민간 개방
    - ※ (감리) '16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개방 실시('16 : 5% → '17 : 10 → '18 : 20)

-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과도한 지원부서의 조직과 인력은 감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재배(수급안정), 산지 APC 지원 및 성과부진 도매시장 위탁운영(유통효율화)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계약재배는 농협과 제한적 경쟁체제 구축
  - 한국마사회는 지원조직을 축소하여 경마 및 말산업 육성 업무 추진 조직을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일반직 인력을 기사직으로 단계적 전환
    - ※ 기사직 비율(%): ('15) 52 → ('16) 54 → ('17) 56 → ('18) 58 → ('19) 60
    - ※ 인원(명): ('15) 50 → ('16) 90 → ('17) 130 → ('18) 170 → ('19) 210

**농협 경제사업의 농협 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제약사항 해소 및 중앙회 경제사업의 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완료('15.2)**

- '14년에 경제사업의 이관 과정에서 경제지주의 조합 자금지원, 계통거래 시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와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 제한 등 법적·세무적 쟁점 대두
  - 사업계약요인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
-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협법 개정('14.12.31)을 통해 경제사업 이관 시 법적·세무적 제약사항을 모두 해소
  -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농협, 농민단체, 국회, 언론 등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
- '15.2.28일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주)농협하나로유통, (주)농협양곡 설립, 식품·청과·도매 등 6개 사업 부문을 경제지주로 이관 완료
-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 및 투자계획 변경을 통해 경제사업 확대 기반 마련
  - 경제사업 투자에 대해 동종업계 비교를 통한 생산성 및 생산자·소비자 편익증대 효과 평가, 투자계획 성과 평가 등 평가지표 개선
    - ※ 로컬푸드 직매장 거래('12 : 38억원 → '13 : 662), 계열화 판매('14.8 : 1조원 → '15.8 : 1.3)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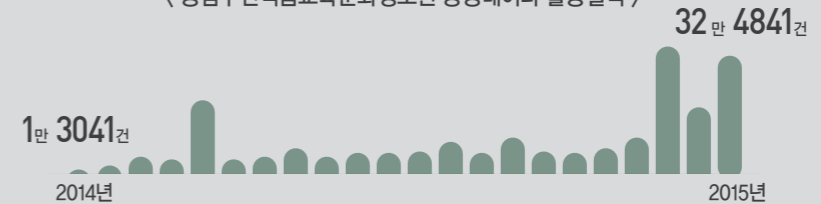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사례 발굴 등으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매출액, 앱 활용 회원수 등 증가
  - ※ 피그플랜 서비스 매출액 : ('12년) 167백만원 → ('13) 204 → ('14) 280
  - ※ 한우수정관리앱 : '14.7월 오픈이후 3개월 만에 사용자수 470명, 다운로드 1천건 기록
-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으로 안정적 사용기반 확보
  -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정비, 데이터 품질개선 등
    - ※ 가격정보 OPEN-API 호출건수 : ('14.1월) 30만건 → ('15.1월) 64 → ('15.10월 현재) 139

**머니투데이, '15.11.25일 기사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분야 활성화 이끈다”**

“#사례2. 종업원이 3명에 불과한 (주)미트웨어에게 정부의 축산 공공정보는 매출확대의 '일등공신'이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미트웨어는 2013년 1억 7,000만원에서 2014년 2억 7,000만원을 기록, 연매출 규모가 159%나 증가했다. 다른 업체들보다 발빠르게 공공데이터포털의 축산관련 공공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자체개발한 통합정보시스템에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의 등급판정 정보를 연계해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자체 공공데이터포털(data.mafra.go.kr)을 개방해 농수축산물 경락 및 조사가격 정보 5종 35개 서비스를, 축산물의 경우 등급·이력·유통정보 3종 22개 서비스를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생산농가, 포장처리업체, 물류유통업체, 판매업자들의 매출증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적지 않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의 창업 아이디어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는 농식품부 자체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스마트 영농일지 '파밍'이 본선에 올라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공공데이터 활용실적 〉





귀농귀촌종합센터' 정보제공 및 종합상담 등을 통해 귀농·귀촌 가구수 지속 증가 및 일자리 정보제공을 통한 농가와 도시 구직자간 일자리 연계

- 상담 건수 : 전년대비 일평균 상담자 62% 증가('14.7~12 : 45명 → '15.12 : 73)
  - ※ 누계 상담자 : ('14 : 10,530명 → '15 : 18,094)
- 홈페이지 이용자 : 전년대비 일평균 이용자 98% 증가('14.7~12 : 1,100명 → '15.12 : 2,182)
  - ※ 누계 이용자 : ('14.7~12) 157,335명 → ('15.12) 778,652
- 귀농·귀촌가구수/40대 이하 가구수 : ('12) 27,008호/10,729 → ('14) 44,586/17,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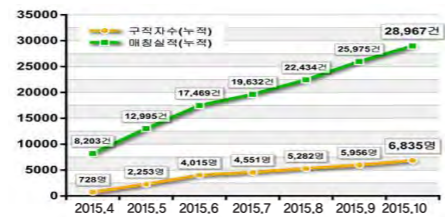
아시아투데이, '15.5.19 "[귀농귀촌 시리즈]손품만 팔아도 좋은 정보를..."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는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집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손품'을 팔면 해결이 가능하다. 무작정 새집을 짓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농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면 원하는 집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보다 쉽게 농촌지역의 빈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농촌 빈집 찾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접속해 '지자체 빈집정보'를 선택한다. '지자체 빈집정보'에서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지자체별로 농촌지역의 빈집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소재지를 선택하면 정보제공자, 지역, 면적, 건축년도, 구조, 빈집발생시기, 매매현황, 거래 참고사항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귀농귀촌 지자체관 검색'을 선택하면 지도를 통해 해당지역의 지자체 홍보관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홍보관에서는 각 지역의 귀농귀촌지원센터 연락처·농지 및 빈집정보·각종 지원정책 등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 농업·농촌 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15.10 현재, 899개 농가와 6,835명의 구직자간 매칭을 통해 28,967건의 일자리를 연계



<그림 78> 농업·농촌 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일자리 연계실적

관계기관 및 민간 부문과 협업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식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방문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검색·활용 편의 증진

- ※ '13년~'15년(3년간) 16개 기관 21개 사이트와 농식품정보누리 연계
- ※ 농식품 정보누리(www.foodnuri.go.kr) 접속 인원 : ('12) 168천명 → ('14) 378

조선일보, '15.9.24일 기사 "농식품정보누리로 아이들 먹거리 걱정 뚫!.. 정부3.0 생활을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비·식생활 관련 정보 사이트 '농식품정보누리(www.foodnuri.go.kr)'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농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의 대표적인 서비스다...어린이집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연희(30)씨는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는 일이 주요 업무다. 그래서 음식의 영양과 위생, 기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연령대별 식단, 편식 예방, 균형잡힌 영양 제공 등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그녀의 걱정을 덜어준 게 바로 '농식품정보누리' 사이트다. 알뜰장보기 정보부터 식재료 고르는 법과 조리하는 법, 안심 먹거리까지 세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알뜰 장보기'코너에서는 한 주 동안 어떤 식품가격이 오르고, 어떤 식품 가격이 내렸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오씨는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주부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이행(110개 과제) 결과 1인당 복리후생비 37% 축소

- ※ 1인당 복리후생비 절감 : ('13) 292만원 → ('14) 184만원 (37% 감)
- 또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년간('16년~'17년) 800여명의 청년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전망



# 6 신명나고 보람 있는 일터 만들기

## 주요 추진내용

### 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업무추진체계 개선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이 분산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관 간 소통 및 협력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영상회의 활성화

- 영상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무이용대상 영상회의 지정 확대 및 평가 강화 등 조치
- 영상회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여 대면회의 참석 등을 위한 출장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집중 시간을 확보함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 등

※ 영상회의 실적 : ('13) 125건 → ('14) 3,616 → ('15) 7,108



〈그림 79〉 영상회의 모습

### 실·국장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장·차관 결재사항을 대폭 위임하는 방향으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15.6월)함으로써 형식적인 보고·결재 관행을 개선하고 서울 등으로 출장 가서 장·차관께 보고·결재해야 하는 업무 최소화

• 장관 결재사항 조정 : (기존) 112건 → (조정) 76(32% 감축)

※ 주요 핵심정책의 기본방향·기본계획 수립 및 법령·예산·조직관련 주요사항 위주로 조정

• 차관 결재사항 조정 : (기존) 158건 → (조정) 104(34% 감축)

※ 개별 세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반복적·일상적인 사항, 조직 내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임

〈표 21〉 위임전결 조정 내역

구 분	장관결재		차관전결		실장전결		국장전결	
	기존	조정	기존	조정	기존	조정	기존	조정
전결사무 (건)	112	76(△36)	158	104(△54)	46	91(+47)	439	494(+55)

## 농식품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조직 및 인력구조 재편

새정부 핵심과제의 성과창출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조직 개편('15.1)

〈표 22〉 주요 조직 개편 사항

기 존	개 편	조직개편 내용
기후변화대응과	창조농식품정책과	대체 신설 - 창조농업육성, ICT 융복합
재해보험팀	재해보험정책과	정식기구로 개편 - 농가경영안정기능 강화
수출진흥팀	수출진흥과	정식기구로 개편 - 농식품 수출지원 기능 강화
-	친환경축산팀	한시조직 신설 - 친환경 축산정책 기반 구축
-	농기자재정책팀	한시조직 신설 - 농기자재 산업육성 기반 구축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맞춤형 농정 등 핵심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인력 보강

- '15년 33명 증원, 30명 직급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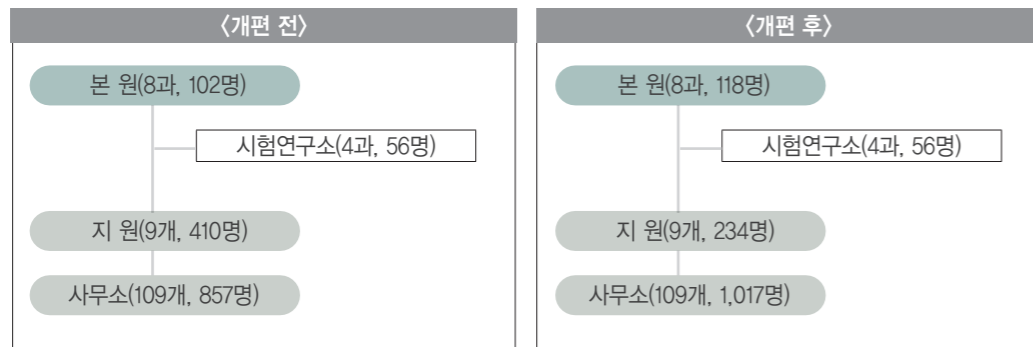
※ 증원(33명) : 농림축산식품부 6명, 농림축산검역본부 23명, 농산물품질관리원 4명

〈표 23〉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증원 현황

기관명	구 분	사 유	인원	직 급	비고
농림축산식품부	인력증원	남북농업협력강화	2명	5급1, 6급1	
		농식품 수출정보관리	1명	5급1	
		개인정보보호강화	1명	5급1	
		AI정책기능강화	2명	5급1, 6급1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구신설	AI예방통제센터	9명	4급1, 5급4, 6급3, 7급1	
	인력증원	검역탐지견운영인력	4명	전문경력관4	
	기구신설	구제역백신연구센터	10명	4급1, 5급1, 8급1, 연구관3, 연구사4	수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증원	맞춤형농정과	4명	4급1, 5급1, 6급1, 7급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기능 대폭 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간조직인 지원(支院)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감축된 인력을 현장사무소로 재배치('15.11.13 직제개정)
- 지원에서 176명을 감축하여 현장 사무소에 160명을 재배치 하고, 나머지 16명은 인사, 회계·경리 등 공통업무 수행을 위해 본원에 재배치



〈그림 80〉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 개편 전·후

### 칭찬 릴레이 사례

- 제42호 칭찬대상자 △△△ 주무관 (칭찬자: 제41호 △△△국장)
- 칭찬내용

저는 축산정책과에 근무중인 ○○○주무관을 추천합니다. 저는 ○주무관을 14년전 기획실에서 근무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획실이라는 곳이 밤새워일하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주무관을 비롯한 직원들과 밤새고, 휴일에도 출근하고, 새벽에도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주무관은 당시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로써 1인 4역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싫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그 많은 일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오히려 바쁜 일상속에서도 밝은 목소리로 동료들과 함께 호흡하며 과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씩씩하게 사무실에 출근하며 명랑한 아침인사를 건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비록 빛도 나지 않고 생색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홍주무관 같은 분이 묵묵하게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시기 때문에 우리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제대로 고맙다고 인사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덕분에 그 힘든 시기를 잘 넘겨왔다고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 성과

영상회의 문화 정착 및 확산·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무이용대상 지정 확대,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강구·시행하여 전년 대비 영상회의 실적이 대폭 향상되어 시간·비용 절감 효과 제고

- 영상회의 실적 : ('13) 125건 → ('14) 3,616 (1,892.8% 증)
  - ※ '14년 영상회의 활성화 유공기관 선정('14.12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 '14년도 나라e음 활용 PC영상회의 건수는 전체 부처 중 1위

### 직원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하는 내부 직원 간 소통, 단결 및 결속을 강화하고, 격무에도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도록 '칭찬 릴레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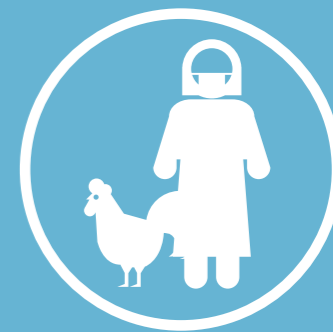
- 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인 부분을 모두 포괄하여 칭찬
  -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부망 지식포털에 별도의 '칭찬 릴레이' 창을 개설하고, 장관실 앞 복도에 '칭찬트리'를 만들어 사진과 칭찬 내용 게시
  - ※ '13.5월~'15.12월말 기간 중 총 105명이 칭찬 받았으며, 계속 이어가는 중



〈그림 81〉 직원 칭찬트리 사진

# IV

## 향후 과제



###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부처가 구축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생성 및 맞춤형 농정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농식품 유관기관과 관계부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하는 등으로 빅데이터 생성 기반 구축

※ 농식품 유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체 DB, 스마트팜 맵 등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농촌진흥청)휴토타 시스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산물관측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물관리시스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제곡물가격정보시스템

※ 관계부처 : (행정자치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건강보험료 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입력이 편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지속적인 현재화 및 신뢰성 제고

데이터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메타데이터 생성기반을 구축하여 맞춤형 농정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인 및 민간 농식품기업의 경영활동 이용 지원 서비스 활성화

###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농업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추진체계 개선

시·군단위 농업·농촌 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방 농정 추진체계 정착

-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예산 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ICT·SNS 등을 활용한 기술 및 정보교류 플랫폼 구축 확대

### 농촌에서의 소득감소 → 젊은 층 유출 및 고령화 → 일자리 감소 → 활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외부의 전문인력·기술·자본의 유입 촉진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예산을 확대하고, 지역의 각 주체들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체계 검토

농업분야 자체적으로 농고, 농대, 농수산대학 등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정교화하고, 새로운 시장개척 지향적 농업경영체 육성 강화

농업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규제개선 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적용되도록 홍보강화 및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생태농업 및 로컬푸드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

주곡인 쌀 수급안정을 강화하고, 쌀 비축 등을 위한 양곡창고 현대화

축산분뇨 악취제거 기술개발 및 적용을 강화하고, 분뇨자원화를 통한 에너지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 농산물안전성 관리 강화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행정역량 강화 필요**

FTA 농어촌상생기금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민들이 농업·농촌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회사소,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농식품정책이 농업인 등 정책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현장의 의견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쌍방향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정책고객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ICT 기반의 행정업무 및 정보제공 지원 플랫폼 개발  
농식품 재정사업 집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누수 방지

**농업·농촌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제도적 장치 마련**

농식품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환류 등의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추진체계 유지·발전  
정부정책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관련정책 지속개발

**농업협력을 통해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에 대비한 식량정책 마련**

신뢰와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중장기적 농업·농촌 발전을 유도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젝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한 남북 농업협력 체계 유지  
통일에 대비하여 적정 식량공급 기반유지를 위한 농지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논 범용화 기반 구축 병행

**농식품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조직·인력 체계를 재정비하고, 농식품 유관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 필요**

글로벌 농정을 지향하고, 쌀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품목 및 6차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개척, 전후방 기자재산업 육성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뒷받침에 유리한 방향으로 농정추진 체계 재정비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고유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조직체계 재편

농식품 분야의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재정립하여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정책시행의 효과성 제고

농협은 농업인의 농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사업을 조기에 활성화 하도록 지속적인 개혁 추진

-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 일선조합 발전방안 마련
-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중앙회·지주체제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등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업구조개편의 차질 없는 마무리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산지 농·축협의 50% 이상을 중앙회가 책임지고 판매함으로써 경제사업 활성화 도모  
※ 중앙회 판매 비중 : ('11) 10% → ('14) 19 → ('15) 21 → ('16) 26 → ('20) 50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식품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방안 지속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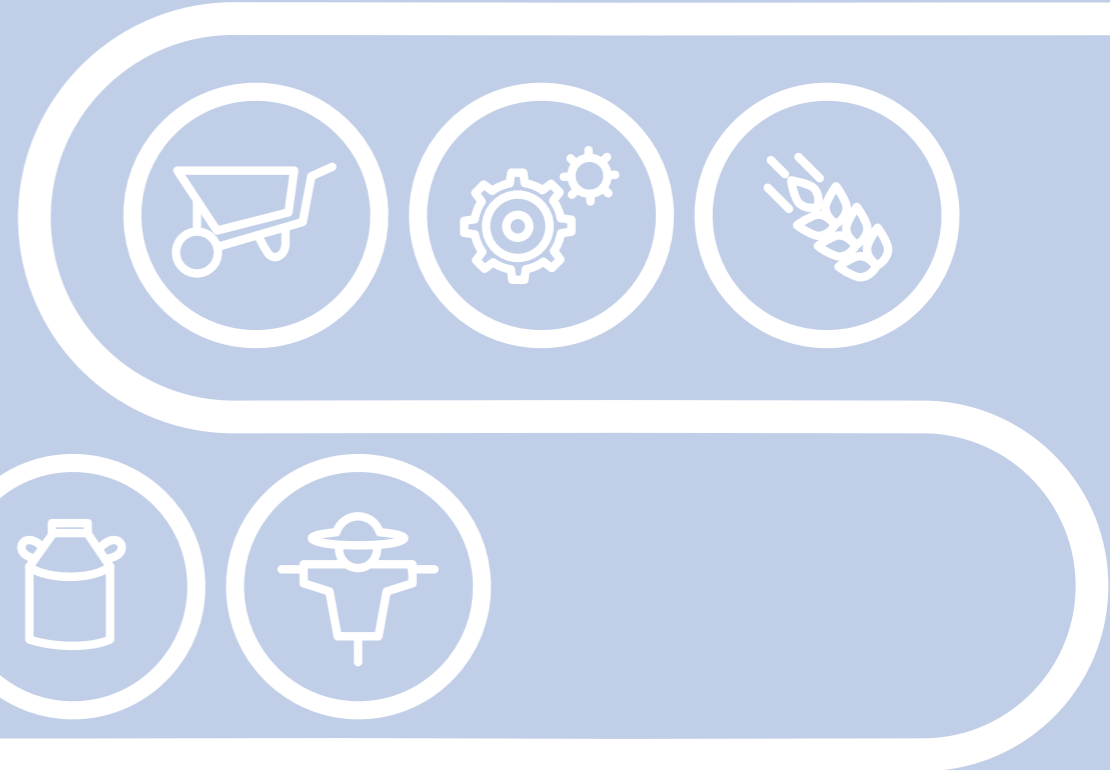
국회 대응 효율화, 출장 대면보고 최소화 및 영상회의 활성화, 직원 사기진작 방안 등

〈부록〉

# 박근혜정부 농정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21선

- 1 농정의 소통 · 공감 활성화 노력 사례
- 2 과학적 · 합리적 농정 추진 사례
- 3 민 · 관 협업을 통한 일 잘하는 농정 추진 사례
- 4 규제 개선에 의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제 활동 촉진 사례
- 5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사례





## 1 농정의 소통 · 공감 활성화 노력 사례



- 1-1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설치 · 운영
- 1-2 현장에 답이 있다
-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SNS소통



❶-1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설치 · 운영

# 참여와 소통에 의한 공감농정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초석

## 효과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 ('13~'17)의 실효성 확보
- 농업 · 농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 농정의 신뢰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3.4월부터 민·관 공동위원장 중심으로 생산자단체 · 식품단체 · 소비자단체 · 일반국민 · 학계 및 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등 170여명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중에 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중에는 일반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원봉사자, 컨설턴트, 이장, 현장 농업인 등 16명의 일반국민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①행복 농촌 ②희망 농업 ③식품·소비자 ④국민 축산 ⑤스마트 농정 ⑥유통특별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와 15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13년에는 박근혜정부 농정의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13~'17)' 수립을 위해 76차례에 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바 있다. '14년 이후에는 11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쌀 관세화, FTA협상,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예산편성 방향, 농식품 수출, 가축방역대책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국민농업현장 제정,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 등 다양한 농정이슈를 논의하였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농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농정신뢰도를 높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농정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농업·농촌의 현장을 발로 뛰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장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1달에 2번 이상 현장을 찾고, 3시간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4람들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이동필의 1234'는 어린이가 처음 1234부터 배우듯 기본에 충실한 농정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이동필 장관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동필 장관은 박근혜농정 4년차를 맞이하는 지금도 매주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 단체, 관계기관 등의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실질적인 우수사례공유, 정책성과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필의 1234'를 통해 방문한 지역은 지금까지 총 571곳이며, 이동 거리는 196,723km에 달한다.

또한, 단순히 현장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정책제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이동필장관이 다시 직접 챙기고 있다.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동필 장관의 현장소통과 공감을 위한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❶-2 | 현장에 답이 있다

# 한달에 두번 이상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효과

- 농업 · 농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는 기회 마련

①-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SNS소통

#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에 가까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하루에 한 건 이상의 농정소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소개하고, 다양한 댓글에 답글을 다는 등 공감을 통한 농정신뢰회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친구 한명으로 시작한 이동필 장관의 페이스북은 2015년 12월 현재, 4,600여 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주 약 20,000여 명의 사람들이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농촌·농업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한, 정책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13년 8월부터 '농정소통시스템'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처음 6,281명의 정책고객과 시작한 '농정소통시스템'은 현재 36,652명의 정책고객과 함께 새로운 소식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고객을 일반국민과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콘텐츠 제작하고, 답장 기능을 활용한 '정책 제언' 메뉴를 신설하는 개편작업을 통해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2015년 8월에는 이동필 장관의 페이스북 계정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한 언론에서



“국민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한 장관”으로 이동필 장관이 압도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해당 기사에서는 총리를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의 페이스북을 분석한 결과, 이동필 장관의 페이스북의 경우 ‘게시글’, ‘좋아요’, ‘댓글’, ‘답글’ 등 모든 부분에서 다른 장관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확고한 차이를 보이며 1위를 기록하였다고 평가했다. 평소 이동필 장관의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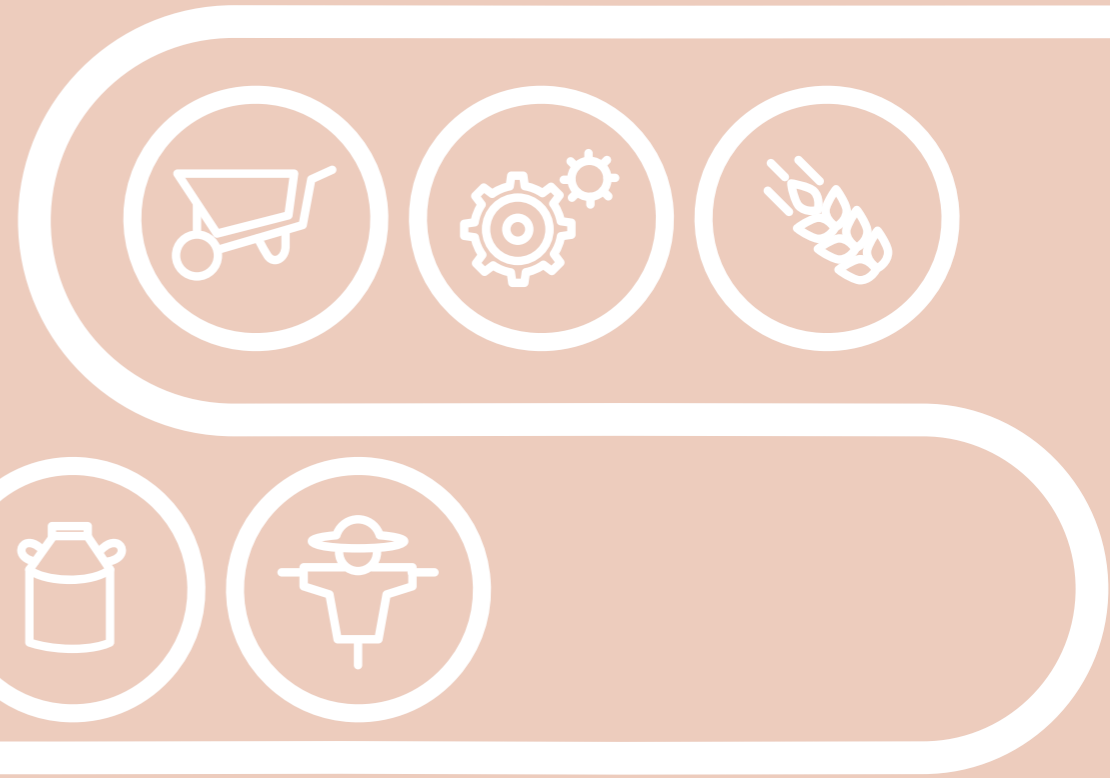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새농이’ 역시 농식품업 현장과 생활속에서 농정에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는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블로그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정부 부처로는 유일하게 ‘마케팅상’을 수상 하였다. 새농이의 누적방문객은 이제 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이해받고 사랑받는 농업·농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농정신뢰회복’을 위해 더 열심히 소통하고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효과

- 농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국민의 참여 · 소통을 통한 농정신뢰도 제고





## 2 과학적 · 합리적 농정 추진 사례



- 2-1 경영체 DB로 과수화상병 대응
- 2-2 경영체 DB로 보조금 이력관리
- 2-3 농업경영체 맞춤형 사업지원
- 2-4 농업인 증명 종이서류 폐지
- 2-5 스마트팜 맵을 활용한 농정집행

## ①-1 | 경영체 DB로 과수화상병 대응 경영체 DB 활용하여 과수화상병 위험농가 신속확인, 방제조치 질병확산 방지

### 효과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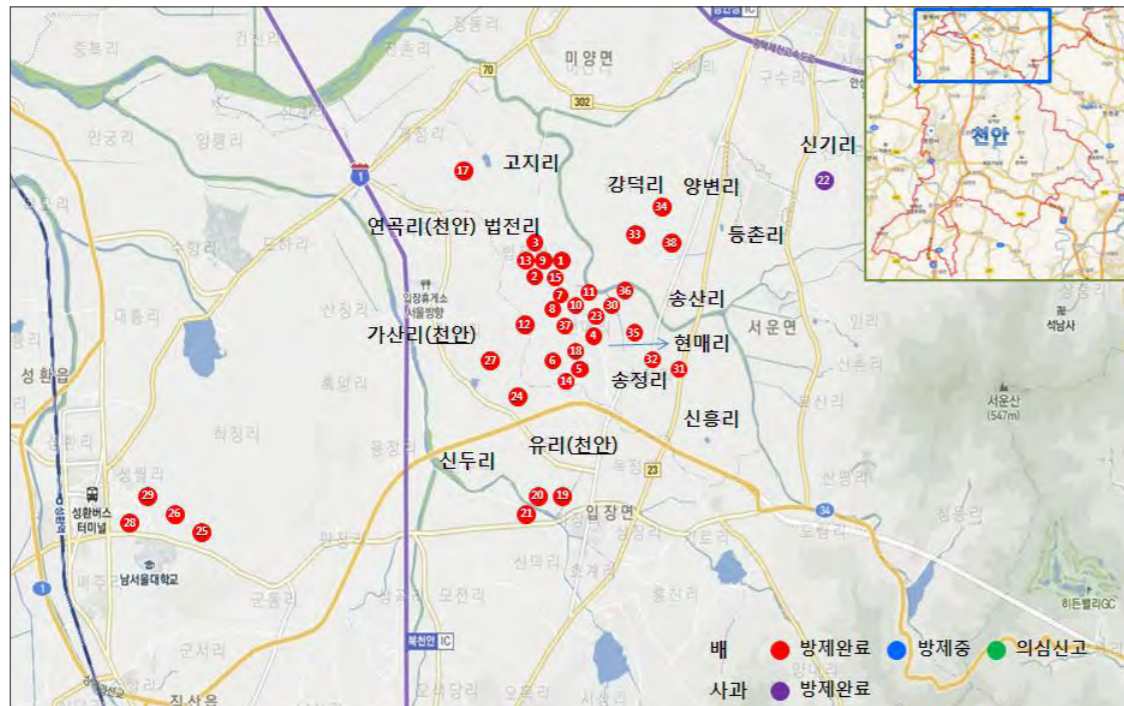
행정비용 및 방제비용 절감

'15년 5월 안성시 서운면 및 천안시 입장면 일대 38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하여 농업경영체DB를 활용, 신속하게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였다.

과수화상병 발병 후 재발 방지 대책추진 및 박멸선언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사과·배 재배농가 및 필지를 파악하였으며, 이렇게 파악된 농장정보를 기초로 방제계획을 수립,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배현황 파악 등을 위해 행정조사를 통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농업경영체 DB를 통해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조사에 따르는 행정비용과 방제가 늦어지면서 질병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추가 방제비용 등 1,2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자연재해, 동·식물 질병 등 긴급상황 발생시 적기에 신속한 대응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보조금의 비정상적 정상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에는 직불금 및 면세유 사후관리 시 인력을 기반으로 한 단속중심의 행정으로 인해 투입 대비 성과가 높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농업경영체 DB의 분석 및 위험평가를 통해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업무 방식이 인력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등록정보를 통한 보조금 등의 관리로 1개의 필지에 중복 신청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업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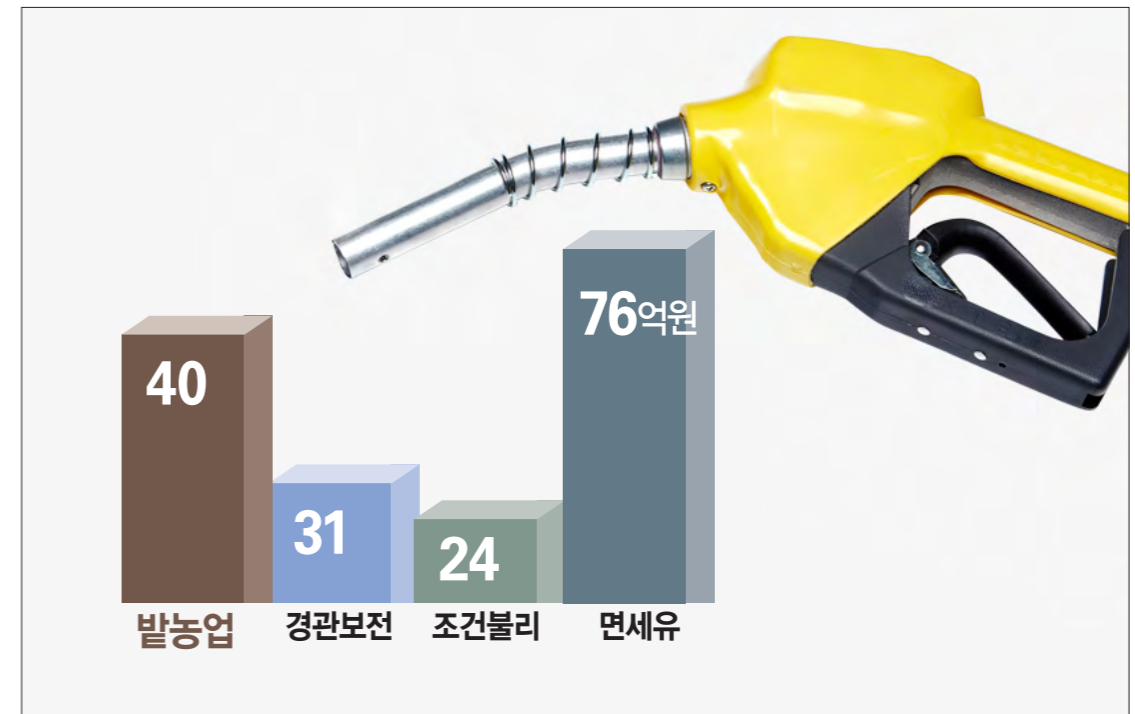
그 결과 '14년기준 발농업직불 등 직불금 부당수령액 95억원, 면세유 부정 공급액 76억원을 적발하는 등 보조금의 누수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①-2 | 경영체 DB로 보조금 이력관리 농가지원 보조금이력 경영체 DB로 관리 중복지원 · 부적격자 지원 사전 차단

### 효과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



②-3 | 농업경영체 맞춤형 사업지원

# 내게 맞는 농림사업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 제공

## 효과

사업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의 제고

국민·농업인의 농림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지자체 공무원의 농업인 사업안내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개인이 직접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귀농을 준비하는 국민은 앞으로의 영농계획을 입력하여 지원 가능한 농림사업에 대한 확인이 가능, 계획적인 귀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농업인은 자신의 경영체DB에 등록된 농업경영 현황을 기준으로 수혜 받을 있는 농림사업을 안내받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도 관내 농업인의 경영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 안내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전화·방문, 담당자의 상담 시간절감 등 연간 약 279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농업인 등 126억원, 공무원 153억원).

종이서류(확인서, 증명서) 위주의 확인으로 농업인이 직접 제출하였던 증명서류를 시스템을 통한 정보연계 및 정부민원포털 등을 통한 실시간 증명으로 농업인과 행정기관의 편의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인 확인이 필요한 건강·연금보험, 법인세 감면, 맞벌이 부부 증명, 농기자재 영세율 구매, 농협조합원 가입 등 각종 사업에서 농업인이 별도의 확인서류 제출없이 농업경영체 DB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증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70만여명(연금 34만, 건강 36만)의 농업인 편의 증진으로 43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및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행정비용 등 업무 효율성 향상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현행 종이 서류(확인서, 증명서) 위주의 확인이 아닌 정보 연계, 정부민원포털 등을 이용한 확인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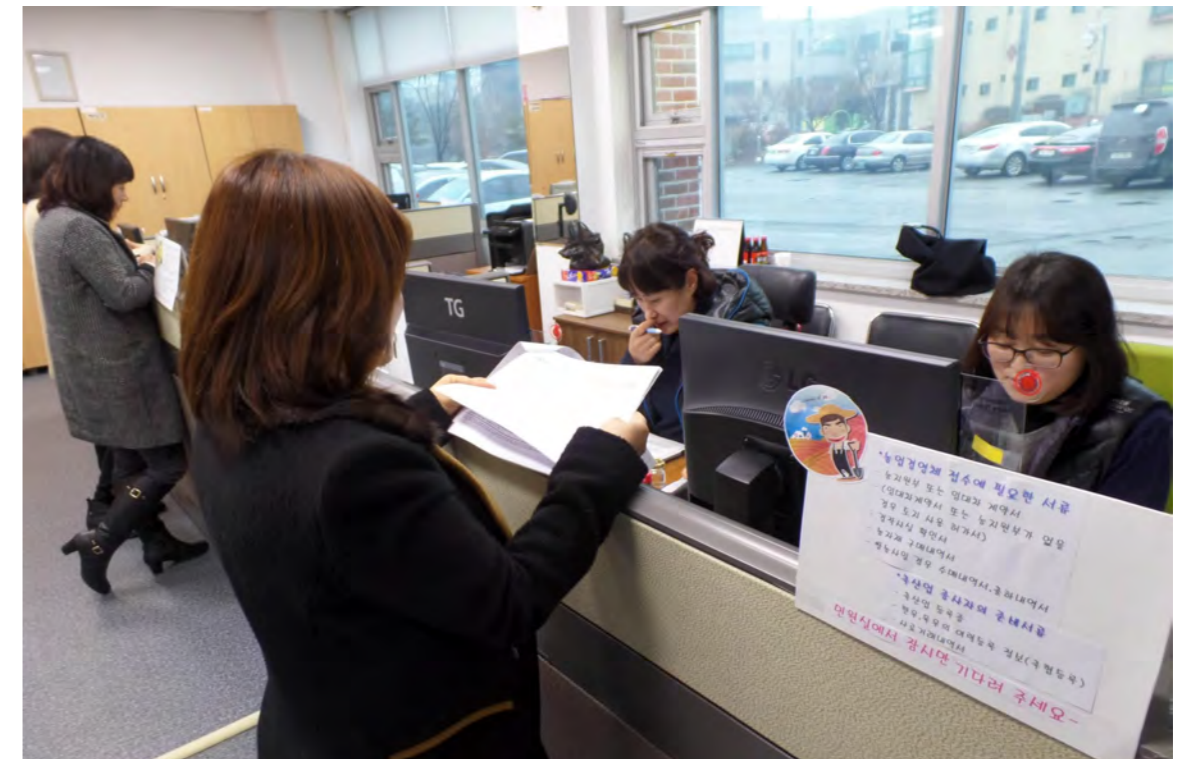
②-4 | 농업인 증명 종이서류 폐지

# 건강 · 연금보험료 등 지원대상 농업인 종이서류 확인없이 경영체 DB로 확인

## 효과

농업인 편의 향상

업무효율화 및 행정비용 절감



### 농업경영체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

**농업경영체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란?**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어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디에 문의·신청해야 할지 개략적인 안내를 해드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면 경영규모, 연령 등 현 상태에 맞도록 맞춤형 사업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NTS, 국세청 등 19개 정부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

### 서비스 개요

**농업인** : 현재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은 무엇이? 특정 농림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농업지원사업은 받는 사람이 받고, 장차 받아야 할 농업인은 방법을 모르고)

지자체공무원 및 시흥기관에서 전체사업에 대한 안내 및 수혜가능여부 확인을 지원하기에는 한계

**가득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농업인에게 농림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맞춤형 서비스 사업안내지원** : 농업인들이 직접 수혜가능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주요사업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수혜자격검증 자동화 및 확인**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의 사업수혜확대 및 담당자 업무효율성 제고

**수혜가능 여부안내** : 본인인증 > 현황조회 > 희망사업선택 > 결과 확인

- 농업경영체를 등록된 농업인 대상
-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농업경영체 대상 서비스
- 경영현황 및 본인 수혜이력현황조회
- 기준경작분야 및 신규관심분야의 수혜 가능 사업 및 수혜불가사유 확인

**자가진단 서비스** : 희망사업 분야선택 > 자가검증 결과확인

- 농업인, 예비 귀농인 등 전국민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농업인 대상 서비스
- 질의응답을 통해 희망사업 수혜자격 확인 (경영체의 경우, 수혜가능여부를 추가 확인 가능)

4-5 | 스마트팜 맵을 활용한 농정집행

# 항공 · 위성 영상으로 스마트 팜 맵 제작, 현장에 밀착된 스마트 농정 추진

## 효과

농업보조금 비정상의 정상화 조기달성

현장 반영 정책결정 지원

정부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항공·위성영상으로 전국 농경지를 전자지도화한 '스마트 팜 맵'을 구축하여 필지별로 경영체 DB, 직불제 이행점검 정보 등 각종행정자료 및 통계를 연계하여 현장과 밀착한 스마트농정 추진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직불제 확대 및 이행점검 일원화에 따라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 하고, 이행점검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 팜 맵을 활용하여 2015년에 밭작물·쌀·조건불리 등 보조금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단순기준 및 무작위 추출에 의존하고 있는 직불제 이행점검 대상농가 선정 방식을 스마트 팜 맵을 활용한 공간분석기반 표본추출 체계로 전환하고, 부당신청 의심필지를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등 현장점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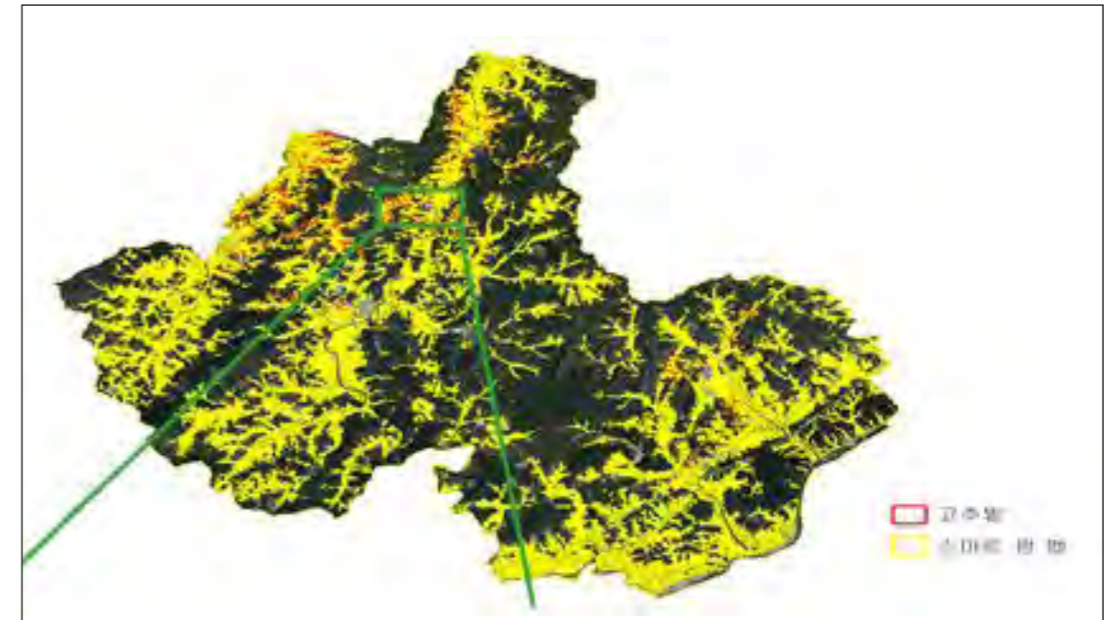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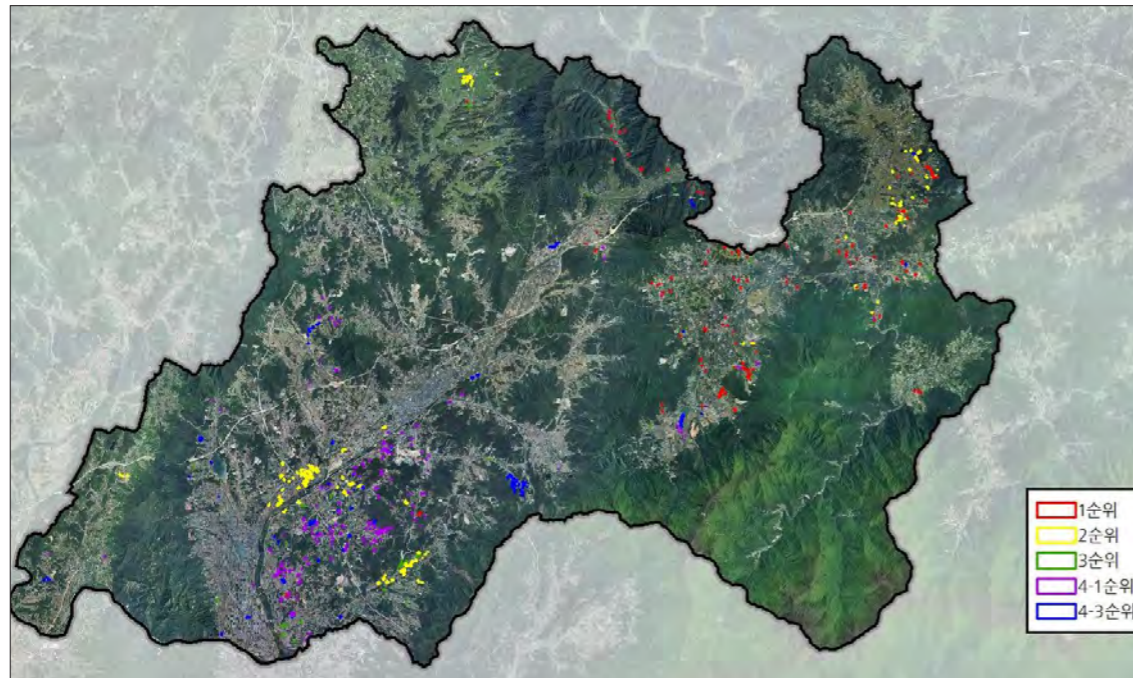
또한, '스마트 팜 맵'은 공간정보에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데이터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산물의 품목별로 집계된 데이터를 경작 농경지와

각각 연계하여 다양한 주제도를 제작·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농정에 활용할 경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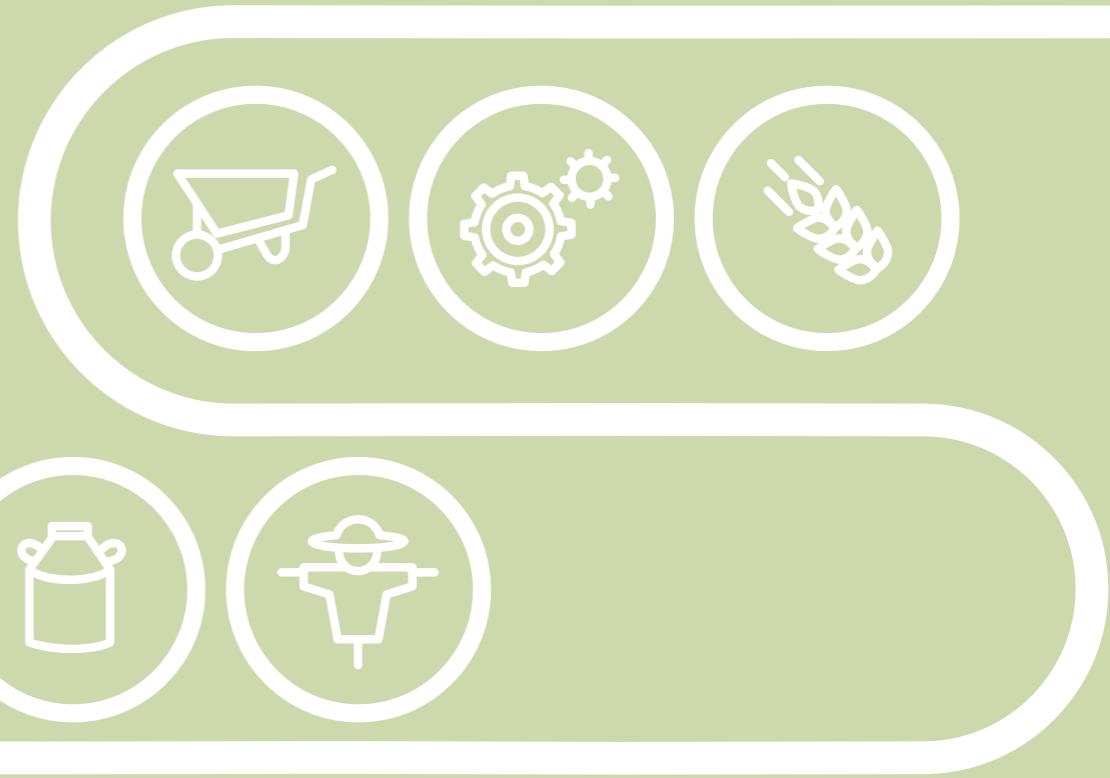
사례를 들면, 농업경영체 정보 중 고추재배 행정자료를 '스마트 팜 맵'에 연계하여 제작된 주제도를 통해 고추재배 분포현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고추밭에 해당하는 필지를 선택하면 관련 행정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경영체 정보, 재해보험정보(가입, 사고접수, 보험금지급

등), 기상정보 등을 융합하여 재해와 보험에 대한 현장밀착형 통합관리 방안으로 활용하면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고, 상습 재해지역의 조기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의 가장 기초자료인 농경지 전자지도를 활용하여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 하고, 직불제·경영체등록 등 현장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팜 맵'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판독속성	밭
지 번	**면 **리 *****
경영주성명	이**
연 령	**세
영농경력	40년
고추밭면적	2,486㎡
판매금액(13년)	* , ***만원



### 3 민·관 협업을 통한 일 잘하는 농정 추진 사례



- 3-1 농촌형 교통 서비스
- 3-2 모바일로 제공되는 농촌관광정보
- 3-3 고령농 건강개선 프로그램 운영
- 3-4 어린이의 마음에 농심을 심다
- 3-5 SNS를 활용한 농업인 기술 컨설팅
- 3-6 농업인 행복버스

③-1 | 농촌형 교통 서비스

# 접근성 취약한 농촌 교통서비스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 지자체 머리를 맞대 해결

## 효과

- 대중교통 취약 농촌주민의 교통 복지 체감도 향상
- 타 부처, 지자체, 농촌지역 주민과 협업 체계 구축
- 지자체 자체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확산 효과

### 읍내 병원 등 의료, 복지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한 농촌형 교통모델 서비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정○○(63세, 여)씨는 남편(66세)과 함께 시어머니(84세)를 모시고 산다. 차가 없자보니 고향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읍내 병원 등에 다녀오는 일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읍내까지 택시타고 다녀오는데 왕복 2만원, 농가에 적지 않은 돈이다. 사는 곳은 의성읍 북쪽으로 5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읍내 안쪽 마을로 국도변의 버스정류장에서 한참 떨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다.

이런 정씨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행복택시가 들어오면서 읍내까지 농촌버스요금(왕복 2,4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성군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되어, '14년 8월부터 농어촌버스 승강장에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군내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한 달에 6~8회 버스요금만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정씨는 마을로 들어오는 행복택시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약속된 시간에 마을 안까지 택시가 들어오니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목욕탕·약국·시장 등에 다니기가 편해졌다고 한다.

### 교통취약 농촌지역 주민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전국 행정리 36천개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3.4천개(9%)이고, 이중 하루 10회 미만 운행지역이 16천개 행정리(43%)에 이른다. 노선 당 버스 보유대수는 2011년 기준 군지역은 0.5대(1,796대/3,794노선), 시지역은 4.4대(32,926대/7,499노선)로 인구가 많은 시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지역의 버스노선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대중교통 미운행 농촌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특성에 딱 맞는 농촌형 교통서비스가 없을까 고민 끝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시작했다. 시내버스같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하거나 소형차량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용하는 사람 수가 많지 않은 농촌에서는

정기적으로 드물게 오가는 시내버스보다는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나 마을버스가 더 편리하다. 택시나 마을버스를 멀리 떨어진 정류장까지 건지 않고 집 앞이나 마을회관 앞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르신이 많은 농촌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21개 사업('14년 13개, '15년 8개)을 선정·지원하여 416개 마을 56,424명이 수혜를 받았다. 2015년 7~12월에 실시('14~'15년 지원 사업대상)한 모니터링 결과, 대중교통 만족도(시행전 40.2점→시행후 89.1점)와 외출횟수(시행전 4.3회→시행후 8.7회)가 2배 이상 향상·증가 되고, 버스 대기시간(시행전 17.1분→시행후 5.1분)과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시행전 22.1분→시행후 5.6분)은 각각 70%, 75%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수치상의 증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뜻깊다.

### 맞춤형 교통서비스, 국토교통부 등과 한 뜻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및 마을 주민회 등이 한뜻으로 뭉쳐 서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이 도입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농어촌희망재단은 사업 공모와 대상 선정을 하였으며, 사업평가 모니터링체 선정과 지원예산을 관리하였다. 지자체는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협의, 그리고 교통서비스 안전관리 등 행정적 지원을, 마을 주민회 등은 차량운행계획 수립 및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회의, 토론회, 설명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 더 많은 농촌주민이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16년에도 신규 모델을 선정하여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여러 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지자체 자체 추진 시·군 수 : ('14) 9개 → ('15.12) 70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교통모델의 조기 확산을 위해 '14년도에 발굴·지원한 사업의 사례를 담은 '사례집'과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 및 사후관리까지의 안내역할을 할 '가이드북'을 제작·배포('15.4월)하여 지자체가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을 위한 장애물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교통취약 지역의 더 많은 농촌주민이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형 교통모델"의 조기 확산을 위해 이해와 상생의 협력을 바탕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③-2 | 모바일로 제공되는 농촌관광정보

# 농촌체험 관광정보

##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에 탑재 정보이용 편의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주요 포털업체인 (주)네이버와 정보통신(IT) 기반 농업·농촌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서비스 및 네이버 지도 등을 활용하여 농촌체험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맛집, 자연휴양림, 찾아가는 양조장, 낙농체험목장 등 도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민들이 아이들 체험 학습의 장 등으로 농촌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많은 국민들이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와 협업하여,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으뜸촌\*) 23개소를 대상으로 통합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로써, '15년 7.16일 부터 으뜸촌과 관련한 이용정보를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modoo)에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으뜸촌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농식품부 고시 2015-29호) 평가 4개부문(경관 및 서비스,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우수한 마을

또한, 네이버 지도에 으뜸촌 테마지도를 구축(15.9.17)하여 으뜸촌과 관련한 위치 및 연락처와 교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으뜸촌에 대한 정보 이용과 관련한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후에도 더 많은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도시민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산림청(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과 협업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대상 농촌관광자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효과

민간과 협업, 도시민의 농촌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좋은 먹거리와 바른 식습관을 통한 건강의 유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이자 국민경제에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산력의 원동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교육과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현장 곳곳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식생활 관련 작은 사업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성장과 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 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촌지역을 들여다보면 고령화로 인해 노인독거가구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고, 시장이 멀고 상점이 부족하여 절임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고령자 중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대로 불균형 식단으로 인한 비만의 경우 농촌지역 노인 비만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도시지역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고령자의 건강과 영양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기업, 단체·협회등과 협업하여 식생활교육은 물론 운동프로그램, 농식품 제공 및 조리지원 등을 종합한 '농촌 고령자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단구성과 식생활교육, 조리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보건소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민간기업·단체·협회는 농촌노인의 섭취가 부족한 단백질류 중심의 식품지원을 함으로써 관계기관, 기업체, 단체·협회 등과의 협업의 모범적 사례로 그 취지와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촌 고령농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 각 기관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본 사업은 협업을 통한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농촌지역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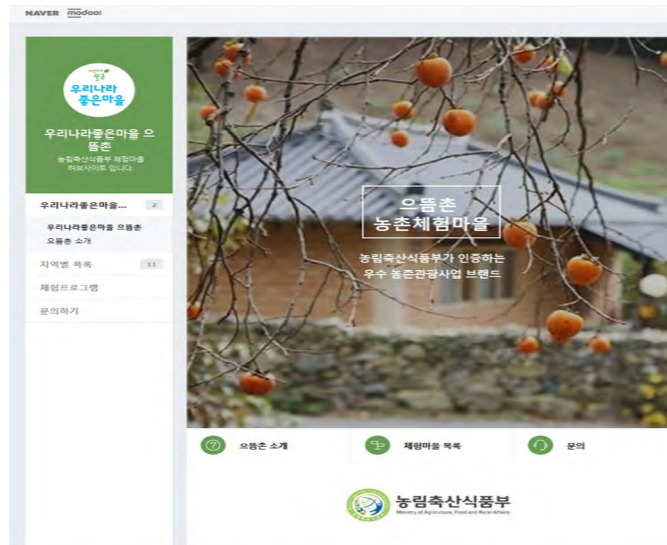
## ③-3 | 고령농 건강개선 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관계기관 · 민간기업이 힘모아 고령농 건강개선 영양불균형 개선

### 효과

농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효과

노인성 질환, 질병 위험의 감소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  
등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도모

장기적인 식생활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의료비 사용 감소 효과



3-4 | 어린이의 마음에 농심을 심다

# 도심공터 활용한 어린이 텃밭학교 농업·농촌의 소중함이 꿈틀 꿈틀

## 10㎡ 텃밭에서 일궈낸 의미 있는 변화 : 공동체 회복, 인성함양 및 식생활 개선 효과까지

서울 노랑진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송○○(10세, 남)군은 40대 부모님과 70대의 할머니,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생인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대부분의 같은 또래 친구들처럼 공부에 대한 부담도 많고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컴퓨터게임을 즐겨한다. 맛별이를 하는 부모님과도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편이다. 고등학교 교사인 엄마, 무역회사일로 해외출장이 잦은 아빠도 직장일로 바쁘기 때문이다.

올해 이 어린이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어린이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장으로 부임한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전체 56명의 참가어린이가 개개인이 가족과 함께 12㎡(약 3.6평)의 텃밭을 가꾸는 곳이다.

입학식이자 첫 등교일인 5월 2일, 할머니·엄마·아빠·동생과 같이 돌투성이 텃밭의 돌을 골라내면서 텃밭이름을 팜방울로 지었다. “온몸에 팜이 맺힐 때까지 정성을 다해 텃밭을 가꾼다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그날 이후 텃밭에서 채소가 잘 자라는지? 무당벌레와 배추나비도 찾아왔는지? 수확한 채소로 어떤 요리를 만들지?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11. 7일까지 20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진행된 체험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참가했다. 이 어린이는 기간중 “무엇보다도 팜의 소중함에 대해 느끼고 가족·친구·선생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즐거움을 체험했다”라고 한다.

우리의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춰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꿈틀 어린이 텃밭 학교’, 관계부처,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래세대이자 가치관 정립시기인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춰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땅이 살아서 꿈틀대는 생태텃밭,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꿈의 틀”을 키워가는 텃밭을 모토로 기획한 것이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과 지자체 등 기관·단체들의 지혜와 노하우를 한자리에

모으는 한편, 교양·정보·예능분야의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도시농업 시민운동을 확산하고 있는 (사)도시농업포럼에서 텃밭체험 노하우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에서 요리실습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와 부모·교사간 소통 강화를 위해 (사)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가 소통기록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텃밭학교 학생을 모집하였고, 과천시 보건소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참여 학생과 가족 간의 변화분석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텃밭활동이 어린이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분석·발굴하였다.

### 10㎡ 텃밭에서 일궈낸 의미 있는 수확

주목할 만한 것은, 꿈틀텃밭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56명의 초등학교생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참여가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순기능들이 관찰되었다.

- (관계개선) 어린이와 부모,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증진(5점 만점, 3.47점→3.64) 되었고, 어린이는 텃밭활동 기간중 이웃과의 교류가 증가함(53.2%→63.6)
- (인식개선) 어린이들이 작성한 텃밭학교 사례집을 통해, 체험 어린이들의 농업에 대한 친근감·호기심·흥미 증가, 노동의 가치 인식증가, 채소에 대한 거부감 해소 등의 효과가 관찰됨
- (생활변화) 단기간에 측정하기 어려웠지만 텃밭체험 전후에 일상생활에서의 만보기 수치를 분석해 본 결과 신체활동이 증가되는 경향이 확인됨(텃밭체험전 11.7보/분 →텃밭체험중 13.5)
-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결과, 텃밭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긍정적으로 변화(5점 만점 기준, 3.83점→3.97)하다가 텃밭활동이 없는 여름방학기간 중에는 부메랑효과가 관찰됨(3.97점→3.88)
- (학교폭력) 어린이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텃밭활동 기간 중에 감소함(5회→3)

한가족당 3평 남짓한 작은 텃밭에서 커다란 의미를 수확한 것이다.

###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4년 말 기준 파악된 바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설치한 “교육형 텃밭”이 전국에 3,5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한 작물관찰 활동 위주여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운영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고, 2016년부터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이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도시농업이 밑거름이 되도록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학교텃밭’ 모델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진흥청과 함께 학교텃밭에 적합한 교재, 교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한층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인성함양, 농업·농촌의 가치확산 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효과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포함한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농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④-5 | SNS를 활용한 농업인 기술 컨설팅

# 영농현장 기술애로 손안의 SNS로 누구나 쉽게 전문가 도움 받아

## 효과

영농 현장애로를 SNS로 실시간 해결

우수사례 공유전파로 농가에 실질적 도움 제공

상시 접속 가능한 효과적인 컨설팅 매체 확보



SNS로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농식품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농촌에서 한우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59세, 남)씨는 99년부터 17년간 한우를 사육하면서 한우 비육 방법, 사료 종류, 압소 분만 후 관리, 송아지 사육법 등 애로사항이 한 둘이 아니었다. 초기에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며 축산 선도 농가를 방문하고, 수의사에게 물어보는 등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곤 했다. 한우 사육 경력이 오래 되긴 했어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다반사, 그럴 때마다 혼자만의 노하우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는 간단하게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 사업 덕분이다. 네이버 밴드의 「한우 기술공감」 채널에 현장 애로사항과 사진을 게시하면 교수, 지자체, 농진청 연구자 등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컨설팅단과 선도농 등 밴드 회원들이 바로바로 댓글로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정보가 SNS로 떠오. 오늘 아침에도 송아지 분만 후 자궁세척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한 시간도 안돼서 20개가 좌르륵 떴어요. 전국的高手들이 ‘어떻게 세척하면 좋다’, ‘세척 후 무슨 약을 쓰면 좋다’ 이런 식으로요. 수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의사 못지않게 현장경험을 가진 고수들이 순식간에 댓글을 올리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맞춤형 컨설팅

그동안 농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선도농에게 묻거나 농협 등에 문의해서도 인력부족 등으로 바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생기는 일이 농가에 종종 발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보화시대에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SNS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밴드(네이버)에

글과 사진만 올리면 즉시 컨설팅이 가능한 체계가 갖추어 졌다. 컨설팅 사업은 현재 품목별로 23개 밴드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밴드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직접 애로사항을 올리면 품목별로 교수, 지자체, 농진청 연구자 등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컨설팅단과 선도농 등 밴드 회원들이 신속하게 댓글로 해결방안이나 자문을 올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혼자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은 총 회원수 13,878명, 컨설팅수 6,691건(15.12월 기준) 등 자발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컨설팅 만족도 조사(15.11월) 결과 신속성 52%, 전문성 52%, 유익성 74%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SNS 컨설팅 사업이 기존의 컨설팅과는 다르게 신속·정확성과 더불어 유익함까지 갖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SNS 컨설팅,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과 협력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종자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및 민간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기술 SNS 컨설팅을 주관하며 계획 수립 및 품목별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밴드장을 선정했으며, 농촌진흥청은 밴드를 운영하고, 기술컨설팅, 작황 및 병해충 발생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밴드 운영 관리 및 컨설팅 우수사례를 홍보하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정 홍보, 언론 동향 자료 등을 제공한다. 국립종자원(신종품 등록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품목별 관측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수매, 비축, 유통, 수출 정보), 농협(계액재배) 등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농업 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한다. 민간전문가도 밴드 운영 및 기술컨설팅을 통해 SNS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회의 등을 거쳐 소통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무엇보다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SNS 컨설팅 사업이 발전했다.

### 더 많은 농업인들이 실시간 컨설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본격 추진한 20개 품목 밴드와 11월 신규 3개 밴드를 합하여 총 23개 밴드를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정책적 중요도, 현장수요, 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0개 밴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15년 말에 계획중인 우수밴드 경진대회를 통해 밴드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농촌진흥청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실시간으로 SNS 컨설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해와 상생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등과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⑥-6 | 농업인 행복버스

# 의사, 변호사, 예술인이 동행하여 농촌마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농업인 행복버스 '부릉'

**“농업인 행복버스 덕분에 살았어요. 행복버스가 내겐 생명의 은인입니다.”**

면사무소에서 4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A씨. 2012년 허리디스크로 큰 수술을 받았으나, 몇 달 전부터 수술한 부위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을 가려면 차로 수십분을 나가야 하는데다 일을 미뤄두고 병원에 갈 만한 여유도 없었다. 진통제를 삼키며 견디던 중 마을에 ‘농업인 행복버스’라는 것이 찾아 왔다. 무료로 건강검진도 해주고 법률상담이나 문화예술공연도 지원하고, 고장난 가전제품, 차량수리도 해주는 프로그램이란다. 마침 잘됐다 싶어 건강검진을 받아본 결과, 수술부위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으니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한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날 뻔 했다는 의사의 말에 미루던 병원행을 서둘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차량정비를 해준다가에 재산목록 1호인 트럭도 무료차량정비를 받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차량에서 아주 심각한 결함을 발견한 것이다. 그대로 계속 운전했다간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농업인 행복버스 덕분에 목숨을 두 번 건졌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농촌 취약지역 농업인에 의료복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농촌은 지역적 특성상 넓은 지역에 인구가 분산되어 거주하고, 의료복지 인프라도 주로 군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산간벽지 마을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자가용을 보유하지 못한 고령층이 많아 의료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전국 행정리 36천개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3.4천개(9%)이고, 이중 하루 10회 미만 운행지역이 16천개 행정리(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2010년 기준으로 독거노인비율은 도시 4.5%, 농촌 13.3%로 3배 수준이며, 2011년 기준 빈곤율은 도시 1.7%, 농촌 7.1%로 4배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촌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복지·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고민한 끝에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도서·산간벽지의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의료·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재능기부형식으로 의료지원, 법률지원, 장수사진 촬영 및 사진제공,가전제품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One-stop) 제공토록 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력**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및 서비스 제공기관·단체 등이 한뜻으로 뭉쳐 서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행복버스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파악하여 지원 대상지역을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소비자보호원은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 업체(현대, 삼성 등)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은 행복버스 의료지원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동식 의료장비 및 약품 구비 등 체계를 갖추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해당 지역농협에서는 수혜자들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기실 마련, 다과준비, 식사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 설계단계부터 서비스 제공기관과 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과 참여기관의 열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 많은 농촌 취약계층이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4년~’15년까지 102회를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기존 50회 수준으로 운영해 온 행복버스를 75회 수준으로 늘리고, 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지원내용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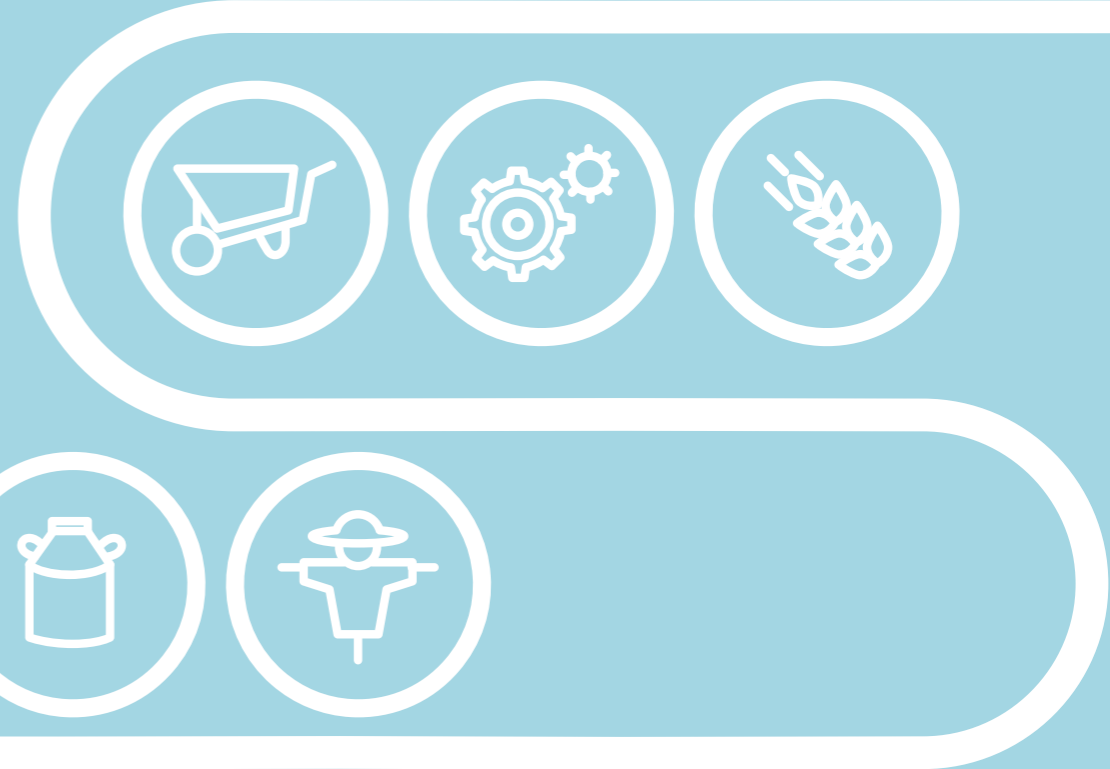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효과**

민간 부문과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산간벽지 농촌주민의 체감 복지 향상





## 4 규제 개선에 의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제 활동 촉진 사례



- 4-1 용인 농도원 유제품 가공공장 허가
- 4-2 농어촌 민박 조식제공 허용
- 4-3 곤충식품원료 규제개선
- 4-4 김포파주인삼농협의 맥주산업

### 4-1 | 용인 농도원 유제품 가공공장 허가 진입도로 확보의무 손톱 밑 가시규제 해소하니 가공공장 건립 '쑈~욱'

경기도 용인시의 농도원 목장은 원유 생산 및 치즈만들기 체험을 실시하는 업체로,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하여 중국·동남아 등 국내외 방문객이 증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유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설치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운영지침'상 폭 4m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어,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1억원 정도의 비용 소요가 예상되어 시설 설치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규제신문고 등에 건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토교통부에 규제완화 요청 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한 회의 진행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행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공감하였다.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합의를 이끌어내어 부지면적 2천㎡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가공·유통·판매시설 등은 도로기준(진입도로 폭 4m이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금번 규제개혁으로 농도원 목장은 유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완공 시 아이스크림, 치즈 등 제품 생산을 통하여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효과

투자확대 : 6차산업 추진 경영체 (18천개) 건축물 신증축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비용 절감

농산물가공·체험 등 6차산업 활성화

### 4-2 | 농어촌 민박 조식제공 허용 농어촌 민박, 음식점 신고없이도 조식제공가능 이용객 불편 해소

몇 해전 귀농하여 '15년 3월부터 전북 김제에서 '끝없는 사랑민박'을 운영하던 이○○씨는 민박을 찾아온 손님들께 시골인심을 담아 아침식사를 대접하였는데 식당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행 제도상 식사 제공을 위해서는 음식점 신고가 필요하지만, 농촌민박이 주로 소재하고 있는 농림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 신고가 불가하여 합법적으로 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의 조식제공 허용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법을 개정하면서 '15년 7월부터는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도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손님들을 위하여 계절에 맞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으며, 농촌여행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색다른 별미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에 차 있다. 농촌민박 이용자에 대한 편의 도모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 효과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불편해소

농어촌민박 운영자 소득 증대

농촌관광활성화로 농촌 활력 창출



4-3 | 곤충식품원료 규제개선

# 작은 곤충 규제개혁하니 곤충식품벤처 창업, 일자리 ↑

'14.9월 국내 최초로 곤충과자를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이더블 버그(ediblebug)'라는 회사가 탄생하였고, '15.2월에는 이를 판매하는 곤충카페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문을 열었다.

이더블버그는 1년여에 걸쳐 에너지바 3가지, 쿠키 5가지, 양갱 1가지 등의 곤충과자와 메뚜기와 대추 등으로 만든 한방메뚜기차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최근 식용곤충이 많이 알려지면서 건강한 간식을 선호하는 30~40대 주부들이 주로 찾고 있으며, 6개월 만에 판매량이 10배정도 늘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곤충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가능성이 높고 농가소득 증대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곤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데 걸림돌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14년에는 곤충의 식품원료등록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과 긴밀히 협업하였다. 농촌진흥청은 곤충의 식품 소재화를 위한 과학적 검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 식품원료의 승인을 담당했다. 그 결과 '14년에는 고소에(갈색거저리 유충), 꽃벥이(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2종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 받았으며, '15년에는 장수풍뎅이 유충, 귀뚜라미까지 추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선과 함께 곤충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15.7월에는 곤충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곤충카페, 곤충요리전문점 등이 청년들의 주도로 창업되고 호텔과 대학, 특성화고 요리학과 등에서 곤충요리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 효과

- 미래 인류 단백질 공급원
- 식용 곤충을 활용한 창업사례
- 식용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장관은 취임 직후 김포파주인삼농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경우 제조장 밖에서는 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기획재정부 및 국제청과의 협업을 통해 하우스맥주의 제조장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하우스 맥주의 외부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14.4월 외부 판매가 허용되면서 김포파주인삼농협은 인삼쌀맥주를 외부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우스맥주 외부 판매가 허용되면서 김포파주인삼농협의 인삼쌀맥주 판매량은 '15.8월말에 이미 '14년보다 세배 이상 증가하였고, 서울로 판매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도 달리는 상황이다. 김포파주인삼농협은 올 연말까지 추가 생산시설을 갖춰 하루 생산규모를 5천ℓ에서 2만2천ℓ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작다고 할 수 있는 하우스맥주 규제를 개선하였더니 우리 인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인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 가공제품의 매출액이 늘어나 6차 산업이 활성화되며, 이는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어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보인 사례라 할 수 있다.

4-4 | 김포파주인삼농협의 맥주산업

# 하우스맥주 판매 규제 개선하니 인삼쌀맥주 매출 2배이상 '쑹~욱'

## 효과

- 인삼의 새로운 수요 창출
- 인삼 가공 등 6차산업화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





## 5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사례



5-1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5-2 농식품정보누리

5-3 강원도 농산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6-1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가까이에서 정보주는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상담과 정착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귀농귀촌종합센터는 15년 한해만 16,813명에게 귀농귀촌 종합상담을 진행하였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귀농교육, 지원정책, 농지·주택, 임업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반기 180개 시군에 대한 지역맞춤상담도 지원하였다.

더불어 찾아가는 귀농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취창업박람회 등 16차례 출장상담을 통해 957명을 상담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귀농상담과 함께 직장 은퇴자, 전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야간으로 '귀농귀촌아카데미교육', '소그룹강의', '지역강좌'를 운영하여 2,655명에게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양질의 귀농귀촌정보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젊은 귀농인, 취창업농, 후계농을 위해 종합센터의 상담분야를 확대하고 2030세대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젊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효과

수도권 도시민 접근성 향상으로  
종합센터 이용 증가

1:1 개인상담 및  
지역맞춤정보 제공

상담과 교육 동시 제공에 따른  
만족도 향상



6-2 | 농식품정보누리

# 한번의 클릭으로 식생활 정보를 한눈에 전하는 「농식품정보누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농식품 안전, 소비·식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14년부터 기존의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으로 확대 구축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농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소비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6개 기관 21개 사이트와 농식품정보누리를 연계하여 농식품 소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련 기관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식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정보누리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한번 입력하면 소비·식생활, 가격, 안전, 조리법, 영양 등 소비자가 생활속에서 필요로 하는 농식품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 취재단 운영, 서비스 수요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유익한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농식품정보누리 접속인원이 '12년 168천명에서 '14년 378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농식품정보누리 모바일 웹'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부터 '2015년 콘텐츠제공 서비스 모바일 부문 콘텐츠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정부3.0 우수사례로 주요 일간지에 소개되는

등 농식품정보누리가 정부가 제공하는 농식품 대표서비스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농식품정보누리는 소비자 중심의 건전하고 건강한 농식품 소비자 육성은 물론 다양한 소비, 식생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소비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정부3.0의 가치를 적극 실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효과

농식품 관련 정보 연계·통합 제공으로  
정보 검색·활용 편의 증진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보 제공



### 6-3 | 강원도 농산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농산물유통·기상 공공정보 융복합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수급안정지원

### 효과

대용량 도매시장 경락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수급예측 지원

유통경로 다변화와 출하조절 능력 확보  
로 생산 농가 소득 증대

최근 국내 농업유통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농가는 조직화되고 있고, 농산물 유통을 주 업(業)으로 하는 산지유통센터(APC)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품목, 품종의 다양성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강원도 농산물의 상당량을 취급하는 강원연합사업단\* 역시 상기 변화에 직면한 상황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통해 시장대응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산재된 정보를 하나의 그릇에 담아 농가·농협 관리 및 출하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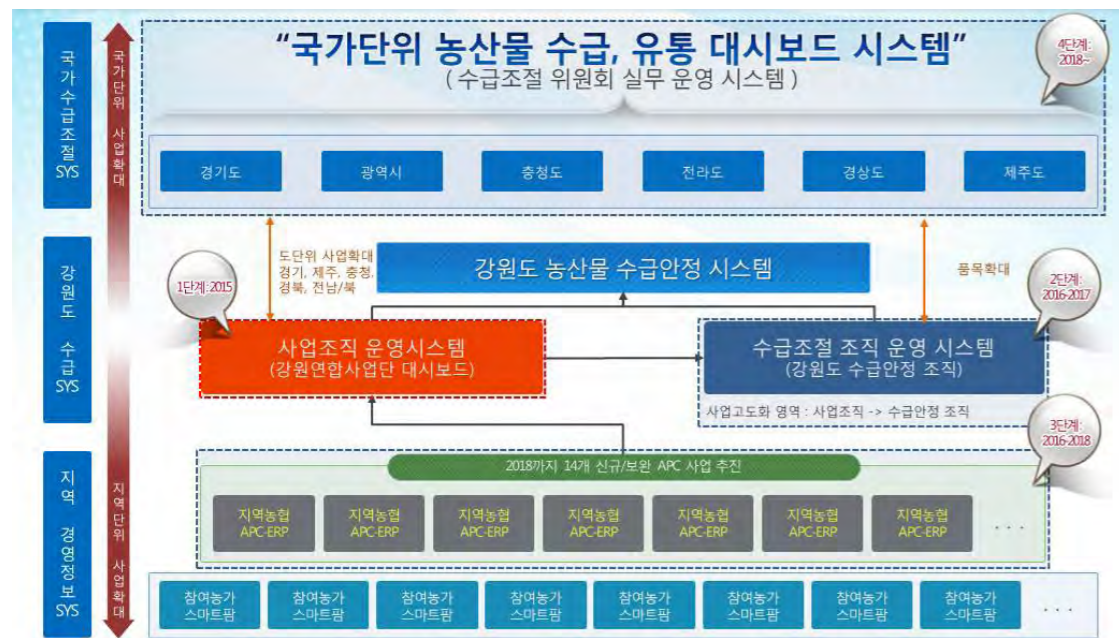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연합사업단은 배추, 토마토 품목을 대상으로 정보 유통정보 분석, 수급조절, 온라인판매를 위한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분산된 생산·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 및 분석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생산유통 정보를 활용한 수급 및 출하조절 체계 구축
- 유통경로 다변화 및 출하조절 능력 확보를 이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특히, 생산·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방하고 있는 도매시장 경락가격과 강원연합사업단의 내부 유통정보, 기상정보 등을 융·복합한 통합분석DB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농산물 유통정보 확보체계를 수립했다.


배추, 토마토 품목에 대한 전국단위 실시간 유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의 BI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의 출하시기 결정과 수급 예측을 실현할 수 있다. 향후 원천데이터 수준의 농산물 경락가격과 수입농산물 정보 등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더욱 정밀한 의사결정지원 및 수급예측 시스템으로 고도화 할 계획이다.

\* 강원연합사업단 : 강원도 원예작목 특징을 기반으로 산지를 조직화하고, 물량을 규모화해 산지 경쟁력을 높이고자 2001년 농협중앙회가 주도하는 전국 최초의 연합사업단 조직





## 10 정부3.0에 기초한 농식품 분야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발행일	2016년 1월
발행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편집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임정빈
감수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집필자	I · II · IV장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성과팀장 박종민 III 장 · 부록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성과팀장 박종민, 사무관 강희중 · 정문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이행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정창남
기획	 농림축산식품부

디자인 · 제작 다솜기획  
Tel : 044-868-4965